

특집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마을과 경제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사례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좌담회 :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이슈 새로운 희망적 대안, 협동조합

메르스와 위험사회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iCOOP 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공정경 김기태 김대훈 김현대 김활신 이대중

 편집위원장
 박종현

 편집간사
 신효진

편집디자인김우식(꿈꾸는마을)펴낸날2015년 9월 20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4호

전 화 02)2060-1373/9 구 독 1권 3,0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간도서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길갑이 인간적인 시장을 꿈꾸는 이유	박종현 (편집위원장)		
특집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마을과 경제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김기태((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12 25 37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례자연드림파크 사례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49	
전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63	
좌담회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안진걸, 김남균, 선민, 위성남	75	
이슈			
새로운 희망적 대안, 협동조합 메르스와 위험사회	박계동(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 임종한(인하대학교교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회장)	98 107	
돌발논문			
하피브릿지의 새로운 보상제도 만들기	문성환(해피브릿지협동조합 이사)	121	
아이쿱생협 만평	박해성(만화가)	132	
기획 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⑩ 에너지 자립의 꿈, 함께 꾸면 현실이 돼요!	황세원(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사회적경제 석사	과정)133	
서평 『이런 협동조합이 성공한다』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강양구(〈프레시안〉 기자)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43 148	
협동조합 소식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53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77



인간적인 시장을 꿈꾸는 이유

박종현(편집위원장)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꿈꾼다. 행복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 돈 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행복도 커진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물질적 부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 니다. 사람들은 또한 결과는 물론 과정으로부터도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자신을 흠뻑 적심으로써 몰입하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누리며,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가 결정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의 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훌륭하게 해낸다고 느끼는 등 내재적 동기가 고양될 때 행복감이 크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은 소득보다는 타인과 맺는 양질의 관계에 더 좌우되고, 자원봉사나 기부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의 만족 감이 오래 지속된다. 이때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스스로를 완성 하며 삶의 보람을 얻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인의 존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각자의 덕성과 타고난 능력을 친구와 유 익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잠재적 능력을 한껏 펼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관 심과 우정을 베풀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 그 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곧 '좋은 삶'이라거나, 행복한 인간은 좋은 인간이며 좋은 인간은 누군가의 좋은 친구와 동의어라고 말했던 것은 이러 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은 나와 타인의 상호작용에 결정적으로 좌우되지만, 나의 호의와 노력이 이러한 상호성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호의가 응 답받지 못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호의가 배신되었을 때보다 더 큰 고통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위험하고 두려운 행위이다. 이처럼 타인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행복을 각자 홀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시장을 통한 사적인 계약이다. 애덤 스미스에 의하면, 시장이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상대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각자의 필요로 인해 상품의 품질과 가격 그리고 지불 능력만을 고려하면서 익명으로 만나 거래를 성사시키고 원하는 것을 안전하게 얻어가는 공간이다. 이 입장에서 보자면, 시장 거래에서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사적인 계약에 형평과 연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개입시키는 일은 자유롭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오늘날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이 과거와 같이 경제성장 의 원동력 역할을 계속 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사람들의 안전한 행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약속이 실현되리라고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오늘날의 시장이나 영리기업들은 인간의 내재적 동기들을 고양시키고 밀도 깊은 관계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내몰아버리기 때문이다. 양질 의 인간관계를 그나마 제공하던 중요한 터전이었던 마을과 동네도 시장 논 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해체되고 있으며,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연결고리 가 끊어지면서 지역민의 경제력도 더욱 약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새로운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주민들이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력 속에서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해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지역을 재생·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들이다.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이번 호의 특집 주제로 설정한 것은 시민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펼치는 사회적경제의 이러한 노력들이좋은 일자리나 양질의 복지 서비스와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삶의 목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의 글은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이 지역사 회의 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커다란 신뢰를 주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착한 의지가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여러 측면들을 짚어주고 있다. 유창복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경제활동을 벌이 고 소득을 실현시키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과정에서 마을기업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마을기업이 주민과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 킬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풀과 양과 목초지의 비유를 들어 설득력 있게 들려준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지역민과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의 재생과 발전을 모색했던 캐나다 퀘벡의 사례를 들어 공동생산 등 주민참여형 지역발전의 다양한 모습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글은 협동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던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구례 자연드림파크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혁신적 협동조합이 지역의 재생 및 발전에 기 여할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집의 다른 꼭지들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주나 건물주가 독점하고 정작 가치를 높여 놓은 주체들은 지역에서 밀려나버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다루었다. 전은호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상인과 예술가들이 부동산투자협동조합을 설립해 해결을 모색한 뉴욕의 사례를 들려준다. 좌담회에서는 피해 당사자들인 김남균 『골목시장 생존법』 저자와 선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조직국장, 해법 모색에 힘을 보태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

대 협동사무처장과 위성남 마포구마을생태계지원단장이 자리를 함께 해 젠 트리피케이션의 실상을 진단하고 정책적 처방을 논의하였다. 임차인과 임대 인이 평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을 재정비하고, 지자체의 조례권을 강화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 도록 하며, 지역민들이 협동조합 등의 방식으로 지역의 공유자산 형성 및 운 영에 참여하는 지역자산화 전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러 해법에 많은 이 들의 관심이 모이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호의 '협동조합을 가다'와 '협동조합 소식'도 지역 문제 해결에 주력한 사회적경제 조직체들의 활동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집과 맥락을 같이한다. 황세원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생이 쓴 '협동조합을 가다'는 서울시 상도동 성대시장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해 에너지 관련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마을닷살림'과 '에너지슈퍼마켙'을 소개하고 있다. 이주희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원의 글을 통해서는 제조업 공동화로 쇠퇴를 겪다가 지역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위에 지역재생에성공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모델'을 엿볼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사회적경제를 재치있게 대비시킨 박해성 작가의만평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부탁드린다.

이슈에서는 택시협동조합의 출범과 메르스 사태를 다루었다. 박계동 한국 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의 글은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뒤로 한 채 협동조합 방 식으로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자신의 미래도 새롭게 일구고 있는 청년의 마음을 지닌 '어른'의 분투기이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 택시 사업으로 협동 조합 운동을 펼치기 위해 기존 택시회사를 인수하고 조합원들의 가입을 유 도해 박봉과 초과 근로에 시달리던 기사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마침내 개 선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생생하게 실감할 것이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의 글은 메르스 사태를 낳은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사회를 넘어설 대안으로서 의료 전문가와 시민이 서 로 소통하는 의료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돌발논문에서는 주식회사에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해피브릿지의 경험을 다루었다. 문성환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이사의 글은 해피브릿지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조합원들이 주인으로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들이 새로 결정한 성과 보상 및 이익 분배 제도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들려준다. 서평란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력이라는 문제의식 위에 사회·생태·경제의 영역에서 전환을 위한 노력의 사례를 소개한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과 그동안 생협평론의 '협동조합을 가다'란에 연재되었던 글을 한데 모아 책으로 엮은 『이런 협동조합이성공한다』에 대한 글을 실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유익한 서평을 써준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과 강양구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에게 감사드린다.

오늘날의 시장경제는 인간의 이기심과 금전적 동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이를 부추김으로써, 덕성이나 이타심, 우정과 신의와 같은 우리 내면의 좋은 특성들을 내몰아 버리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시장을 가까이 한다면 선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영리기업을 닮아가고 좋은 의도들을 결국에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시장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사회를 황폐화시키니, 사회적경제를 하려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제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시장이 사람들의 여러 측면들 중 어느 쪽 성향을 끌어내고 고취시킬지 여부는 참여자들이 경제적 거래의 마당에서 무엇을 내놓고 상대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해진 윤리적 소비, 도농상생, 로컬푸드, 공정무역 등은 바로 시장과 기업을 인간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인 셈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활동들은 시장의 이름으로 돈이 오고가는 거래를 하면서도,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타인의 사연에게 기울이고 상품의 교환에 더해 마음까지도 나누며, 응답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호의를 기꺼이 베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거래 상대방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친구로서 함께 살아가려는 사회적경제의 마음가짐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사람을 목적으로 존중하고 내재적 동기를 고양시키는 바람직한 기운들이 전통적인시장이나 영리기업 안으로도 스며들 그날을 꿈꿔 본다. icoop



특집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 마을과 경제
-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캐나다 퀘벡의 사례
-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사례
-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좌담회

•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김기태((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

가벼운 마음으로 청탁받은 원고를 쓰기 시작했지만, 글을 써내려갈수록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을운동과 관련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의 활동을 몇 가지 다루고 긍정적인 점을 부각한 후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 읽을수록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진영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루어놓았던, 혹은 충분한 설명이 없는 공백들, 그리고 내가 답을 찾고 있는 질문들이 함께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글의 제목 자체가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격렬한 이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수록 무겁게만 느껴졌다.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시장경제와의 관계는? 법인격 혹은 정책적 인정을 받은 조직인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단순 합인가?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는가?

'지역'이란 무엇인가? 마을부터 EU와 같은 초국적 단위까지를 포괄하는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농산어촌부터 메갈로폴리탄까지 지역이란 동일한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발전'이란 무엇인가? 제로성장사회 혹은 농본사회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주장부터 당장 지역에 돈이 돌기만 한다면 산꼭대기까지 케이블 카를 놓는 것이 지역도 발전하고 국가경제도 발전한다는 주장까지 수만 가 지의 접근법이 있다. 양적 발전과 질적 발전처럼 발전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 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혼란스럽다.

'대안'이란 무엇인가? '다른' 활동이라는 부드러운 해석부터 반자본주의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이 말도 만만치 않다. 제목의 단어 하나하나가 제대로 합의된 적이 없거나 사회경제적인 포괄적인 입장을 정리할 때 중요한 개념 어들이다. 이 네 가지 주요 개념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다.

글의 얼개를 짜다 지우고 짜다 지우며 결국 마감시간을 수차례 넘기면서 어쩔 수 없이 목표를 낮추었다.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말들을 요령 있게 엮기로 했다. 눈 밝은 독자들이 이해해주시길 기대하며 사회적경제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글을 정리해본다.

운동의 시작과 확장

어떤 운동이든 운동의 초기 사례는 대부분 자연발생적이다. 그리고 그 사 례가 가지는 장점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의미부여를 하게 되고. 특정한 운동의 논리와 범위가 정해지면서 체계화된 운동의 방향이 정해진다.

성미산마을을 예로 들어보자. 초기에 성미산마을은 아이를 둔 부모들이 스 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한 것에서부 터 출발했다. 당시에는 거대도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네트워 크를 통해 뉴타운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도시지역 발 전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누구도 전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초기 주체들이 활동을 통해 이룬 성과가 다시 새로운 활동들을 만 들어내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엮여나갔다. 성미산마을로 이사 오는 사람 도 생기고, 다른 지역에서도 성미산마을처럼 만들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생겨 났다. 그러다 보니 주체들 스스로를 위해, 혹은 성미산마을에서 의미를 찾으 려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틀을 찾게 되었 다. 여기에 많은 연구자들도 나름대로 도움을 주었다.

성미산마을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공동체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고, 마을공동체운동이 하나의 운동으로 생성되었다. 이런 민간 주도 의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지자체가 받아들이게 되자 좀 더 빠른 확산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성공 요인이 더 섬세하게 분석되면서 매뉴얼이 만들 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가 동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적용한 사례들을 평가하면서 다시 성미산마을의 사례를 상대화하거나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점차 마을공동체운동, 마을운동, 마을경제 등 운동의 맥락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다른 다양한운동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미 다양한 지역 발전 사례를 만든 사회적경제

성미산마을의 사례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운동이 추구하는 지역의 활성화혹은 재활성화 노력의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서울시에는 삼각산재미난마을의 모범 사례도 있고, 농산어촌에서는 전남 영광 여민동락공동체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고, 충북 안남면의 작은도 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움직임, 로컬푸드 운동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군 단위 에서 수백 개의 마을을 연결하려고 노력한 전북 완주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운동도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의식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상호간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강원도의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도농 통합 중소도시에서 활동하고 있고, 충남 홍성 홍동마을은 농촌지역에서 작은 조직들의 연대활동을 바탕으로 면 단위 지역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농산어촌과 도시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례들을 보면 그것이 의식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발전을 지향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역 발전의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새 로운 사회적경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들이나 예술가들이 주로 모여 활동한 지역이 재발견 되면서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일들이다.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 모여 든 예술가들에게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창의성이 그 지역을 알게 모르게 변 화시키는 것이다. 무미건조하고 평준화된 도시공간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상업적으로도 활성화되기 마련이다.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 창업인들에게 도시의 틈새에 있는 비도심 낙후지역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소셜네트워크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광역 마케팅의 효과가 잘 발휘되면 상업적 공간으로 재 활성화되기도 한다. 기존의 비도심 상권의 주체들이 지역의 안면 범위를 넘 어서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과 함께 활기를 잃어갈 때. 새로운 주체들은 온라 인 커뮤니티라는 가상공가을 활용하여 기존의 공가을 재구성해냈다. 통인시 장을 일구어낸 마을기업이나 청년 장사꾼의 사례는 사회적경제가 도시지역 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경제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례는 개별법 협동조합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이 농민 조합원과 스 스로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신용사업을 하고 있지만, 면 단 위 지역에서 골고루 신용사업 점포가 유지되고 있는 것만 해도 농산어촌 지 역사회의 퇴락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여러 농협이 조합원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농협이 참여하는 복지사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성공 사례 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의도하지는 않아도 농산어촌, 특히 면 지역의 복지 전달 체계가 기존의 복지관 방식으로는 불가 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사회적경제를 통한 더 나은 해결책을 고민하도 록 자극하기도 한다. 안성 고삼농협의 사회적기업 활동이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농협의 시니어클럽 지원 활동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가 지역 발전을 추구할 때 여러 모로 검토할 만한 사례들이다.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다양한 활동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운영 원리와 핵심적인 지도자들의 지향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세계적인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범위와 그운영 원리는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조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통적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부문이며, 사회적기업의 범위에도 포함되는 협동조합의 세계적인 합의 사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95년 세계협동조합연맹에서 발표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살펴보자.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제시한 협동조합의 제7원칙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승인한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원칙은 협동조합 조합원과 업무 구역이 특정한 지역적 공간에 있는 지역사회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곧 그 지역사회의 주민이며, 협동조합이 거래하는 시장의 범위가 지역이라서 협동조합과 거래하는 사람들도 지역사회의 주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따라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인 발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협동조합의 원칙에 비춰볼 때 해외 저개발국가를 지원하는 소명을 지닌 일부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체인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 진다. 또 그런 만큼 지역사회의 자원을 지역의 다른 주체들과 함께 지역 발 전을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게 된다고 봐야 한다.

반면 대규모 주식회사에게 특정 지역의 주민은 많은 소비자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설령 공장이나 본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의 동원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소유와 지배의 문제가 그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단지 거기에 있는 것일 뿐이다'.

아직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운영 원리와 기존의 여러 사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경제와 지역 발전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대 중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러한가? 다양한 이유가 있고 사회적경제 진영 내부에서 풀어야 할 문 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회 경제의 발전 경험에 따른 인식이나 제도가 아직까지 영리기업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는 아직까지 민간의 지향과 정책이 기대하는 효 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사회적경제의 민간운동은 사회적 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 모색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적인 사회 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지향한다. 하지만 사 회적경제 관련 정책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대효과를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복지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주요 목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 출이며, 보건복지부의 자활정책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활기업도 마찬가지이 다.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은 마을의 자원을 사업화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종사자들의 소득 창출에 머무를 뿐이다.

정책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경제 부문의 특성이 제한되다 보니. 아래로 부터의 자율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책임져줄 주체들 의 발굴이 지체되고 있다. 당위적으로는 지역 발전을 목표로 삼고는 있지만 이를 핵심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이 미흡하고, 연대 조직들도 사업을 개발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업 중 한 종류로만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진영 내부에서조차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지역사회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 비전을 실행할 만한 사업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인식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열정적으로 마을운동을 수행하는 활동가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현재 도시의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도시지역의 발전과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현재의 인식도 사회적경제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조사들이 있지만, 최근에 발표된 서울연구원의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시민에게 행복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본 결과 건강, 소득, 안전, 고용 여부를 순서대로 꼽은 반면, 실제 행복을 느끼는 데 높은 영향을 미친 항목들로는 가정생활 만족도, 재정상태 만족도,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만족도로 나타났다. 소득의 영향력은 실제 주요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낮은 편에 속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은 삶의 성취도, 미래 안정성, 생활수준, 여가 시간, 직업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지역사회 소속감은 가장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행복도에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었다. 범죄 사고로부터의 안전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사를 통해 대규모 도시에서 사회적경제의 주요 업종들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이 실제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들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기에는 미흡한 주제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경제 발전 위 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소득과 미래 일 자리, 직업 만족도 등이 중요한 지표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지표들은 지역과 연계되지 않고 주로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으며. 생활공간과 직장공간이 분리된 서울에서는 지역의 발전이 정책의 의사결정 에서 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큰 영리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이 일 반적인 도시 주민에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한계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낙후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이유는 다르겠지만 서울과 별 차이가 없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오히려 수도권과 남동임해권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불균등 경제 발전 전략에 따라 개발된 우리나라의 공간적 불균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낙후지역에서는 '가보지 못한 길'인 "공단을 조성한 외 부 자본을 동원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과 공감은 더 클 것 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지역사회의 질적 발전에 대한 논의가 양적 발전의 논리를 따라잡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들 간의 지역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형 사업과 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체계 적인 전략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추상적인 운영 원리 측면에서 우 월한 사회적경제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현실적인 기대를 만들 고.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회적경제

2000년대에 접어들어 지방 균형 발전이란 정책이 국가적 화두가 될 정도 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거기에 있기'만 하더라도 감지덕지하다면서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관련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유 치정책이 만들어졌다.

이런 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일자리 창출'과 '전후방 효과'였다. 큰 기업이들어오면 지역 주민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이고, 부근에 자재를 공급하는 작은 공장들이 저절로 들어올 것이고,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는 지역에서 소비되니 다양한 경제적 전후방 효과로 인해 지역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가 경제이론의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여러 실증적 연구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외부자본 유치에 따른 지역사회 경제의 편익-비용과의 관계는여러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박진도, 2011). 1

대규모 외부자본 유치가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하지 못할 것이며, 지역 사회의 발전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가 더 적합하다고 사회적경제 진영의 이론가들은 말해왔다. 그리고 모범 사례로 이탈리아의 볼로냐나 캐 나다의 퀘벡을 자주 인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 주민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의 운명을 지고 있으 며, 경기 침체기에도 지역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아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 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자본 유치, 혹은 국책 개발 사업의 유치는 지역 발전의 유일한 전략이 되고 있다. 왜 그러한가? 단일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질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이다. 투입된 자본에 따라 얼마나 매출액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참여자들의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실현 여부를 떠나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는 데 유리하다. 여기에 투입되는 공적자원의 기회비용은 정책 입안에서 무시된다. 따라서 외부자본 유치 정책은 언제나 높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반면 설립 초기의 다양한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¹ 박진도, 「사회적경제가 왜 중요한가」, 열린충남, 충남발전연구원, 2011

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은 성공 가능성에 대한 각각의 차이, 통합적인 성과 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부재,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비전의 정 렬과 이해관계의 통합 등 여러 측면에서 육성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 이 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개별적인 대안으 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담론의 수준에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형 발전은 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의 기간이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 정책 수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 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지역발전 정책으 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진영은 지역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도 를 평가하여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발 전을 주목표로 하지 않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이 어떻게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 설명되는 사회적경제 조 직의 범위와 멤버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가 지역 발전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자신의 주요 사업으로 인식하고 실천하 는 지역 단위의 연대조직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와 경제의 결합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리 농산물은 종 자, 즉 유전자의 특성보다 환경과 영양 여건에 의해 성과의 80%가 결정된다 고 한다. 사회적경제가 지역 발전을 고민한다면 환경에 맞는 작물을 잘 선택 해야 하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거름기가 없는 거친 땅에서 처음 농사를 지으려면 아무래도 콩과 작물들 을 심어 지력을 높이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사람이 떠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과수원이라면 전정 작업으로 살릴 수 있을지 판단해보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대체하는 것도 시장을 살피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카시아가 울창한 기름진 숲에서 새로운 숲을 전환시켜 나가려면 응달에 강한 나무와 적절한 솎아내기가 필요하다. 혹은 숲의 공터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활엽수를 심을 필요가 있다.

예민한 독자라면 이 상징이 우리나라 지역들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란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농산어촌의 낙후지역과 중소도시 지역, 대 도시 지역은 새롭게 진입할 사회적경제에게는 이미 주어진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기름진 울창한 숲에서 유실수 묘목을 심거나 퇴비를 주는 활동은 크게 성과를 올리기 어렵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은 자원의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소비형 업종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모여들어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장소 마케팅이 일어나고, 여기에 소비자들이 모여들면서 나타나게 된다. 혹은 최근에 나오는 마을벽화 등으로 관광자원을 확보한 마을에서 발생하는 갈 등은 마을의 변화를 향유하는 소비자와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이 서로 연계성이 낮은 지역에서 나타나기 쉽다. 마찬가지로 낙후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기업들을 사회적경제의 더 넓은 틀 속에 포함할 것인가는 척박한 땅에서 가능한 많은 자원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착한 의지가 지속 가능한 성과를 조속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정책의 예산 지원은 그 적극적인 지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비료나 퇴비에 불과한 것이다. 어차피 사회적경제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 천천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동시에 각각의 특정한 지역사회의 주요 업종, 부족한 업종, 주민들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도구가아니라는 원칙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한편, 직면하고 있는 지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 로 지역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외부의 자원을 결합해야

물론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신의 활동을 지역 전체의 발전 지역전체의 발전 및 다른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과 연결되도록 고민하면서 성공적인 사 례를 창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모 범 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확산되기 쉽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례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이 이미 지역의 다양한 특징을 파악해 본 경험으로 비슷한 활동을 다른 지역에 도입할 때의 유의점 역시 쉽게 발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사업이 지역의 발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나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결 방법, 지역 주민이나 주 요 관계자들의 반응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이미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도. 외부와 내부의 자원을 잘 결합하려는 선도적인 계획이 없이는 성공하기 쉽 지 않다.

아이쿱생협의 구례 자연드림파크는 큰 규모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결합하여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낸 계획된 활동이라는 점 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찰해야 할 사례이다. 구례군의 자원과 아이쿱생협의 자원이 결합하여 농식품 가공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내고, 단순히 제조업뿐 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관광지 개발 등을 결합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 어넣고 있다.

구례 자연드림파크가 담당하는 지역의 범위는 이전의 사회적경제가 활성 화하는 지역의 범위가 주로 읍면동 단위 규모 혹은 그 이하의 마을 규모라는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산어촌의 시군 단위를 범위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은 기초 지자체인 시군구가 정책의 수립과 예산 편성, 행정체계의 방침을 수립하는 단위인 만큼 사회적경제 조직이 실행한 프로젝트 중 시군구 단위의 지역 발전활동이 가시화된 첫 성과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론 한살림의 횡성 사례나 완주 고산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도입 등도 이런 점에서 계속 주목해야 한다. 이들 사례는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의 구도 속에서 스스로 의도적인 활동과 다양한 확장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마무리하며

사회적경제와 지역 발전의 많은 이슈들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와 그 과제를 선도하는 사례들을 간략하게 다뤘다. 과제를 다루다 보면 비관적인 것 같지만, 이미 이런 사례들은 그동안 지역 발전의 접근법에 대한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큰 충격 주면서 드러냈다. 동시에 새로운 대안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하나하나가 소중한 사례들이다. 이런 활동과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견하게되는 것이다. icoop



마을과 경제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생활경제의 장, 마을

홍기빈의 책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지식의날개, 2012)에 따르면 살 림살이 경제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유 무형의 수단을 조달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그동안 마을공동 체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의한 '마을' 혹은 '마을기업'의 의미와 매우 흡사하 다. 마을살이는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궁리하며, 협동으로 해결하 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관계망이 곧 마을이고, 마을경 제가 작동하는 그릇이다. 결국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 해 스스로 나서는 터전이 마을이고 그 마을이 곧 살림살이 경제의 주체이자 단위이며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기업이란 무엇일까? 최근 마을지원센터가 마을기업연합회 와 진행한 토론회에서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마을기업이라?

- 마을을 키우는 기업: 동네 문제를 해결하며, 마을공동체 확장에 기여하 는기업
- 마을이 키우는 기업 : 마을 주민 여럿이 운영하고, 동네 이웃이 이용하는 기업

¹ 본 원고는 서울시 마을기업사업단에서 발행 예정인 백서에 수록될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곧, 마을기업이란 공통의 동네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을 관계망을 확장하고, 주민의 참여가 기업 자립으로 이어지는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마을을 키우고, 마을이 키우는 기업'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공통의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을 관계망을 확장하고, 주민의 참여가 곧 기업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기업이다. 하지만, 주민의 참여가 곧 기업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의 자립을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지만, 최소한 손익분기점 (BEP, break even point)을 달성하는 상황을 말한다. 모든 기업의 꿈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기업은 창업 1년 만에 절반이 사라진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기업의 자립을 마을기업은 '매출이 아닌 주민의 참여'를 통해 달성한다는 것이다. 정말 가능할까? 마을기업의 운영 원리를 통하여 해명해보기로 한다.

출자와 '십시일반'

마을기업의 운영 원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출자제도이다. 이는 마을기업이 창업 초기 씨앗자금(seed money)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우리의 전통적인 자원 조달 방식인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사업장으로 사용할 공간을 마련하고, 설비와 장비 등의 생산 시설을 갖추려면 큰 목돈이 필요하다. 게다가 운영 초반부터 흑자가 나기는 어려우니, 초기 적자를 충당할 여분의 운영비 명목의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마을기업은 이 목돈을 어떻게 조달할까? 마을기업의 자원 조달 방식은 일반 기업들과는 사뭇 다르다.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형편대로, 마음 가는 만큼 출자하도록 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십시일반이다. 그런데 어떤 동네 사람들이 출자하란다고 다 출자할까? 최소한 믿으니까 하는 거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라도 출자하라고 권하는 이를 믿으니까 부조금(扶助金) 내듯이 출자하는 거다. 동네를 위하는 일이라니 잘되면 좋고, 설

령 안된다 해도 "할 수 없지" 하고 말 수 있는 것이다. 돈이 될지 말지, 투자수익이 얼마나 돌아올지를 면밀히 따져 투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렇 듯 신뢰와 관계를 바탕으로 출자하고, 출자한 사람들이 모여 기업의 주인이되는 것이 마을기업이다.

마을 고용과 '마을 일거리'

마을기업 운영자들은 대체로 귀가 얇다고 농담을 하곤 한다. "동네 일이니 같이 해보자, 잠깐 와서 도와달라"는 이웃들의 부추김(?)에 별 대수롭지 않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고용은 일반적인 고용 행태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야말로 일거리 개념이다. 일거리는 평생 고용이 아니다. 2년 계약도 아니고, 9 to 6(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주 5일 근무도 아니다. 일주일에 2~3번 나가서 일을 보고, 하루 몇 시간만 일하는 일종의 파트타임 식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 일거리를 알바와 별다를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전업주부인 경우 보통 오전 10시는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둘째가 돌아오는 3시 전에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야 한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직장을 구할 수도 없다. 근거리에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활권 안의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조건을 맞춘다. 이것이 바로 마을 일거리다. 진정한 의미의 노동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일거리가 일반적인 노동의 형태가 될 거라 한다. 이는 앞으로 개인마다 다양한 일거리 노동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말이다. 하고 싶은 일거리들을 선택해서 자신의 일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거리 시대는, 가까운 거리 안에서 다양한 일거리들이 풍성해야 실현 가능하다. 즉, 일거리는 직주(職住)가 통합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노동의 형태다. 직주 통합이 가능한 장소는 바로 마을이다. 결국 미래사

회는 '마을'이라는 소규모의, 일상의 대면 관계가 살아 있는 작은 사회(small society)를 상정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으로 보이는 '일거리'가 마을 안에서 미래의 일자리로 그 의미가 바뀔지도 모른다.

이용과 '확보된 시장'

마을기업에서는 출자한 조합원들이 단골 고객이다. 주인이 곧 소비자인 것이다. 자기가 주인인 기업을 이용하는 것이니 당연한지도 모른다. 바로 이점, 이미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한다는 점이 일반 기업과 가장차이가 나는 특징이다. 조합원이 초기 창업자금을 조달하고, 이들이 창업 이후에는 곧 단골 고객이 된다. 그리고 그 단골 고객은 대부분 마을 주민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중 '공공조달'은 매우 비중 있게 추진되는 의제이다. 사회적기업 설립 정책이 처음 도입된 때는 IMF 직후로, 일자리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동네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용을 더욱 우선시하게 되었다. 고용은 곧 급여 지급이 가능한 정도의 매출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매출 확장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수요의 기반이 거의 파괴된 상태에서, 사회적기업이 고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과업을 짊어지려니 역부족이다. 사회적기업은 이렇게 생존조차 버거운 현실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역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찾은 돌파구가 '공공조달' 시장이다. 공공조달 시장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약간 빗겨나 있기도 하지만, 시장(市場)이 포기한(?) 고용이라는 공공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게 우호적인 시장이다. 즉, 고용이라는 공공 과제를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전가한 정책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을 사회적기업들에게 우호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기업에게는 공공조달 시장이 일반 경쟁시장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

된' 시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마을기업은 이러한 '안정된' 시장을 넘어서, '확보된' 시장을 추구한다는 점에 또 다른 차별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마을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곧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단골 고객, 즉 출자 조합원이 일정 수준까지 확보된 후에라야 창업하는 것이 마을기업이기 때문이다. 사실 마을기업은 업종의 특성상 규모화, 일반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확보된' 시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마을기업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마을로 가는 것'이 아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의 필요에서 시작한다. 마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하는 것이 마을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문제를 잘 해결할수록,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고 칭찬할수록, 마을 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할 결과로서 마을기업의 매출이 상승하고 자립의 토대가 생기는 것이다.

마을기업, 내발적 경제 모델의 주체

마을기업의 확장 원리는 소비자 공유와 내부거래다. A 마을기업의 소비자가 B 마을기업의 출자자가 되고, B 마을기업의 소비자가 A 마을기업의 출자자가 된다. A 마을기업이 필요한 재료를 B 마을기업에서 구매하고, B 마을기업은 C 마을기업으로부터 자재를 조달한다. 상호출자와 내부거래로 서로가서로를 책임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마을의 관계망이 출자와 소비의 순환 고리로 형성될 때, 경제학에서 말하는 내발적 경제 모델이 달성된다.

동네를 지켜온 빵집, 쌀집, 슈퍼 같은 상점들이 모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상품 구색이 훨씬 풍부하고 직원 의 매너도 친절하고 에어컨도 잘 나오는 프랜차이즈 상점을 이용하기 시작 하면서, 마을경제의 핵심 거점이었던 구멍가게 아저씨가 실직하게 된다. 일 흔이 넘어서도 가게를 지키는 할머니의 슈퍼에 오는 사람들은 수십 년 동네 에서 얼굴 보며 살아온 60대 이상의 어른들이다. 얼굴을 알기 때문에, 동네 슈퍼를 두고 대형마트에 가기 미안하니 찾아오는 것이다. 얼굴 있는 거래,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내부거래, 단골의 경제학은 내발적 경제의 핵심 원리이자 살림살이 경제의 기본 원리이다.

창업 실패는 마을기업 실패인가?

이렇게 마을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마을이라는 거야, 기업이라는 거야?"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마을 관계망에 신경을 쓰자니 매출이 걱정되고, 매출을 쫓다 보니 초심이 희미해지고, 결국 매몰비용 때문에 발을 빼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마을기업 대표자들이 많다. 하지만 마을기업에게 마을 관계망과 수익 창출, '마을'과 '기업'은 선택적 목표가 아니다. 동시에 추구되고 동시에 달성되는 목표이며, 동시에 추구해야만 동시에 달성되는 동전의 앙면과도 같은 것이다.

매출 증대, 수익 창출, 영업 이익, 손익분기점 달성 등은 기업으로서의 자기 유지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경영적 목표를 말한다. 마을기업 역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과연 어떻게 달성될까? 바로 출자금이다. 출자자 확대를 통한 출자금 조성이다. 마을기업은, 출자자가 곧 소비자이다. 출자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출 안정은 물론 경영 안정화의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누가 출자하고, 누가 이용할까? 마을기업이 추구하는 '마을 공공성'에 공감하는 사람이 출자하고, '마을의 필요'에 동의하는 사람이 이용한다. 전문적이지도 않고, 인테리어도 세련되지 않고, 홍보 자원도 없어서 알릴 힘도 없는 마을기업에 일부러 찾아와 출자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마을의 필요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이 해결하려는 마을 문제를이해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에 동의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내야 한다. 아마도 돈벌이경제의 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사업가 정신제로라고 평가될 것이다. 마을에서 돈벌이경제의 기업가 정신으로 일하면,

인심 다 잃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수익 모델'이라 하지 않고 '마을의 필요'라고 표현한다. 수익적 가능성이 희박해도 마을에 필요해서 창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 을기업은 성공률이 낮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1년 동안 마을기업을 운영하다 가 문을 닫으면, 과연 실패한 것일까? 물론 기업이라는 형태로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망했다고 해서 아이들 방과후학교며, 작은도서관 이며, 동네부엌이며, 그동안 마을기업이 해결하려고 애쓴 동네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기업이 문을 닫아도 동아리 활동으로. 품앗이 모임으로 축소되어 계속될 것이다. 왜? 우리 아이들 방과후 문제를 기업이 망했다고 접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 활동의 결말은 항상 열려 있다. 다양한 결말이 가능하다. 창업의 실패가 마을기업의 실패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마을기업을 통해 주민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우리 아이들 돌봐주는 주민들이 많아지는 관계자산을 얻게 된다. 결국 마을기업은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결집시키며 시작되고. 마을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속된 다. 동네 사람들을 꾸준히 모이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을기업의 원천이다.

서울형 마을기업, 불모지에서의 이중 과제

서울시 마을기업들의 현실적인 상황은 과연 어떨까? 서울시 마을기업 육 성정책의 핵심은 입구 강화 전략이었다. 마을기업으로 창업하기 전 단계에 서 충분히 인큐베이팅함으로써 마을의 필요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5개 자치구별로 각 1명의 전담 인큐베이터를 배치하여.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마을 주민들의 관계망 구축에 충실하도 록 지원했다. 더불어 마을기업의 자립성 강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을 하지 않 고. 사업장 용도로 사용할 공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최대 1억 원 한도로 공 간보증금을 지원하고, 5년 거치 후 전액 상환하는 조건임)을 설계했다. 그런 데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공모사업을 함께 운영하다 보니. 서 울형 마을기업의 정책 기조를 올곧게 추진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에서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준비 과정을 통하여 마을 관계 망을 확장하고 심화시키게 되어. 서울시 마을기업의 생존율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정책 집행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얼마나 많은 마을기업들이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 정이 앞선다. 비교적 준비과정을 촘촘하게 거쳤지만, 자립에 이르기에는 아 직 역부족이다. 마을 관계망이 튼실한 곳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려는 일이 되고 보니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마을기업은 마을 관계망이 빽빽할수록 자립 기반이 탄탄해지는데, 3년 전 정책을 실행할 당시 서울에서 마을 관계망이 잘 형성된 곳은 몇 군데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기업이라는 양(羊)을 초지(草地) 없는 산비탈에, 건초를 지원하며 육 성하려 했기 때문은 아닐까? 정부가 건초를 사다 먹여 일정 기간 생존을 도 울 수는 있지만, 목초지가 금방 조성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을기 업들에게 건초를 먹으면서 초지도 함께 만들라고 요구한 셈이다. 마을기업 은 어쩌면 키워줄 마을도 없는데 오히려 마을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짊어진 채 산비탈에 던져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마을기업은 스스로 생존하며 생존 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3년, 목초지의 성장

다행히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이 3년간 지속되면서 동네 이곳저곳에 약 간의 초지들이 생겨났다. 또한 서울의 많은 마을기업들이 고군분투하며 버 텨낸 성과이기도 하다. 약 10만여 명의 시민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3천여 개의 주민 모임이 생겨났다. 또 23개의 자치구 단위의 마을 네트워크(마을넷)가 구성되어 지역의 다양한 풀뿌리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연결되었고, 자생단(자치구마을생태계지원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자치

구별로 생겨났다. 3년 전에 비해 훨씬 넉넉한 터전이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3천여 주민 모임들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또 비슷한 의제를 중 심으로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마을 관계망을 유지하 기 위한 '경제 모델'을 고민하기에 이른다. 몇몇 주민들의 품앗이로 돌아가다 가 일정 정도로 규모가 확장되면. 누군가는 나서서 이를 관리하고 책임을 져 야 한다. 이를 조직이라 하고. 이 조직이 원만히 지속되려면 '경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3년 전, 충분히 준비하고 마을기업을 창업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원칙이 이제야 실현 가능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영역의 주체들이 마을 안으로 모이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 지역 복지관도 마 을 활동에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시니어들이 마을에 서 청년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주민 모임들이 연결되고. 그 연 결된 모임들이 경제활동으로 진화하며, 다양한 장르의 활동들이 서로 융합 되는 현상이 분명히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다.

서울형 마을기업 전략의 변화, 경제 네트워크의 구축

서울시가 3년 동안 벌인 마을공동체정책의 성과와 그에 힘입어 마을 현장 이 스멀스멀 연결되고 융합하는 흐름에 따라. 서울형 마을기업 역시 전략적 전화을 준비해야 한다. 작년 연말부터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를 포함한 다 양한 관련 주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왔다. 전환의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초지를 더 확보하고. 이미 생겨난 작은 초지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 이다. 그래서 더욱 넓어진 초지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마을기업에 대한 배후 지로서 마을기업에 친화적인 구매력을 보유하게 될 터이다. 따라서 마을에 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웃들끼리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구매하는 공동소 비 활동을 촉진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들 교복이나 문구류는 물론이고, 자동차보험이나 핸드폰까 지 공동구매를 통해 경제적 실익도 얻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마을기 금으로 모아간다든지 할 수 있다. 또한 동네게릴라장터 같은 행사는 인근에 살면서 서로 모르고 지내는 이웃들이 골목으로 나와 서로 얼굴 보고 가볍게 인사 나누고 관계를 슬슬 터가도록 돕는 데에 아주 제격이다. 마을에 필요한 공동 공간을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마을 안에는 이미 복지, 아이돌봄, 마을카페, 청소년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마을 모임과 마을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보통 주민들도 별거창한 결심 없이도 가볍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턱 낮은 경제활동들을 활성화시켜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마을에서 벌이고 있는 경제활동과 마을기업에 연결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미 설립되어 활동 중인 마을기업들이, 작게나마 형성되기 시작한 마을 관계망에 잘 안착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마을기업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열어 마을 주민들의 모임이나 작은 행사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을기업이 먼저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마을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마을에서 존재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 과정에서 마을기업이 추구하는 마을 공공성의 가치를지역사회에 알리고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만나는 마을 사람들을 마을기업의 예비 소비자로 확보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관계와 신뢰를 통해 마을 단골이 만들어진다.

끝으로, 마을경제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마을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인 시도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천여 개의 주민 모임들이 지역에서 마을에서 서로 엮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경제적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3천여 주민 모임들이 다루는 의제들은 모두 살림살이 경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 모임이 서로 연결되어 면(面) 단위의 커다란 관계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 자체가 마을 경제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따라서 마을에서 각기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

은 살림살이 경제활동을 두루 연결하여. 상호 지원하면서 전체적으로 순환 하는 마을경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의 사례로는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2가 있는데,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가 그 실험을 시작했 다.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는 마을에서 (생활재 및 생활서비스) 생산 활동 을 하는 여러 마을기업들을 하나의 연결망으로 연결하고, '마포'라는 브랜드 를 붙인 PB(Private Brand products)³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을에서 이 웃으로 맺어진 주민들이 모두 잠재 고객이 된다. 이 잠재 고객이 마을기업의 실제 구매자가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단골 고객이 되도록 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다. 공간과 기금이다. 주민들이 마을에 애착을 가지게 하고, 마을 일에 관심을 유지하게 하는 데 공간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웃이 일상에서 만 나고 사연을 만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마을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공 간을 소유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엄청난 목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금이 필 요하다. 기금은 공간 이외에도 마을에서 꼭 필요한 경제 프로젝트를 제때에 제대로 추진하려면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이른바 '마을자산화' 전략이라고 강조하는 마을 과제다.

마을과 경제의 만남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마을사업이 모두 변하고 있다. 초기 설계된 마을공 동체 사업은 17개로 부서별로 잘게 쪼개져 있었다. 이 중에서 마을지향적인

² 영국 사회적기업의 하나로 커뮤니티에 기반하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워하는 법인격 제도다. 지역에 기반하 사회적기업이 자신들의 수입과 자산의 일부를 공동체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원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 업의 범주는 청년 고용 지원, 장애인 및 사회적 소수자 지원, 환경문제, 지역문화유산 보호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에 환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완주CB센터, 「커뮤 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사례조사, 희망제작소, 2011, 22~23p)

³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뒤에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것을 이르는 말 로, PL(private label)상품이라고도 한다. 대형 소매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자체 브랜드로,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 등의 대형 소매업체 측에서 각 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자체 브랜드 제품을 말한다. 자가상표, 자체기획상표, 유통업자 브랜드라고도 불린다. PB제품은 마케팅이나 유통 비용이 절약되어 제조사 고유 브랜드 제품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절차에 따라서 꼭 집행할 사업만 남기는 식으로 3년간 사업의 종류를 줄여왔다. 나아가 담당부서의 해당 의제별로 제각각 나뉘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주민 모임들과 주민 관계망이 함께 공론의 과정을 통하여 합의한 동네 단위 마을 계획을 앞에 세우고, 이 마을 계획 안에 공유경제, 돌봄, 도시텃밭 등 다양한 세부 사업계획이 들어가도록 하는 일종의 '마을활동 포트폴리오'를 맞춤형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즉, 마을공동체 지원이 '점·선'의 전략에서 '면' 전략으로의 이동하는 것이다. 개별 주민모임별로, 개별 의제들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에서 동네 단위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미 마을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연결되고 있고, 현장은 융합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칸막이와 각개약진 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서 면 단위의 마을 계획에 따라 통으로 예산을 배치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내년 마을 정책의 주요 골자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는 동네 단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을연계망사업'이 그것인데, 내년에 면 단위 마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마을 주체를 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면 단위의 마을 계획 수립에서 마을경제 내용은 아마도 꼭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궁리하다 보면불가피하게 마을경제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서 이야기한 마을기업의 마을 연착륙이라는 과제에 주목해야 할 대목이 명확해진다. '동네 마을넷'이라는 진화된 마을 관계망을 토대로 마을경제 계획이 수립되고, 그 속에 마을기업이 자리 잡을 때에라야, 비로소 마을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배후지가 생기는 것이다. iccop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캐나다 퀘벡의 사례

정준호(강워대학교 교수)

1. 글을 시작하며

최근에 소지역(local) 단위의 발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공간 단위에서는 주민들의 강한 지역적인 소속감과 제도적 착근성이 두드러 지고 지리적 인접성이 이들을 매개 촉진하여 주민들이 지역 발전의 비전과 공공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환 언하면, 이는 아래로부터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역 내 지역 간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조언. 협력. 파트너십. 이해관계자의 인식. 숙 의민주주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등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Klein et al. 2012).

지역 내 및 지역 간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이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형 지역 발전은 사회 혁신과 연결될 수 있다(Moulaert, 2009). 사회 혁신은 기술·조직 혁신에 대비하여 사회경제 발전 의 혁신적 성격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연대 성과 상호성의 관점에서 소득, 교육, 복지, 주거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기본 수요(basic needs)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미래 지 향적인 지역공동체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역 자산들의 동원과 주민들의 열 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일컫는다(Moulaert and Nussbaumer, 2005). 지역 발전이 라는 측면에서 기본수요의 충족과 발전을 위한 자산의 동원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는 사회 안전과 복지 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만, 후자는 내생적인 발전주의 성향을 가진다. 또한 사회 혁신은 사회적 자본을 재생산하는 것만 아니라 포용적인 사회조직과 동 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파편화, 즉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것을 아우른다.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은 일차적으로 거버넌스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형 지역 발전'과 사실상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다. 지역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열정을 이끌어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분권화, 사회적 관계의 혁신, 그리고 지역에 착근된 기본수요의 충족 등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형 또는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의 요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Moulaert, 2009). 그렇다면 이는 지역 발전의 이상적인 모형에 불과한 것인가?

이 글은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것의 의미를 성찰하는 데 있다. 사회적경제의 메카로서 널리 알려진 캐나다의 퀘벡을 대상으로 사회 혁신과 지역 발전 간의 연계를 기술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특히 수평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는 사회 혁신과 내생적인 지역 발전 양자 모두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회 혁신과 내생적인 지역 발전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간에 다소 어긋날 수도 있다. 특히 사회 혁신이 기본수요의 충족에 한정되어 사용된다면 더욱더 그러할 수 있다. 퀘벡의 사례는 협소한 의미의 사회 혁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생적인 성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퀘벡 모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Klein et al., 2012).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참여형 지역 발전의 사례에 퀘벡이 잘 부합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선택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Klein et al.(2012)의 논의를 참조하여 퀘벡 모형의 변동 과정을 시기별로 소개하고 함의하는 바를 서술하고자 한다.

2. 퀘벡 모형: 사회 혁신과 지역 발전의 연계

퀘벡은 캐나다 연방에서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로마 가톨릭이 지배적 인 '특별사회(distinct society)'이다.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과 주민들의 국가 정

체성은 퀘벡 모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퀘벡은 북미에서 가장 다원적인 사회로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노조 조직률이 40%가량 되며, 결사체가 약 45,000여 개에 이른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부문 간의 파트너십과 노동자 기금 등을 통해 시장과 비시장적 기제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공기업, 협 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이 경제구조의 다원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양한 사 회경제 행위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들을 엮어내는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 스가 사회적경제의 메카로 알려진 현재의 퀘벡을 주조한 것이다.

〈표 1〉 퀘벡 모형의 변동 및 주요 특성

시기	거버넌스	주요 행위자	지역 행위자	공간 전략	시민사회 대응
1960년대 이전 / 방어적 민족주의	• 권위주의적인 거버넌스	• 교회 • 민간기업	・교구・민간기업・전통적 사회경제 (협동과 상호부조론)	• 자연자원의 착취	•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 요구
1960 / 조용한 혁명	•국가 중심적 거 버넌스	주정부국영기업과공공기관	지역 발전지향적인 공공정책주요 도시의 도시 공동체	• 행정적 지역화 • 교육기관 • 보건서비스	• 지역공동체 보건기관 • 주택협동조합 • 농촌 운동
1980 / 포디즘 위기	• 합의 지향적인 조정과 협력적 파트너십	주정부신사회경제경제발전노조기금	지역의 자치시 (단체) 지역협력과 발전위 원회 지역(local)발전센터	분건화경제회복퀘벡의 농촌지역 정책	지역공동체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빈곤과 사회 배제 추 방전략
2003 / 신자유주의 정부	• 공공 민 간 파트너십	• 민간기업 • 로비업체	• 정치인 • 민간 기업가	 지역 발전센터 의 재편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 전략 환경의 착취 	저항 운동 빈곤과 배제 추방 환경의 반생태적인 착취에 대한 추방

주: Klein et al.(2012) 일부 수정 · 보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퀘벡은 1980년대 포디즘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퀘벡은 단일의 모습으로 정지해 있는 것이 아

니라 시대적 배경과 맞물리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포디즘 위기 이전 퀘벡은 사민주의적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가 교육 사회서비 스, 보건 분야에서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1960년대 서구를 휩쓴 케인 즈 혁명은 여기서는 '조용한 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교회가 지배하는 보 수적인 사회가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조용한 혁명은 시민들의 동원, 즉 도시 와 농촌에서 노조와 시민위원회의 조직에 기반한 것이었다. 복지국가가 기술 관료주의를 배태하기는 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근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름 들면. 이름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보건에서 지 역공동체 보건조직. 법률에서 법률 클리닉. 주택에서 주택협동조합 등의 실험 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초반 포디즘의 위기는 실업 문제로 나타났으며, 더 높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분축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 이후에 재정위기 가 연이어 닥쳐오면서 시민사회는 국가 기능과 그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 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찾은 해결책은 바로 시민들의 참여와 지역(local)이었다. 중앙집궈적 · 경직적 · 회일적인 국가 개입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아 유연적 '분권화된 조절 양식으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면, 국 가가 제공하던 서비스는 지역공동체 또는 민관 합동의 협력적인 방식으로 대 체되었다. 포디즘 위기 이후 시민사회가 공공 서비스의 개선과 민주화 및 국 가의 현대화를 위해 이전의 경우처럼 동원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수 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다.

1980년대 초반의 포디즘의 위기와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케인즈주의의 문 제제기는 사민주의적 퀘벡 모형에 대한 수정을 가했으며, 기존의 사민주의적 인 퀘벡 모형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행위 자들의 참여와 다원적인 경제의 구성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1980~1990년대 동안에 퀘벡은 연대성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험의 인 큐베이터가 되었다. 이러한 실험은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를 얻어 민간 공공 부문, 사회적경제 부문 가릴 것 없이 도처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파트너십에 기반한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민간 기업은 직무의 다양화와 작업 팀 도입과 같은 작업 조직에서의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했으며, 노조는 정리해고와 기업폐쇄에 대처하기 위해 작업 조직의 혁신에 기여했다. 또한 노조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발전기금을 신설했다. 예를 들면, 퀘벡노동자연합(FTQ)과 전국노조총연합(CSN)은 각각 1983년과 1996년에 'Fonds de solidarité'과 'Fondation' 기금을 설립한 바가 있다. 이러한 기금은 노조를 사업 파트너로 전환시키고 다원적 경제의 형성에 기여했다.

시민들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예를 들면, 국가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시민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하기 시작했다. 포디즘 위기 이전의 복지국가 레짐에서는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무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제공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서비스 제공의 민주화를 요구했으며, 이는 서비스 생산과 소비 관계의 재편을 위해 사용자와 전문가 간의 제휴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된 행위 주체들은 여성, 지역공동체, 환경단체 등 신사회운동의 시민 그룹뿐만 아니라 노조, 지역공동체 대표, 공공기관 등을 포괄했다. 1980년대 초반의 케인즈주의 시스템의 붕괴는 각기 다른 행위 주체들의 상이한 수요들을 분출시켰으며 서비스 생산과 소비가 획일성과 경직성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으로 전환되는 데에 기여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 혁신은 새로운 사회 제도적 배치, 자원 동원의 새로운 유형,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열망의 수용(예: 자율성과 권한 위임의 확대 등)을 수반한다. 이는 유·무형의 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동원하고 개인과 지역공동체 간 또는 지역공동체들 간의 연계와 네트워크, 즉 거버년스를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다(Moulaert and Nussbaumer, 2005). 퀘벡의 사회 혁신은 시민사회에서 연원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기존의 제도적 배치 및

사회적 관행들과 단절하여 새로운 제도적 배치 및 관행들을 수용하고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실험은 퀘벡 모형의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요소로 각인되어 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적경제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한 퀘벡 모형에서 두 드러진 특징은 시민사회 조직이 공공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참여했다는 것 이다. 이는 다원적인 경제의 구성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가 민간 기업이나 공공 부문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퀘벡에서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틀 또는 장으로서 지역공동체 (local space)의 위상은 중요하다. 가톨릭교회 또는 교구는 프랑스계 캐나다 사 회의 보호와 유지의 기능을 담당했는데, 이는 지역공동체(local level)에 착근되 어 있었다. 조용한 혁명을 통해 퀘벡 사회에 국가기구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 게 되었으며 지방 행정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했 다. 당시 지역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두 가지 지역사회운동이 출현했는데, 하 나는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운동이고 나머지 하나는 도시운동이다. 이 에 따라 지역개발협동조합과 자원개발공사가 1970년대 농촌에서 활동했다. 이러한 두 흐름은 정부의 개발정책에 의해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되었다. 당 시 행정적 지역화가 단행되면서 1967년에 OPDQ(Office de planification et de déeloppement du Quéec)와 CRD(Conseils réionaux de déeloppement)가 설립되었으 며, 이들은 국가의 중개 또는 대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포디즘 위기 이후 지역 정책의 시각은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중소기업의 기업가를 발굴하려는 지역공동체의 내생적 발전을 중시하는 사고로 바뀌었 다. 이는 정부와 지역공동체의 행위 주체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기업가정 신을 고취하려는 신지역주의의 세계적인 추세와 맞닿는다. 지역 차원에서 협 력에 대한 강조는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측면이다. 그 이전에는 다양한 행 위 주체들 간의 갈등과 제휴가 난무했지만, 자신들을 지역개발정책 거버넌스 의 이해관계자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이다(〈표 2〉 참조).

포디즘 위기 이후 지역 단위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지역 단위의 행정 기구가 재편되었다. 예를 들면, 1979년에 제정된 '토지이용계획과 개발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비대도시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MRC(Municipalité réionale de comté)는 기초행정단위(municipal level)보다 공간적 규모가 크고 96개에 이르렀 다. 이는 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공간적 단위로서 널리 수용되었다. 대도시에서 는 3개 도시공동체(Communauté urbaine)가 MRC의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표 2〉 퀘벡 모형과 지역 발전 영역에서의 사회적 혁신

	퀘벡 모형	지역 발전
주요 동인	 포디즘 위기 재정 위기: 공공부문 후퇴 분권화 및 지역공동체의 책임성 세계화 적응 	공장 폐쇄, 입지이전, 정리해고 공공시스템과 참여와 관련하여 신뢰의 위기 지율성과 책임성
주요 행위자		• 정부 • 재계, 기업가 • 노조,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조직
주요 사회적 혁신	사회운동의 경제적 선회 시민사회대표 조직이 횡단적이고 조정하는 역할 수행 사회적경제의 전략적 행위 일자리 창출 노조 기금 노조의 사회적경제 지원 민간기업, 국가 및 노조기금 간의 파트너십	광역 및 소지역 거버넌스 중개조직의 활성화 수직적 중개(정부/지역 행위자)와 수평적(부문 간 상호작용) 중개 지역공동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노조기금, 지역공동체기금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다 양한(혼성) 기금
주요 논쟁과 과제	마트너십을 하청계약으로 전환 지원 투입의 증가가 없는 지역공동체 책임성 증가의 위험 조직 임무의 존중	공공과 민간 지원 동원을 위한 지역 간 경쟁 지역 발전의 양극화 발전기구의 임무와 할당된 자원 간의 관계 사회 및 지역 통합

주: Klein et al.(2012) 수정 · 보완

정부는 1983년에 사회경제적 정상(summits)들의 합의에 따라 지역계획을 세 우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위원회는 지역협력과 개발위원회(Conseils réionaux de concertation et de déeloppement, CRCD)가 되었다. 이는 선출직 정부 관계자, 서비스 공급 담당자, 사회경제적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1983~1991년 사이에 지역 정상회의(regional summit)가 14회 개최되었다. 특히 사회적 행위 주체들 간에 개발계획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학은 재계와의 연계를 구축했다. 1992년에 정부가 CRCD에 지역 대표자의 권한을 부여하자 협력은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전략적 계획의 입안은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의 기제로 작용했다.

다른 한편으로, 대도시의 맥락에서 포디즘의 위기는 재계, 사회운동, 정부기관이 파트너십 전략을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면, 몬트리올에서는 16개 대표자들이 모여 향후 도시발전에 관한 'Picard Report'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는 전략, 국제화, 첨단 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근린 수준에서도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지역발전 전략, 특히 노조와 지역공동체 시민운동과 같은 사회운동과의 파트너십의 구축이 부각되고 있다. 몬트리올은 다양한 행위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지역공동체 경제발전(economic community development) 계획을입안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인 지역공동체개발공사(déeloppement éonomique communautaire, CDEC)를 설립했다. 이는 파트너십에 기반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의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실업자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97년에 정부는 지역개발센터(Centres locaux de déeloppement, CLD)를 설립했다. 이는 재정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도록 했다. 이는 MRC 수준에서 운영되었는데, 예외적으로 몬트리올의 경우 CDEC가 이 기능을 수행했다.

지역 개발에 관한 정부 정책은 지역의 행위 주체들과 공동으로 입안되었다. 다양한 실험들이 장려되었으며, 이들은 파일롯 프로젝트로 시행되어 검증을 받은 후 여러 지역에 적용되었다. 특히 1997년에 설립된 CLD는 혁신적인 실 험들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사회적경제를 포함하여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지역의 개발전략을 입안하고 지역의 경제와 고용에 관한 실 행 계획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외에도 농촌지역에서의 파트너십의 제고. 빈곤 퇴치와 사회적 배제 방지 등이 지역공동체(local)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포디즘 위기 이후 퀘벡의 지역 발전은 합의에 기반하여 정책들이 공동 입안 되고 있다. 이는 경제와 사회의 다원적인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술한 바 와 같이, 지역공동체는 캐나다 사회에서 소수(minority)로 자각되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을 정치적, 문화적으로 정당화하는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다. 따라 서 지역운동은 사회 혁신의 중요한 토대이다. 퀘벡에서 사회 혁신은 강한 지 역적인 착근성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로 널리 알려진 퀘벡 모형은 1980년대 포디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 주체 들 간의 합의와 협력을 추구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제도화된 것이다. 하지 만 이러한 퀘벡 모형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한다. 2000년대 접어들 어 퀘벡도 신자유주의 광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3년에 자유당이 집권하 면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도입되어 기존의 퀘벡 모형과 불협화음을 낳고 있 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걷어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은 아니 다. 예전의 퀘벡 모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사회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퀘벡 모형이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여 더욱더 포용적이고 생태학적인 관 점을 내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왜냐하면 빈곤과 환경이 현재 사회의 당면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민영화, 외국기업에 의한 자 연자원의 착취, 사용자 부담 원리, 탈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사회 조직의 재정적 약화와 재정 지원의

제약으로 인해 기존의 임무가 방기되고 파트너에서 하청업자로 전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 간의 경쟁을 격화시켜 협력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다.

특히 퀘벡 모형의 이러한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사회 혁신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다. 사회 혁신과 관련하여 시민사회-국가 간의 관계는 '하청(subcontracting)', '공존(coexistence)', '보완성 (supplementarity)', '공동 생산(co-construction)' 등 네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Klein et al., 2012). 하청은 사회적 파트너를 도구적인 역할로 한정하는 것이다. 영국의 보수당 연정이 'Big Society' 슬로건 하에 사회적경제를 장려하지만, 사실상 이는 정부의 기능을 민간 부문으로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퀘벡의 자유당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다. 공존은 지역공동체와 공적 영역이 병렬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완성은 사회적조직이 프로그램의 실행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을 입안하지는 않는다. 공동 생산은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정책의 개발과 실행에서 행위 주체가 되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1990년대에 정책의 공동 생산이 퀘벡에서 지역공동체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는 퀘벡 모형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3. 시사점

우리에게 사회적경제의 메카로 널리 알려진 퀘벡 모형은 1980년대 포디즘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지역 단위의 시민 참여가 바로기존의 관행을 타파하여 사회 혁신을 창출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 경제의 다원성을 창출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한 것이 바로 퀘벡 모형이다. 이는 사회 혁신과 지역 개발이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기본수요를 충족하고 지역내외의 자산과 자원들을 동원케 발전 모형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러한

퀘벡 모형은 신자유주적인 역풍에 휩쓸려 예전의 모습을 잃거나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 좀 더 포용적이고 생태적인 발전 모형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퀘벡 모형의 변동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지역과 사회적경제는 진보의 대안도 보수의 화신도 아니다. 지역 이 슈는 사회적 갈등을 가리는 장치로 활용될 수가 있다. 물론 그 지역 이슈가 다른 사회적 갈등과 연계되거나 그것을 담지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다.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보수당 연정이 사회적경제와 정부서비스 공급을 시민사회로 전가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은폐된 민영화의 수단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 퀘벡에서도 사회적경제가 공공서비스의 하청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과 사회적경제는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지적하듯이 인간 살림살이의 근간을 이루어 진보적 가치의 앵커로서 인용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수의 근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지역과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연계로 구성되는데, 행위 주체들 간의 권력 관계에 따라, 즉 정치적 역관계에 따라 네트워크와 연계의 성격이 달라진다. 어떤 네트워크나 연계는 폐쇄성을 증폭시키지만, 다른 네트워크와 연계는 개방성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그렇다고 시민적 참여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혁신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퀘벡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사회적경제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당시의 맥락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사회적경제 그 자체의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맥락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떠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 과거의 사회경제적 유산과 사회문화의 특수성의 문제이다. 퀘벡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사민주의적 거버넌스가 부재하고 개발주의적 유산이 강 하게 남아 있다. 이 경우 사회 혁신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국가가 맺는 관계 는 퀘벡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민과 국가가 공동으로 지역개발정책 을 입안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공존'과 정책 수행의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완성'의 관계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소지역(local) 수준의 경험과 그 공간 규모에 대한 맹신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소지역일수록 공간적 인접성으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뢰 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와 반면에 갈등이 증폭될 여지도 있다. 문 제는 공간 규모에 따라 상이한 사회관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공간 규모와 무 관하게 적용되는 선험적인 선호도나 우수성은 없다. 퀘벡의 경우에도 기존의 기초단위(municipal)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공간 규모를 창출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나 연계를 통해 규모를 창출한 것이다. 그래야만 경제적으로 유의미 한 개발전략이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혁신과 지역 발전은 어떤 경우 공간적 규모에 따라 상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모에 따라 사회적 혁신과 지역 발전을 네트워크의 연결로 이해한다면 이러 한 상충은 완화될 수도 있다. icoop

〈참고문헌〉

Klein, J.-L., Fontan, J.-M., Harrisson, D. and Léesque, B.(2012), "The Quebec system of Social Innovation: A Focused analysis on the local development field", Finisterra, XLVII, 94, pp. 9~28.

Moulaert, F. (2009), "Social Innovation: Institutionally Embedded, Territorially (Re)Produced", in D. MacCallum, F. Moulaert, I. Hillier and S. V. Haddock (eds.), Social Innovatio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Surrey: Ashgate, pp.11~23.

Moulaert, F. and Nussbaumer, J. (2005), "The Social region: beyond the territorial dynamics of the learning economy".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2(1), pp. 81~100.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사례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 현동의 원리와 현동조합의 지배구조

협동에 관한 규칙으로는 ICA의 7원칙, 오스트롬의 공유자원 관리 8규칙, 그리고 노박의 협동진화의 5규칙이 있다(정태인, 이수연, 2013, p346), 협동조 합연맹(ICA)의 7워칙은 1840년대 로치데잌의 경험 이래 그동안 쌓인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정리한 조직 운영원리이다. 오스트롬은 전 세계의 공 유자원(공동으로 이용하는 숲이라든가 강) 관리 사례를 경험적으로 연구해 서 8가지 규칙을 찾아낸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Ostrom, 2010), 한편 하바드대학교 수학-생물학과의 노박 교수는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협동이 일어나는 5가지 조건을 추출했다(Nowak, 2006).

아래 〈표 1〉은 협동에 관한 인류의 지혜를 총집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규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이한 이론 수준과 다양한 경험에 서 각각 추론된 여러 목록들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협동조합의 제1원칙인 공유와 공동이용은 협동조합에 오스트롬의 8가지 규 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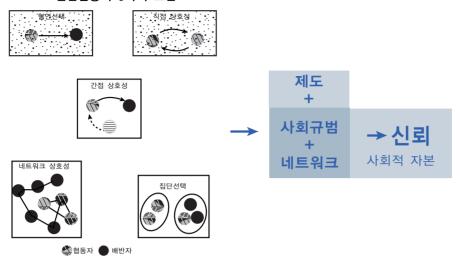
민주적 의사결정(그리고 참여와 교육)원칙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경영에 비해 굮뜨고 중구난방이 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 오스트롬과 노박의 규 칙에서 협동을 촉진하는 필수적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이 돈 과 사람의 동원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인 제6원칙, 협동 조합의 네트워크는 오스트롬의 더 넓은 거버넌스의 존재, 그리고 노박의 네 크워크 상호성 및 집단선택(및 집단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공유자원 관리의 핵심 주체인 지역공동체는 또한 혈연선택과 집단선택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니 협동조합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표 1〉 신뢰와 협동에 관한 규칙들

ICA , 협동조합의 7원칙	오스트롬, 공유자원 관리의 8가지 규칙	노박, 인간협동진화의 5가지 규칙	
1. 공유와 공동이용 2. 민주적 의사결정 3. 참여 4. 자율성 5. 교육 6.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7. 공동체에 대한 기여	1. 경계확정 2. 참여에 의한 규칙 제정 3. 규칙에 대한 동의 4. 감시와 제재(응징) 5. 점증하는 제재 6. 갈등 해결 메커니즘 7. 당국의 규칙 인정 8. 더 넓은 가버넌스의 존재 + 협동촉진의 미시상황 변수 1. 의사소통 2. 평판 3. 한계수의 제고 4. 진입 또는 퇴장 능력 5. 장기 시야	1. 혈연선택 2. 직접상호성 = 단골 3. 간접상호성 = 평판 4. 네트워크상호성 5. 집단선택 + 이후 행동/실험경제학 · 진화생물 학이 찾아낸 협동의 촉진수단 1. 소통 - 민주주의 2. 집단정체성 3. 사회규범의 내면화	

협동의 원리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박의 논의를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수학적으로 보면 협동이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사슴사 냥게임으로 바꾸고, 상대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서 협동해를 택하는 것을 말 한다.

인간협동의 5가지 조건



〈그림 1〉 인간협동의 조건과 신뢰 출처: 새사연, 2014,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

〈그림 1〉은 이런 과정을 하나로 요약하고 있다. 사슴사냥게임에서 배반해 가 아닌 협동해를 택하도록 하는 것은 신뢰이다. 신뢰에 이르는 길로, 그 동 안의 연구가 찾아낸 메커니즘은 제도(주로 물적 인센티브와 체벌과 같은 공 식 제도)와 사회규범(관습과 같은 비공식 제도)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편 학 자들은 이 중 사회규범과 네트워크, 신뢰를 합쳐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정의 했다. 즉 사회적 자본은 한마디로 신뢰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Dasgupta, 2005 등).

예컨대 사교육은 죄수의 딜레마에 속한다. 현재와 같은 사교육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이 다 같이 사교육을 하지 말자는 데 의견을 모 은다면 죄수의 딜레마는 사슴사냥게임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 정부가 배반 의 이익을 낮추거나(예컨대 사교육 중지를 제도로 만들고 비밀 과외를 하는 경우 입시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한다) 협동해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면(예컨 대 공교육의 인력과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사람들은 타인이 협동을 택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된다. 즉 상대가 협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도·정책의 목표가 된다.

한편 사회규범은 인간 내면에서 수치감이나 죄의식을 유발해서 스스로 배반을 하지 못하도록 인간 행동을 규제한다. 사회규범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이 되며 어떤 사건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신뢰란 어느 한쪽만 배반해도 쉽사리 붕괴하기 때문이다. 기실 사회적 딜레마란 사회에 단 한 사람의 무임승차자만 있어도 개인과 사회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협동해를 실천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협동조합은 신뢰와 협동을 통해 기업 단위와 사회의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특히 물질적 인센티브보다는 7원칙과 같은 규범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예컨대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력을 추출하기 위해서 성과급과 같은 물질적 인센티브를 자주 사용하고 정부의경제정책 역시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물질적 인센티브에 의존하는데 이런 정책을 협동조합에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물질적 인센티브가 사람을이기적 존재로 만들어서 오히려 사회적 규범, 내면의 규범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간의 보수 격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민주와 참여,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모두를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협동조합이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2. 협동조합의 기업 지배구조와 동형화 압력

1) "협동조합은 왜 희귀한가?"

현대 기업이론(정태인, 2013)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잔여청구권과 잔여통제 권이 조합원에게 모두 있으며, 기본적으로 출자액과 무관하게 1인 1표의 민 주주의에 의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이다.

"협동조합은 왜 희귀한가?"라는 제목을 단 경제학 논문은 여럿 있다. 마르 크스, 밀, 발라스와 같이 19세기 중반의 좌우 중도의 경제학자들이 다 예찬 할 정도로, 그리고 위에서 보았듯이 사회규범에 의해 저비용으로 사회적 딜 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왜 지배적인 기업범주가 되지 못한 것일 *까*?

우선 자본동원의 면에서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을 통해 유한책임의 소유권 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 반면 협 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과 비분리 자산(Indivisible Reserve, 협동조합에 유 보되는 자산은 조합이 해산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이라는 제약 속에서만 자본을 동원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이전은 노동자 구성의 변 화를 전제로 한다. 위험 기피 성향의 조합원이라면 자신의 전 재산을 출자하 기 어려우므로 출자만으로 투자자금을 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기관은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이유 는 은행이 협동조합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서 대출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앨키앤과 뎀제츠 등은 "모든 사람의 소유는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것 과 마찬가지"(Alchian, Demsetz, 1972)여서 아무도 태만을 감시하지 않을 것이 라고 비판한다('공동소유 문제 common property problem'). 의사결정에 있어 서도 주식회사에서는 최대 주주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1인 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노동자의 구성이 이질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외에도 신고전파 경제학에 입각한 워드-도마-바넥(W-D-V firm)의 고 전적인 비판이 있다. 협동조합은 노동자/조합원 1인당 순수입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급대응에 비탄력적이며 심지어 수익성이 좋을 때 고 용을 줄이거나, 비조합원 노동자를 고용하여 주식회사로 타락할 것이다(이 른바 '워드효과'). 또한 은퇴에 가까운 노동자일수록 미래의 투자수익을 누릴 수 없으므로 현재의 투자에 반대할 것이다(Jensen, Meckling, 1979), 따라서 과 소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거나('시야 문제 horizon problem') 새로운 조합원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협동조합은 기술혁신에도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중에는 현재 주식회사가 지배적이고 이에 따라 모든 제도가 이뤄져 있으므로 협동조합이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경로 의존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들은 주식회사와의 경쟁에서 소멸하거나, 성공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주식회사로 전환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즉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동형화 압력"은 협동조합에 강하게 작용하다.

예컨대 평가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대출 기피라든가, 불신 때문에 지급 해야 하는 금융 프리미엄이 그러하다. 이런 측면은 사회적경제의 존립을 위 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협동조합의 상위 네트워크에 기금을 적립 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주고(이탈리아 레가의 조합기금의 사례),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설립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장차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제조업 에서도 협동조합형 기업이 성공하려면 금융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는 데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야문제'나 '공동소유문제' 때문에 과소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하지 않고 조합 내에 자본을 축적하며, 상위 기관에 기금을 조성하는 데 찬성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경기 상황에 대해 주로 임금의 변화로 대응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최근의 유럽위기 상황에서도 몬드라곤이나 에밀리 아로마냐 지방의 실업률이 훨씬 낮은 것은 이를 증명한다.²

감시와 응징이라는 면에서도 서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동료 간의 상호

¹ 몬드라곤의 노동자금고, 레가의 우니폴, 퀘벡의 데자르뎅 등, 협동조합이 성공한 지역에는 항상 탁월한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존재했다. 그러므로 현재 발효되어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금융 행위를 금지한 것은 커다란 약점이다.

² 이런 면에서 몬드라곤 기업집단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파고르전자의 파산이 의미하는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백색가전산업 자체의 한계와, 동형화 압력에 따른 해외 지사의 설립 등 확장 정책이 파고르 전자의 파산 원인이다.

감시가 더 효율적이고 노동자 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가 존재한다면 아 예 규범 위반이 줄어들 것이다. 현실에서 협동조합은 적은 감시자와 이윤공 유로 높은 생산성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문제에 관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상호 학습. 그리 고 토론에 의해, 즉 민주주의에 의해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에밀리아로마 냐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규모로 유입됐을 때 생긴 노동문제, 몬드라곤 이 국내 일반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발생하 문제를 해결한 것 역시 오랜 기간 동안의 숙의였다. 협동조합이 투자지기업과의 경 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협동조합 고유의 규범에 의해서 사회적 딜레마 해결 의 이점을 누리면서, 동시에 기술적으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해야 하 는 것이다.

3. 아이쿱의 "차별화 전략"과 클러스터의 위상

1) 아이쿱이 맞닥뜨린 동형화 압력과 대응 전략

세계적 장기침체를 맞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급속하게 늘어 나고 있다 하더라도 전통적 기업, 또는 자본주의적 기업에 비하면 말 그대 로 "희귀하다". 따라서 자본과 인력에서의 열위, 투자자기업에 유리한 기존 제도로 인해 협동조합은 늘 "동형화 압력"(Dimaggio, Powell, 1983)에 시달리 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협동조합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 때문에 수직통합의 압 력을 받으며, 특히 유통분야는 한국의 최근 현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듯 이 연쇄점과 대형마트에 의해 강력한 비용 절감 압력을 받고 있다. 결국 협 동조합은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변하거나("타락") 아니면 사멸하게 될 운명 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예언이었다.

³ 논문을 쓰는 일과 비교해 볼 때 집안일은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다. 하지만 가정 주부들은 수많은 주먹구구를 루틴으로 만들어 상대적으로 쉽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어떠한 분야에 있는가에 따라 동형화 압력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협동조합마다 고유한 전략이 나타날 텐데 현 단계 아이쿱의 전략은 "차별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의 농업과 식품산업, 유통산업의 특성⁴에 고유한 동형화 압력이 아이쿱의 전략을 낳은 것이다. 아이쿱의 전략은 현재의 최고경영자(CEO)인 신성식의 책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독자적인 개념과 분류를 사용하여 앞으로의 전략을 정리하고 있는데(특히 6장과 7장)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품 차별화전략"이다. 그는 이를 "새로운 상품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만들어나가는 것"(신성식, 2014, p11)이라고 요약한다. 즉 동질적인 상품에 의한 가격경쟁에 의해서는 협동조합의 '가치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더구나 독점대기업이 '친환경 유기농 상품'과 같은 성장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같은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은 없다. 따라서 신 대표는 공동구매의 이점을 넘어서 새로운 상품을 통해⁵ 니치마켓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고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켜 결국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체 구상에서 클러스터는 "사업전략", 그 중에서도 제조분야(가공생산 분야) 대응단계에 속한다. 물론 클러스터의 속성 상 지역생산자회와 품목별 사업체로 요약할 수 있는 "(1차 농산물) 생산전략"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극장, 비어락하우스, 그리고 산부인과 개설 지원 등을 통한 문화적 기여, 귀촌의 거점으로서의 역할, 단지의 생태적 건설도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중요한

⁴ 헤디케의 논문(Haedicke, 2012)에는 미국의 자연식품협동조합이 맞닥뜨린 동형화 압력과 이에 대한 대응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기술조직적 대응(예컨대 각 지역 협동조합가게의 연쇄점화)과 규범적 대응이 갈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핵심 과제이다. 톰슨(Thompson,2015a,b)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러한 과제를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몬드라곤의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한국의 생협 운동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논쟁 역시 이러한 두 가지 대응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⁵ 공동구매와 새로운 상품은 각각 '생협'브랜드와 '자연드림'브랜드라는 이중 브랜드 전략으로 나타나며 독자인 증, 독자상품, 독자유통은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기본 전략이다.

역할이다.

결국 식품 및 유통산업의 동형화 압력에 대해 생산클러스터와 농업-제조 업 일관체계라는 기술경제적 대응과, 클러스터 내 기업의 노동자협동조합 화,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방문과 체험에 의한 조합원 정체성 강화, 지역공동 체에 대한 기여 등 협동조합 고유의 규범적 대응의 결합이 아이쿱의 전략이 다. 구례자연드림파크(그리고 앞으로 괴산의 클러스터)는 이러한 전략의 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공적 클러스터 전략 - 에밀리아로마냐의 경우

현대의 클러스터이론은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의 "산업지구"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산업지구란, 동일 산업의 전문화된 작은 규모 기업들이 특정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 마샬은 산업 지구의 특성으로 외부 경제(external economy)를 들었다. 즉 산업지구 내에서 전문화된 기업들 간의 분업이 심화되면서 숙련된 노동자의 풀이 형성되고 장기적인 협동적 거래 관계(요즘 용어로 전략적 동맹), 기업 활동을 고취시키는 지역 사회의 분위기(air) 등을 꼽았다. 이런 특성 덕분에 지구 내의 기업 간에는 물류비용과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전문 분야의 노동력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고를 늘리지 않아도 되고, 기술의 학습과 전파를 용이하게하여 잠재적인 혁신 역량을 강화해 준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클러스터를 구상하는 데, 이탈리아의 산업지 구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현대적 클러스터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포터 (Porter, M)도 1990년, 관련 기업 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대학, 연구 개발, 지방 정부 등이 연계된 산업 클러스터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이탈리아의 산업지 구를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특히 이탈리아 학자들은 이탈리아의 산업 지구를 기업과 주민의 공동체로 정의한다. 이는 공동체 내의 신뢰가 단순히 부수적인 요인이 아니라 필수적

요인이며 주민들의 동의, 다시 말해 민주주의가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에밀리아로마냐 지방의 산업 지구는 우리가 아는 클러스터와 는 구분된다. 클러스터 이론의 대표 사례인 미국 실리콘 밸리를 논할 때 치열한 경쟁과 정보의 교류가 두드러지게 강조되지만 민주주의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에밀리아로마냐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사회와 경제의 분리라는 경제 학적 이분법의 세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경제가 사회 안에 단단히 뿌리 박혀, 묻어 들어간 상태이자 상호성의 원리가 경쟁의 원리를 제약한다. 이탈 리아 경제학자들이 '시민경제'라고 부를 때 그것은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 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지역의 영세 기업과 협동조합이 홀로 외부의 대기업과 경쟁할 방법은 없다. 오로지 협동의 네트워크를 이뤄야만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는 산업 지구 내에서 자유롭게 공유되면서 지역 공동의 지식과 제도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장기 반복 거래와 평판 효과로 쌓인 신뢰는 각종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공식적 계약이나 제도보다는 비공식적 관계가 저비용, 고신뢰의 공유 자산이 된다. 만일 공동체 내의 규범을 어긴다면 지역사회에 발붙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구성원들은 강한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규범과 정체성은 다시 상호성을 강화하여 협동을 촉진한다.

80년대 이후의 환경 변화는 에밀리아 모델이 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과연 세계화와 정보 통신 혁명 속에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환경에서 에밀리아의 중소기업들도 몰락하지는 않을 것인가? 보통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자산 특수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수직적으로 통합되거나, 하청기업으로 전락하거나, 해외 이전하는 등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 일반적인 예측이었다. 즉 경제학자들은 협동조합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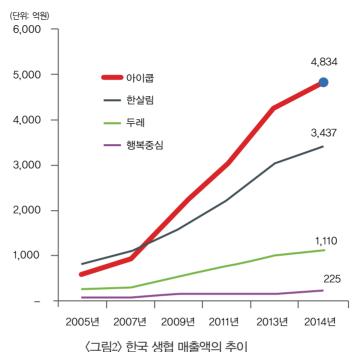
역 역시 동형화 압력을 받아 타락하거나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밀리아 주 정부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연합체들은 이러한 화경 변화 에 대해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수출 촉진 정책을 채택했다. 90년대에는 기술지구(technological districts) 프로젝트에 나 서 에밀리아로마냐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는 최신 기술의 혁신 클러스터(예 컨대 의료기기산업)의 면모까지 지니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혁신 기업의 창조를 부추기는 스피너(Spinne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10년 대에는 이들 기업에 전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술고등학교를 설립했다. 주정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을 이끌어냈다.

협동조합은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기술조직적 대응(제도)과 규범적 대응을 결합시켜야 한다.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산업지구는 클러스터를 통해 성공 적으로 대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이쿱 클러스터 전략의 평가와 발전 방향

〈그림 2〉에서 보듯이 아이쿱의 성장은 네트워크화에 의한 효율성 향상을 증명한다. 예컨대 정태인, 이수연(2013, p202)에 나오는 이론적 예측과 아이 쿱의 매출액 그래프는 정확히 일치한다.



출처: 아이쿱, 2015b, 『아이쿱생협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p5

하지만 다른 생협 역시 2006~2007년경에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은 한 국의 식품시장에 공통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짐작컨대 광우 병우려 쇠고기 촛불 집회, 멜라닌 파동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특히 친환경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작용했을 것이다. 2013년경부터 이 러한 성장이 한풀 꺾이는데. 여기엔 기존 식품대기업들의 대응도 한 몫을 했 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이쿱이 2008년경부터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한 단계 도약을 이루려고 한 것은 앞으로 식품 유통 대기업 들이 친환경 유기 농 시장에 들어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쿱의 클러스터 전략은 2008~2009년경부터 구상되어 2014년 4월, 구례 드림파크의 개장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1년의 성과는 눈부시다. 개장 후 8개월 동안 방문객 약 57,000명, 입주 기업 수 14개에 고용 384명(지역민 324명), 687억 원의 투자(민자 587억 원) 등을 통해 전남의 성공 사례일 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아이쿱, 2015a, 구례군, 2015. 정태인, 2014).

단 1년 만에 '클러스터 평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공부한 클러스 터 사례들에 따르면 최소한 10년이 지나야 클러스터의 네트워크효과가 본격 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에밀리아로마냐의 사례. 그리고 다른 클러스터와 몬드라곤의 사례에 비춰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발전 방향에 관해 몇 마디 덧붙이려고 한다.

우선 대학교 등 연구기관과의 공동 작업, 나아가서 연구소 유치를 제안할 수 있다. 현재는 아이쿱의 '공방'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 기업들 간의 정보 교 류를 넘어서는 생산성 향상을 이루려면 의도적으로 연구개발 기능을 결합 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레 발전한 몬드라곤이나 에밀리아로 마냐도 세계적 환경 변화를 맞아 대학교와 연구소의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증가시켰다. 중소 규모의 협동조합 클러스터의 경우, 돌파혁신보다 부가혁 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자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지식의 생산과 확산이 필요하다. 몬드라곤 모델을 이식하고 있는 미국의 클 리블랜드 역시 대학교를 클러스터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았다.

구례 부근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식품과학부, 경상대학교 농업생명 과학대의 식품자원경제학과, 농학과, 식품공학과 등 관련 식품관련 연구진 이 있고 경남과기대에는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도 있다. 이들과 의 교류를 통해 구례자연드림파크를 학습실험실(learning laboratory)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수매선수금 운동"과 "농지트러스트운동" 구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실천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이쿱의 장기 전략에 따라 "생산-소비의 상생협력 체제 강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전라남도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동체지원농업(CSA)" 정책(김봉진, 임형섭, 2009)과 아이쿱의 장기전략을 결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향일 것이다.

앞으로 괴산의 클러스터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아이쿱의 클러스터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장을 통한 새로운 질서의 수 립"이라는 아이쿱의 꿈은 실현될 것이다. icoop

〈주요 참고문헌〉

구례군, 2015. "구례에 부는 자연드림 나비효과」

김봉섭, 임형섭, 『공동체지원농업(CSA)의 도입을 통한 광주농업활성화』, 광주발전연구원,

신성식, 2014,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일마.

아이쿱생협, 2015a, "구례에 부는 자연드림 나비효과」.

아이쿱생협, 2015b, 『아이쿱생협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정태인, 2013, 「협동조합의 기업이론」, 사회경제학회 발표문.

정태인, 2014,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수의 힘」, 시사인.

정태인, 이수연, 2013,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

Alchian, A. & Demsetz, H., 1972,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ER, V62, Dasgupta, P. 2005, Economics of Social Capital, Economic Record, V81, Issue Supplement s1.

DiMaggio, P., Powell,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48.

Haedicke, M., 2012, Keeping Our MIssion, Changing Our System, The Socialogical Quaterly, V53,

Jensen, M., Meckling, W., 1979, Rights and Production Function: An Application to Labor-Managed Firms and Codetermination, Journal of Business V52,

Nowak, M. 2006, Five Rules f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V314, December.

Ostrom, E., 2010, Beyond Markets and States: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 AER, V100, N3.

Thompson, S., 2015a, Bringing Society Back into the Theory of the Firm, Cambridge Univ. Doctoral Thesis,

Thompson, S., 2015b, Towards a Social Theory of the Firm: Worker Cooparatives Revisited, Journal of Co-operativ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V3.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깊어내자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무엇인가?

2015년 들어 언론의 사회면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를 꼽자면 단연코 젠 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 할 수 있겠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는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 Glass)가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중사층이 이 주해 오면서 지역의 구성과 성격이 변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고 알려져 있다.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면서 적합한 우리말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들 있 지만 마땅한 표현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지역이 활 성화되는 분명한 긍정적 현상과 동시에 기존의 저소득층 거주자들이 밀려 나는 부정적 현상이 동반되는 양가적 의미를 지니기에 마땅한 용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낙후된 지역일수록 활성화 는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예술가나 사회 혁신가. 창조적인 소상인들이 주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으니 더할 나 위 없이 반가운 일이며 장려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을 마냥 좋게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지역을 활성화한 당사자들이 도리어 지역 활성화의 폐해로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홍대를 중심으로 독특한 인디문화를 형성해온 예술인과. 이들 이 만들어가는 공간의 감성을 함께 느끼고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빈도와 양이 늘어나면서 공간은 다양한 수요를 만들어냈다. 카페, 음식점 등을 위주로 한 각종 서비스 시설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 가치는 자연히 상승하게 되었다. 상승된 가치를 감당할 수있는 상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수입원이 불안정한 예술가들은 다시 활동 공간을 찾아 떠나고, 상인들마저도 프랜차이즈와 대기업, 자본가, 더 많은 임대료를 받고 싶어하는 건물주에 의하여 비자발적 이전을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다. 홍대의 가치를 올렸던 당사자들은 상수, 연남등으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으며 이젠 그곳마저도 지대추구의 장이 되어버렸다.

문화예술인들에게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 사회혁신 기업과 혁신가들이 몰려들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의 경우도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미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일부 기업은 이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성동구는 다른 자치구보다는 발빠르게 '상생지구'를 만들기 위한 자치구 조례¹를 만들어 현상을 막고자 하는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대는 해보아야겠으나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임대료 상승 붐을 행정 주도의 제안만으로 막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 일컫는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된 이슈다.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하고, 건물주가 지닌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회적으로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힘없이 쫓겨나고 마는 세입자들의 문제는 오래된 경험이다. 문제는 오랜 경험에도 불구하고 공간에서 사람이 배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공이나 현장 모두 좀처럼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사진 1〉 제트리피케이션이 밤생한 곳에서 한 노인이 팻말을 들고 있다(저소득층 주민을 내모는 제트리피케이션) 출처: http://kalw.org/post/your-call-what-does-gentrification-mean-you

개발의 양상과 주체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 여전한 공간 권력 의 행사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이러한 고민 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아마도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서 내놓아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

최근 새로운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나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만 보아도 활성화의 주체로서 주민, 청년, 사회혁신가 들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의 자산과 내부 역량에 기반한 관점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민과 지역자산(Community Assets)은 생산의 핵심 수단인 사람(노동)과 자본이라 할 수 있으며 마을과 지역의 발 전에 따라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것이라 기대케 한다. 하지만 앞 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기대가 가능하려면 지역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효과를 막을 방책을 사전에 만들지 않으면 밑 빠 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혜택은 일부에게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면 도심 곳곳에서 쫓겨나고 있는 세입자와 사회혁신 주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하고 건물주인 갑의 횡포에 원인을 돌리며 대중들로 하여금 현상에 공분하고 공감케 하는 데 집중하는 양상이다. 뚜렷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경제의 근본적 구조를 변화시켜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이기에 그렇다. 특히 견고한 토지의 소유 구조를 변화시키자고 이야기를 꺼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

변화가 요구되는 토지의 소유 구조라는 것이 무엇일까? 앞에서 생산의 주 요 요소로 노동과 자본을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토지, 바로 '땅'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취해왔던 방식들은 현대에는 더 이상 유용 하지 않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이 공간이 살기 좋은 곳이 되고 활기찬 곳이 되는 곳에서 더더욱 적합하지 않은 방식임을 시대적 현상이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토지를 다루는 방식의 전환을 이야기해야 하며, 그에 대해 아마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으로 소유함을 기본으로 한 다. 이는 나눔과 호혜를 불러일으키는 대안적 소유 방식에 관한 것이다. 상호 성에 기반하고 신뢰와 협동을 통해 연대를 이루어내는 사회적경제는 인간 의 상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자 연스럽게 소유의 구조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흔히 지역 개발이라고 하 는 것을 사회적경제 관점으로 해석할 때에는 사회적 소유. 개발. 이용. 투자. 가치공유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이 맞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소유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의 하부구조이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소유 구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소유 구조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마조리 켈리는 『그들은 왜 회사의 주인 이 되었나』라는 책에서 '생성적 소유'와 '추출적 소유'로 소유의 성격을 구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유 구조에 대한 변화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적용받고 있는 소유 구조는 추출적 소유에 가깝다. 소유의 목적과 주체, 그리고 자본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생성적 소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유의 구조				
추출적 소유	생성적 소유			
1. 금전적 목적 : 단기적 이익을 최대화	1. 삶을 위한 목적 : 장기적 시각으로 삶을 위한 조건을 만듦			
2. 부재자 구성원 : 소유한 이들이 기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2. 뿌리내린 구성원 : 기업 활동의 기반에 뿌리내리고 살아가 는 사람들의 손에 소유권이 주어짐			
3. 시장에 의한 통치제 : 자본 시장이 자동항법 장치로 기업을 통제함	3. 사명 경영 통치제 : 사회적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통 제함			
4. 카지노 금융 : 자본이 주인 노릇을 함	4. 이해당사자 금융 : 자본이 친구가 됨			
5. 상품 네트워크 : 가격과 이윤에 초점을 맞춘 거래	5. 윤리적 네트워크 : 사회적, 생태적 규범에 대한 집단적 지원			

출처: 마조리 켈리(2013), 35p.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소유는 시스템의 최초 조건이다. 어떤 시스템을 갖추느냐는 사회적경제에서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협동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토대이자 연대에 이르는 길을 놓는 일이다. 그래서 이 소유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은 혁명에 가깝다. 이러한 '소유 혁명은 경제 권력을 소수의 손에서 다수의 손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회적 유익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마조리 켈리는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성적 소유구조로의 변화를 쉽게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소유의 구

조가 '국가(국유)' 그리고 '시장(사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둘밖에 없다고 교육받고 경험하며 살아온 것이다. 마조리 켈리는 책에서 "소유한다는 것, 자본주의에서의 사유와 사회주의에서의 국유는 결국 '소수'에 의한 지배라는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소유'가 권한을 가지고 '지배'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속한다(Belonging)'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국유와 사유를 뛰어넘는 속함의 소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는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의 공저서인 『공통체』에서도 나타나는데, 저자들은 공통적인 것을 지키려는 다중의 사회적 투쟁은 바로이 사유화, 사적 통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사유화, 소유, 사적 통제의 대안 선택지로 공적인 통제, 국가 통제를 이야기한다. 자본주의사회 병폐의 유일한 치료제는 공적 규제와 케인스주의적 국가 개입 또는 사회주의적 경제 관리라거나, 사회주의적 폐해를 바로잡는 건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적 통제뿐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다. 네그리와 하트는 이 사적이냐 공적이냐, 또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정치적 양자택일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보기에는 양자 모두 공통적인 것을 배제하고 파괴하는 소유체제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다시말해서 공통적인 것을 품고 생성시키는 소유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 사회에 공통적인 것을 파괴하고, 일하는 자들의 몫을 지대의 몫으로 추출해내며,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들었고 누려야 할 것 들을 직접 참여하지 않은 소유권자가 단기에 이익으로 삼는 악성적 소유구 조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내야 하는 과제를 받아 안고 있으며, 이제 그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들을 찾아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해외 사례와 대안 찾기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등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생활경제의 대안적 방식들이 논의되고 실험되는 혁신의 시대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슈가 등장한 것은 위기를 적기에 인식한 것이며, 오히려 전환을 위한 기회의 순간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위기의식과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은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으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해서 관련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구조화하는 구조'에 대해 고민해보자.

2015년 뉴욕에서는 재미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아티스트 Caroline Woolard은 작업실 임대료가 급등하는 상황을 보며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혼자 대응하기에는 버겁고 뭔가 함께 힘을 모아 해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친구 Paula Segal과 함께 상상을 현실로 옮겼다. 이름도 생소한 부동산투자협동조합(REIC, Real Estate Investment Cooperative)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당사자들부터 힘을 모아 해결해보자고 제안했고, 그들이 구상한 것은 상인, 예술가를 위한 건물을 시민들이 함께 투자한 돈으로 확보하고 운용하면서 뉴욕 시내에 독특하고 개성 있는 거리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들의 삶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투자수익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위한 목적으로 부동산투자신탁(REIT)과 협동조합(Co-op)을 결합시켜 뉴욕부동산투자협동조합(NYCREIC)을 설립한 것이다.

기본적인 운영 모델은 협동조합, 공동체토지신탁(CLT), 부동산투자신탁 (REIT)의 결합 모델이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방식으로 투자자와 사업 참여 자를 모으고, 공동체토지신탁(CLT)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 운용하며 자금을 다양한 영역에서 모을 수 있는 주요한 그릇(Vehicle) 역할을 부동산투자신 탁(REIT)의 역할에서 참고하여 시민, 공공, 민간의 다양한 참여로 부동산 관

리를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진 2》 부동산투자협동조합 첫 모임에 모인 뉴욕 시민들(2015년 5월 28일) 발표자의 노트북에는 "우리는 지역, 문화, 그리고 협력적인 이용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에 우리 스스로 돈을 모으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출처: http://nycreic.com/

이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REIC협동조합을 소개하는 글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뉴욕부동산투자협동조합은 상인,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문화단체 등에게 영구적으로 지불 가능한 공간(상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가 투자하는 협동조합이다. 우리는 뉴욕에서 지불 가능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인 힘과 인내자본을 기반으로 하다."

뉴욕부동산투자협동조합은 올 초 본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해 4월 28일에 200명의 조합원이 가입했고, 올해 5월 28일에 첫 조합원 총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사들여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있으

며, 민간 부동산도 확보하려는 계획이다. 이들이 이러한 협동조합을 구상하게 된 것은 이전에 이루어진 다양한 시도들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4년 전 미네아폴리스 지역 주민들이 선보인 Northeast 투자협동조합(NEIC)의 사례를 보며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NEIC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투자협동조합으로 미네아폴리스의 지역 주민 200여 명이 1,000달러(한화 110만 원)씩 출자를 하고 세 곳의 빈 건물을 매입해서 자전거숍, 빵집, 동네 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이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 기반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는 기폭제가되고 있다.



〈사진 3〉미네아폴리스 중앙로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부동산 출처: http://www.ilsr.org/do-it-yourselves-downtown-investment-cooperative-model/

미네아폴리스²와 뉴욕의 시민들에게도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² NEIC의 성공 배경에는 지자체와 공공의 지원이 있었다. 우리도 자산운용사와 같은 부동산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50억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 주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NEIC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까다로운 등록 절차의 예외를 인정해주었다. 미 국에는 절반가량이 이러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사례를 추가로 살펴보면 ACCA는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정부 기금으로 지역 자본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다. 두 번째로 지역 조례는 연금을 직접 활용할 수

유용하며 생성적 소유를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자본 이득에 대한 배분 지가 상승에 대한 토지가치 공유를 스스로 만들어내 는 일에 적잖은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시장의 전략과 공동체적 가치를 결합시키는 일, 사회적경제가 이론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에서, 그것 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자본력과 공간 권력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 에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우리는 왜 그동안 우리 스스로 또 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부동산을 소유하고 공간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젠 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생각과 시도를 과감하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숱하게 말하고 들었던 마을공동체. 내발적 지역 발 전, 도시재생 아닌가 말이다.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사 용하며 수익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는 것, 더 이상 절대적 사유 권력에 당 하고만 있는 나약한 사용자가 아닌 공간의 소유자이자 가치 창출자가 되려 는 시도이다. 개인이 가진 자금의 수준은 미약하지만 미약한 개개인이 함께 모이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위의 사례들을 보 면서 마음속에 약간의 질투심과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당신도 이제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가 될 준비가 된 것이다.

지역이 활성화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오른 가치가 소유자에게 독점된다는 점에 있다. 우리 사회는 이 가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부실하다. 부동산 보유세가 유명무실해져 있고. 건물주의 권한이 조물주 위에 있으며, 가치를 생산해내는 실제 주체인 세입자와 공간 을 찾아오는 시민들은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젠트리피케 이션 현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구조로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우리 사

있게 하고 이런 유형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을 많이 만들어둔다. 노바스코티아 등과 같은 몇몇 캐나다 지역 에서는 투자세감면프로그램이 있다. 최대 35%까지 세제 감면을 해주고 상한액은 17,500달러에 이른다. 토 바스코티아에서만 15년 간 6,400만 달러가 지역에 투자되었다.

회의 질병이기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

일본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경제는 가치의 운동이다. 가치는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이 무시된 경우에 경제는 유물적인 것으로 기울고, 반 의식적으로 되었을 때 착취와 자본주의가 생긴다. (중략)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 성원이 착취를 벗어날 수 있는 상호우애의 의식적인 자각 없이 완전한 협동조합의 운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상호우애의 의식적인 자각과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운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운동은 공통적인 것을 향한 기획을 요구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부와 자원의 관리에 적합한 집단적 자치의 형식을 발명하자'고 요구하는 네그리와 하트의 주문은 지금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깊게, 서둘러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위에서 다룬 처방의 한 예는 시스템 최초의 조건인 소유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떤 시스템을 갖추느냐는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협동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토대이자 연대에 이르는 길을 놓는 일이다. 그래서 이 소유의 구조를변화시키는 일은 경제 권력을 소수의 손에서 다수의 손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회적 유익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왜 회사의 주인이 되었나』의 저자 마조리 켈리도 이것을 강조한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심화되는 곳 중 하나인 마포에서는 '시민 자산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구상되고 있으며, 부동산투자협동조합을 꿈꾸는 청년들도 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직접행동을 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반갑다. 이러한 시도들이 의미하는 것은 공간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원리인 '생산적 자산의 소유권을 민주화'하는 것이기에 우리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시민의 행동이다.

한국 청년들의 꿈이 '임대사업자'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무척이나 씁쓸하다. 어쩌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 꾸는 꿈아니겠는가?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작은 제안을 해보자.

조금 다르게 사고해보자는 것이다. 개인적 유익을 위한 임대사업자로 만족하려는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지역 기반의 소상인들, 예술가들, 청년들, 혁신가들의 삶터를 공급해주는 임대사업자를 꿈꾸어보자. 뉴욕부동산투자협동조합처럼 마포부동산투자협동조합, 서울부동산투자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해보자. 이 협동조합의 조합위이 되는 일, 그것이 당신이 꿈꾸는 '임대사업자'가 되는 일 아니겠는가?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도 몇 마디 첨언을 해본다면, 현재의 소유권 구조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도시재생을 아무리 해도 공동의 자산을 소유, 운용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에는 제도적 한계에 놓여 있다. 국유재산 물품 관리법에서부터 '공동체소유권'을 새롭게 도입하기를 바라고 시민과 공동체가 자산을 소유하려 할 때에 소유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소유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하며, 운영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영국의로컬리즘법(Localism Act)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고, 해외의 다양한 지역자산화 지원정책들을 참고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를 당부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 우리가 직접 생성적 소유주가 되는 일이며, 그것 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함께 CO-OP 하는 일이다. iccop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때/곳: 2015년 8월 13일(목)/ 성공회대 새천년관 7706호

참석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균(『골목사장 생존법』 저자)

선민(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¹ 조직국장) 위성남(마포구마을생태계지워단 단장)

사회/정리: 손범규((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사회: 작년에 방영된 〈PD수첩〉의 1000회 특집, '임대업 이 꿈인 나라' 편을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평범 한 일반인부터 심지어 초등학생조차 자신의 장래희망 을 임대업자라고 말하는 현실, 노력과 노동으로 얻어내 는 소득의 가치보다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의 가치 가 훨씬 큰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꼬집는 내용이 었습니다. 이 현실은 특별한 개선 없이 아직도 현재진 행 중이고,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표현으로 논의 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사업체를 통 해 지역사회 재생을 꿈꾸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조직에 게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좌담 회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현장 이야기로부터 문제의 심각성과 본질, 그리고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려 합니다 우선 각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사례와 이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의 본 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¹ 임차상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거래 관습을 바꾸고,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여, 그저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문 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임차상임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김남균: 제가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한 것은 초등학 교 때인 1984년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집은 동승동 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학로가 만들어지면서 동네가 빠 르게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주택가였는데 카페. 소극장 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위가 상가로 변하고 이웃들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젠트리피 케이션을 오래전에 목격 한 된 셈이죠. 이후 똑같은 일 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6년 즈음, 서교 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곳은 20여 년 전 동숭동의 느낌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카페가 꽉 찰 것 같으니 빨 리 카페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젠트리피케 이션이 사회적 문제란 인식이 전혀 없을 때여서, 오히 려 '부동산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도 사볼 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장되었습니 다. 예를 들어 카페가 20개 정도 생길 거라 예상했는데 200여 개가 생겼고. 동네의 범위도 4개 골목 정도로 예 상했는데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골목에 상가 젠트리피케 이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비정상이라는 걸 감지 했습니다. 마치 작전 세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에 함께했던 예술가들이 대거 외부로 이동했고. 이들과 함께 일해왔던 저는 오히려 재료가 떨어지는 품귀현상 을 겪었습니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본질은 자 본주의사회 내에서는 (명목화폐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통화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높여가야만 하는



김남균(『골목사장 생존법』 저자)

속성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 전에 살았던 동충동은 사대문 안이었고 여기에는 문화적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인근에 있는 동대문시장은 시쳇말로 '보따리 들고 이사 와 서 그랜저 타고 나가다'라고 할 만큼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돈을 벌어 이사 간 곳이 지금의 반포, 강남입니다. 그 후 분당, 일산, 용인, 판교… 이 렇게 강남과 신도시로 옮겨 간 돈이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막히자 다시 구도심의 문화 인프라를 맛보기 위해 돌아오면서 돈이 계속 팽 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팽창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더 팽창시 키고자 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 아 버지도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월남을 다녀와서 그 돈으로 상 경하여 종자돈으로 집을 사고 근저당을 잡아 강남 쪽 아파트를 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값이 오르고 이것을 팔고 다음 집을 사고 그 수 순은 이 시대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방식과 거의 일치합니다. 당시 영 동신시가지의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 사촌 명의까지 빌려 아파트를 사기 도 했고, 소위 딱지를 사고팔기도 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규제를 강화하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대에 한해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미래 세대가 가져야 할 것을 모두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목도한 자녀 세대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이 방식에 합류하고 싶어합 니다. 결국 나도 열심히 해서 임대업자가 될 수 있다는 꿈 때문에 결국 다 같 이 공범이 되는 꼴입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투쟁 현장이 보도되어 밑에 달린 댓글을 봐도 임차인의 편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 에 혹시라도 내가 임대인이 될 때를 생각해서 임차인의 편이 되어줄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성남: 몇 년 전부터 성미산마을에 있는 〈작은나무〉 카페 건물이 팔릴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마을에서 중요한 커뮤니티 공

간입니다. 마을의 고참으로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작년 김남교 씨와 의 어느 인터뷰 자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 를 처음 들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상권(商圈)의 젠트리 피케이션 현상이라는 용어가 〈경향신문〉에 언급되었 습니다. 상권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습 니다. 이를 어떻게 표출해야 할까 고민하다 포럼을 열 었습니다.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마을공동체 활 동가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동네 입장에서 보면 제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단일한 원 인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사실 땅값이 오르는 현상이 마을 활동의 결과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미할지 모르나 마 을 활동이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마포 연 남동은 경의선 숲길공원이 개장되어 사람들이 많이 찾 게 되면서 땅값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데 공원 개장 전부터 '따뜻한 남쪽시장'이라는 마을 시 장 등의 마을 활동을 열심히 해오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지역 분위기를 바꾼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오르면서 이런 활동 단체와 인근에서 가 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개인 활동가들은 마포에 못 살 고 인근 자치구로 이사를 가거나 서울을 떠나야 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역에서 활동한다 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 다. 재주 부리는 곰처럼 열심히 마을 활동을 하면 당연



위성남(마포구마을생태계지원단 단장)

히 땅값이 오르는데, 결국 성과물은 확 빨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 활동가 입장에서는 '여태껏 마을 활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나'라는 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각 지역마다 온도차가 있고, 지방에서는 아직 먼 이야기이고 뜬금없다 느낄 수 있지만결국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진걸: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대 추구, 불로소득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금지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법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많은 분들이 마을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택세입자와 상가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마을 만들기는 허망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 중에 '마포FM' 활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 있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일산으로 주거지를 옮겨야만 했습니다.마을 만들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개입하고 참여해야 합니다.한국사회는 장사가 안되면 안되는 대로 문제고, 피땀 흘려노력해서 장사가 잘돼도 건물주가 이 상황을 모르기를 소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선민: 저는 직접 카페를 운영하다가 쫓겨난 경험이 있 습니다. 방화동에서 지역문화 활동을 꿈꾸면서 공간을 꾸렸었습니다. 커피를 팔던 곳에서 점차 공연이나 문화 모임 등을 가졌습니다. 후미진 뒷골목에서 상권을 일궈 낸 개척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골목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권리금이 없었는데 쫓겨날 당시에는 약 3천~5천 만 원까지 생겼습니다. 지역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며 하나둘 모이 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단골이 되고, 나중엔 제 카 페를 지키는 운동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이 쿱생협 조합원분들도 계셨습니다. 대책위도 이분들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동산 개발업자와 건 물주 단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쫓 겨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 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이유로 쫓겨난 임차상인들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서 논의를 이어오다 맘상모라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 후 임차상인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현실에 대해 사람 들이 알아야만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인 이슈 담론화 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오고 있었는데 작 년부터 언론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가 나오기 시 작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이 현상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며 반가웠습니다. 젠트리 피케이션의 실제 사례를 보면 서촌, 홍대 등에서 월세 폭등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가들이 모여 서 공간을 꾸미고 특색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알려



선민(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조직국장)

지면 상권이 형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투기자본이 들어옵니다. 목돈을 가진 사람들은 은행이자 수입이 적으니까 최대의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를 임대하려 합니다. 이를 파악한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신사동, 홍 대 등등의 거점을 미리 꿰차고 준비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써서 그 지역의 등기부등본을 미리 다 확인하고. 경제 위기에 처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리모 델링해서 되팝니다. 이때 기존 상인을 내쫓고 없던 권리금까지도 챙깁니다. 그러다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금액의 두 배 내지 그 이상의 가격으로 목돈 쥔 사람들에게 대출 가이드까지 하면서 되팝니다. 그렇게 바뀐 건물주 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이자 부담을 이유로 임차상인들에게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월세 폭등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민들 에게 계속해서 부동산을 사라고만 합니다. 결국 제트리피케이션 현장에서는 임차상인만 봉입니다. 상권을 일구는 개척자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그들의 재산과 노력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에 서는 이 문제의 본질이자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중간에 언급한 기획부동산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확대시키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김남균: 저희 동네에 있는 P부동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P부동산의 테크닉은 이미 많은 부동산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매를 할 때 돈을 가장 많이 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임대 차를 중개하는 것은 돈이 별로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수익은 크게 매매로 생기는 중개수수료, 상가임대차로 생기는 중개수수료, 없던 바닥 권리금을 있는 것처럼 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금액. 그리고 임차관

리로 생기는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매매 수수료율은 0.9%로 법상 상한이 정 해져 있지만 실상은 그 이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중개업 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건물 매매가 제일 수익성이 좋습니다. 매매를 하고 나 서 금세 다시 매매가 이뤄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자는 다음과 같 은 포트폴리오를 짜기 시작합니다. 일단 건물이 팔려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 이트를 시켜서 특정 지역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봅니다. 그 중 가장 허약한 건물부터 공략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건물가가 10억인데 빚이 너무 많고 이 자 내기가 어려워 급매를 하려는 건물을 발견하면 그 건물주를 공략하여 팔 게 합니다. 그런 후 새로운 건물주에게는 건물을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면 추가 수익이 생긴다고 부추기고, 기존 임차인들은 내쫓습니다. 법적으 로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들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2 익차인들에게 대충 리모델링하니까 나가달라 하면 알아서 다 나갑니다. 그 렇게 기존 임차인을 내쫓고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나서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임차인들을 들입니다. 이때 임차인들에게 없던 권리금도 받아낼 수 있고 중개수수료도 챙깁니다. 심지어 건물의 임차인이 카페를 한다고 하면 카페에 대한 컨설팅도 합니다. 연이 닿아 있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카페 인테 리어까지 알선하면서 알선수수료도 챙깁니다. 그러다가 장사가 잘되면 월세 를 한 번 더 폭등시킬 것을 부추기고,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면 임차인을 다 시 내쫓습니다. 더 큰돈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다시 매매를 시도하기 위 함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획부동산은 이런 방식으 로 돈을 법니다. 심지어 기획부동산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다수입니 다. 한편 무리하게 월세를 올려 장사가 안되면 건물에 공실률3이 생깁니다.

²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 때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임차인이 3기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거나, 건물 멸실 및 재건축 등이 이뤄질 경우, 임대인이 합의하에 이뤄진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1항).

³ 상가나 건물 등이 얼마만큼 비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한다. 건물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실물경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잣대 가운데하나다. 경기가 나빠지면 폐업이 늘어나고 사업장 규모를 줄이게 마련이어서 공실률은 높아지게 된다. 반대

공실률이 생기면 건물주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또다시 매매로 내놓습니다. 결국 장사가 잘돼도 잘 팔고, 안돼도 되파는 구조인 것입니다.

안진걸: 기획부동산을 보면 결국 법망을 피하는 것인데, 직업윤리까지도 엉망입니다. 물론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기획부동산이 없어도 발생합니다. 건물주가 영악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부동산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상가임대차 등 중요한 일을 중개하는 직군인데, 이들에게 법적 제제와 직업윤리를 동시에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주의 개발 방식은 다양합니다. 건물주가 그렇게 할 때 '함께 사는 동네에서 그럴 수있느냐', '지역에 있는 기존 상인들이 다 쫓겨나면 문화 백화현상이 일어나결국엔 건물주도 손해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임차상인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 논리도 상당합니다. 일례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월세가 오르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결국 세수도 많아져 공공서비스가 좋아진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 때문에 지역 개발을 미룰 수는 없다', '건물주도 거액의 리스크를 부담하고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이다. 이들을 단순히 악덕 건물주로만 취급할 수는 없지 않은가?', '권리금 차익으로 크게 이득을 보는 임차인들도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또 현행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등의 의견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반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남균: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는 세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재 개발을 합니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과거 몇 몇 시나 도에서 한나라당 시장의 주요 공약도 그러했습니다. 거시경제로 지

로 경기가 회복되면 사무실 구입 또는 임대수요가 늘어나 공실률은 줄어든다. (출처: 다음백과사전)

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이었죠. 거액의 부채를 끌어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긍정적 효과를 본 경우도 있지만 큰 리스크를 지게 되어 다음 시장이 모라 토리움(moratorium)⁴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KO시킨 적 있는 복서가 이종격투기 선수를 만나 똑같은 방법을 시도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일단 앞을 보고 가 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와 삶의 질이 다르고 사 람들이 원하는 지점은 비교도 안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니즈(needs)가 다양 해졌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마치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무책임하고 모순된 구호와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고 부자 되어봅시다'라고 할 때.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바로 1.100 조에 가까운 가계빚입니다. 지금 주택 상가 할 것 없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 작용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은 몇 배가 될 게 뻔합 니다. 왜냐하면 가계빚의 상당 부분이 지대에 묶여 있고 경제성장률은 바닥 을 치고 있어 돈이 잘 돌지 않으니. 정부는 그 대책으로 낮은 금리의 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봐야 또 빚은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이 런 구조 속에서 갈수록 부실부채가 되는 가계빚을 못 갚으면, 결국 그 빚은 땡처리되어 금융시장을 전전긍긍하다가 정부에게 이전되게 될 것입니다. 이 처럼 계속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정부는 그 많은 빚에 대한 해법 을 내기보다는 또다시 부동산을 통해 세수를 확장하는 식의 미시적인 고민 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는 거시적인 경제흐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시적인 흐름으로 접근해서 모 순된 정책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때문에 낙후 되고 있는 우리 지역만 개발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식의 사고도 문제입니 다. 각종 협약이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우선

⁴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하여 진행하고, 그다음 개발을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옥수동, 금호동 무너뜨린 것처럼 여전히 도시재생이나 개발 논리는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도 거액의 리스크를 부담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는 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너무 큰 이익을 바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권리금 차익을 노리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합정동, 성수동이 뜨기 전에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사람들의 자본이들어와 권리금 차익을 노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상 큰 차익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끝으로 흔히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당연한 것이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 자본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자본주의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대의 값이낮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본주의의 본고장이라 할 수있는 영국의 경우 '공정임대료'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의부작용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위성남: 아담 스미스(Adam Smith)도 지주의 지대와 자본가의 이윤이 충돌하기 때문에 지대는 낮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진걸: 기존 임차인들이 쫓겨나면 주변 상권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기존 단골이 그대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손님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건물주는 세금 탈세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과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대소득은 탈세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인은 합산과세 시키면서, 건물주는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 합니다. 지역 개발은 세입자 친화적으로 해야 합니다. 원주민이나 세입자가 잘하면 지역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신촌 주민들이 변화된 신촌의 문화를 보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 대학

가의 명성은 없어지고 유흥가로 변화하면서, 오히려 임대료를 내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투자에 대해 뭐라 할 수 없지만 투자를 하려면 생산과 연결되어 있는 분야에 해야지 부동산과 같이 공공자산 토지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부도덕합니다. 아무리 자본주의여도 착한 자본주의와 나쁜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베버(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필요합니다.

선민: 임차상인 입장에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많은데,이것이 단순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유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을 재건축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임차상인들을 그대로 두어 상권을 형성하고 자연스레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마을만들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서 불합리한 것이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단순히 개발의 찬성 유무로 보면 안 됩니다.

사회: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임대차 관련 문제들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해야 할 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맹점 혹은 한계는 무엇인가요?

선민: 언론에서는 지난 5월에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현장의 피해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기존의 법 안에서 법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상가법에 있는 예외조항들은 임대인이 임차상인을 내쫓는 데 취사선택하듯이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외조항들을 이번 법 개정에서 삭제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의 마지막 희망인 권리금조차 빼앗긴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겉으로는 임차상인을 보호해주겠다 하면서 예외조항들은 그 대로 둔 채 권리금 특별조항만을 끼워 넣어 발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외 조항은 건물주가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다는 조항입 니다. 그밖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원흉 역할을 한 '환산보증금'5은 불합리 하고 무의미한 조항임에도 개정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건물주가 상가 건 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임대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임대인의 임대수익 의 권리 침해가 없는 한 임차상인은 사정이 생기면 기간에 상관없이 상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바뀐 법은 5년의 계약기간 끝나기 전 3 개월 이내의 양도 양수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임차상인의 사정으로 언제든지 양도 양수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상 권리 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계약 종료 전 3개월로 제한 축소된 것 입니다. 이로 인한 양도 양수 방해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 어보죠. 만약 임차상인이 업종을 잘못 선택해서 적자를 최소화하려고 투자 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고 권리금을 낮춰 가게를 2년 만에 양도하려 할 경우 나 식당을 직접 운영하던 여성이 출산일이 다가와 빨리 가게를 양도해야 하 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현 개정안은 5년을 무조건 채워야 3개월 이내의 양도에 대해서만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피해 상담이 하 루에도 2~3통씩 속출합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임차상인의 양도를 방해하 는 새로운 법이 생겨버린 꼴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초역세 권은 무권리금화 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월세와 보증금의 가치에 녹여서 권리금이 있을 때의 월세가 몇 백이었다면. 권리금은 없고 억 단위의 보증금 과 천만 단위의 월세를 받으려는 현상입니다. 또한 그런 역세권에서는 건물

⁵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월세 X 100) + 보증금으로 계산하며,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이 액수가 4억 원 이하면 임대료 인상폭을 9% 이하로 제한 한다. 바꿔 말하면 4억 원 이상이면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⁶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18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주가 1년 반 동안 건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권리금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투자인 것입니다. 일단 임차상인을 내쫓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입니다. 보통 권리금 시세가 월세의 약 30~100배이기 때문에 1년 6개월간의 임대수익 손실은 임대인이 이후 새로운 임차상인을 들여서 받게 되는 권리금으로 손실을 제하고도 몇 십 배의 차액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방법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단순히 기존에 문제됐던 예외조항들만 개정해주면 되었던 것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임차상인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는데도불구하고 말입니다. 법안 개정 TF팀에서는 임차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개정안에는 저희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안진걸: 이번 상임법 개정안은 일부 진전도 있지만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임차상인이 부당하게 빼앗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 것⁷이 그 예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은 관이 직접 나서서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에 여전히 문제가 많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보장 기간이 5년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하면 끝까지도 가능해야 하고, 5년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의 선택권은 임차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에게는 임대수입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법제를 보면 본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건물 붕괴 위험 등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주거공간에서도 임대차 보호 기간은 유지됩니다. 프랑스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 내는 이상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주민

⁷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전원이 서명한 경우에는 계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 외에 공동체적 해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토지는 100% 공공재이므로 토지에 짓는 상가도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당장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상인들의 권리금이라도 무사히 받고나갈 수 있게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가 창업 전문가들은 최소 7~10년은 해야 초기 투자금(임대료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이 보장된다고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맘상모가 결성되어 투쟁해나가면서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재건축 시에 건물주가 사전에반드시 고지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선민: 재건축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재건축에 관한 법 개정이 논의될 때 어떤 위원이 '나도 건물주인데 1층의 가게 2곳이 너무 낙후되어서 내가 내 돈 들여 고치는데 굳이 내가 왜 보상을 해야 하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언어와 논리가 없어서 억울했는데,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권리 양도 양수 거래란 바닥권리를 보고 거래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건축을 해서 높은 월세뿐만 아니라 바닥권리금도 건물주가 결국 챙기게 됩니다. 또는 부동산업자가 나눠 챙깁니다. 그 가치는 당연히 쫓겨나는 임차상인에게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권 침해는 민법에서 엄격히 보호되는데 임차상인이 가게 한 켠을 얻으려 들이는 권리금과 재반시설투자금 또한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제는 임차상인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자들의 인식 전환이 절박합니다.

김남균: 오래된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 9%라는 법이 없을 때에는 보통 5%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법이 상한 12% 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기대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9%를 법으로 정하면 누구나 최고치인 9%까지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법에서는 9%를 협상이

라 하고 있지만, 실제 건물주가 9% 올리길 원하는데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에는 상한 9%를 어떻게 정한다 하는 규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법의 맹 점인 것 같습니다. 왜 9%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물가상승률 기준으 로 2배라는 식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독립된 기 구에서 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지자체별로 경제활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산보증 금을 없애기 힘들다면 차라리 지자체 단체장이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는 법무부에서 결정합니다. 지역마다 경제상황 이 너무도 다른데 말이죠. 지자체장도 선출직이니 그들이 공약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임대차법 일부의 결정권을 줘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많은 곳에 는 임대사업자가 유리하게, 임차상인이 많은 곳에서는 임차상인에게 유리하 게끔 공약을 걸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법안 관련 공청회에 갔을 때 이를 연구했던 법무부 TF에 있던 연구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생각이 전 향적이었습니다. 평소 관심이 없다가 실태 조사를 하면서 보니 이 법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연구원들이 입을 모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한꺼번 에 바꾸면 경제적 충격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개정한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현행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이들 연구원들처럼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되 어 있는 것을 조례로 내리는 방식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한 해 민사 소송의 11%인 3만여 건이 명도 및 강제집행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 송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영세 상인들일텐데 이들의 사회적 충격을 덜어주 고 경제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사회는 계속해서 병약해지 지 않을까요? 가계빚만 1.100조입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의 빚이 상당합니 다. 이를 점층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올바른 법 개정 이 필요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영세 상인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제발 그만했으면 합니다. 영세하다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세 상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상대적인 약자를 위한법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법의 일부를 조례로 내리고, 특별법으로 유지할 것은 하면서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부터 유발되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볼 수 있을까요? 혹은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해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김남균: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 인식 의 전화을 하겠느냐가 의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들어보자면, 일본의 경우 이 런 판례가 있습니다. 새로 바뀐 임대사업자가 재건축을 이유로 기존 라멘집 을 하는 임차상인을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냥은 아니고 8억 정도를 주는 조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멘집 임차상인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 원으로 갔는데, 이에 대해 판결은 새로운 임대업자의 재건축도 임차상인이 계속 있고 싶은 것도 둘 다 이윤을 위한 것인데 보상금 8억은 적으니 임차상 인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며 라멘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에서는 25억을 준 임대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며 충분히 보상했다고 보고 임 차인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임대차 관계와 사뭇 다른 판결이어서 부럽기도 합니다. 한국의 임대차보호법은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었지만, 판결도 환 경도 임대업자에게 많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 시사점이 큰 판례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파례가 가능할까요? 현행법과 사법부의 구조상 힘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법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평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하고. 조례가 생겨 협약 체결 등 지자체 내 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협약은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요즘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때 구나 시의 예산으로 잡힌 지원금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늬만 상가회 같은 단체들이죠. 만약 이처럼 악용하는 경우 받은 지원금만큼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몇 배 더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여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지원금이나 예산을 짜고 있는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협약이나 협약을 위한 지원금정책을 서두르기보다는 사전 교육을 잘하고 실태조사를 다각도로진행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성남: 현장에서는 법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일본 희망제작소 대표를 만나 작은나무 카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법적으로 우리처럼 쉽게 임차인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년 가게'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법 개정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적 소유가 아닌 공동의 소유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소유로 가야 주체성이 생기고 사람들을 연결하기도 쉽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특정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기반의 모든 크고 작은 사업체들의 수익금을 사회적 환원한다는 취지로 지역공동체에 되돌려 공유자산을 형성해서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공동의 소유 영역을 확보하고, 거점을 만드는 작업을 지역별로 추진해야 하며, 그런 흐름으로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선민: 월세 비례로 임차상인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

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지만 법 개정이나 사회인식 변화는 너무 오래 걸리고 현장에서는 당장의 답이 필요합니다.

안진걸: 사회적경제가 함께 사는 경제, 작은 단위에서의 공동체 경제를 이야기하듯이 지역경제의 핵심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돈도 벌면서 지역에 환원하고(어린이 도서관에 투자하거나, 마을 영화관을 만드는 등), 동시에 돈을 벌지만 남을 착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임차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임차상인이 열심히 일하면 먹고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도의적, 상식적으로라도 함께 살자는 그런 호소에 마음을 바꾸는 건물주도 아주일부 존재합니다. 함께 살자는 꿈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들과 임차상인들 간에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 해결이 마을 만들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법 개정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성미산이나 망원시장과 같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문제라고 나설 때, 국회에서는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임차상인들이 잘되어야 우리 동네가잘되고, 돈 벌어 투자도 하더라'라는 생각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사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어떤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마을 만들기를 해나가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맞닥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대비하고 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서 마무리 발언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결국은 사람의 힘입니다. 저희도 인식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사회적경 제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역 곳곳에 필요합니다.

안진걸: 사회적경제란 쉽게 말하면 함께 사는 경제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착취와 수탈을 내쫓는 데 협동조합의 조합원들도 도움을 주면좋겠습니다.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김남균: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는 골목경기에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본사에 서 식재료를 사서 유통하는 구조이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쓰는 곳은 그 골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내 순환적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대가 오르면 임대 료를 감당할 수 있는 건 결국 대기업뿐입니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되는 임대료를 완화해야 사회적경제의 가치도 계속 올라가거나 혹은 유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임대료를 완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대형유통 업체의 철저한 소비심리 연구 등을 통해 만들어진 '사료'를 먹을 수밖에 없다 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을 자유롭게 구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지역에 임차상인들이 많은데 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이 문제로 얘기할 때 전혀 관심이 없다고 느꼈습니 다. 상인들은 유권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상인이 살고 있는 집의 유권자이지, 가게가 위치한 지역의 유권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판단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선택에 이 문제를 맡기기 위해 사업자등록 증을 낸 곳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차상인들의 요구를 들 어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의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고 싶은데.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못 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없 애면 제일 좋겠지만 장애인, 70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하면 그 범위가 너무 좁 습니다. 현실에서는 강제집행이 너무 많고 한 번 집행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입법이 가 장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더 과거에는 버스 안에서도 흡연이 가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연법이 만들어질 당시 금연법을 만들어 달라는 강력한 요청보다는 이러한 입법 발의에 반대할 논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진 결과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도 만들어 졌다고 봅니다. 이처럼 임대차 관련 법들도 잘 정비가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것을 부당하게 뺏으려는 시도는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위성남: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이 문 제에 대한 대비가 취약합니다. 지금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독자적으로 생 존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초입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 회적경제 조직들이 살기 위해서는 개별 조직 하나하나가 굉장히 잘해서 되 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즉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을 활동으로 지역 주민을 조직하고 관계 맺는 것은 지 역사회의 구성원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만날 수밖 에 없습니다. 개개인은 지역에서 발언권과 힘이 약해서 독자적으로 문제제 기를 하는 힘이 없습니다. 재력 차이에 따라 발언권의 힘도 다릅니다. 그래서 항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주체를 올바로 세울 것인지가 고민 입니다. 결국 지역자산화 전략으로 고민이 확장됩니다. 공동으로 자산을 갖 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생존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어느 세월 에 만들겠느냐고 하지만, 사례가 만들어지면 확산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맘상모가 이렇게 빨리 정착할 줄 누가 알았겠습 니까? 법 개정 측면에서는 내년에 총선을 비롯하여 개정을 시도할 수 있는 일정이 나오지만, 지역자산화 전략 일정은 안 나옵니다. 3년, 5년 이상을 봐 야 하는 중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엿보이면 확산될 수 있습 니다. 참고로 영국의 로컬리티법을 보면 마을공동체가 지역자산의 우선 매 입권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매물을 매입하겠다고 신청하면 6개월 동안 묶어둡니다. 자본을 만들 때까지 법으로 기다려주는 것

입니다. 또 영국에 지역자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자산 총액이 1조 4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 면서 계속하여 공동자산을 형성하면서 지역의 주도권을 만들고 있다고 합 니다. 영국은 60년대부터 이런 역사적 뿌리가 있어왔습니다. 항시 후발주자 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선발주자가 30년 해온 것을 10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사회: 나도 열심히 하면 임대인이 될 수 있다는 꿈 때문에 서로서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99%가 도리어 1%를 위한 암묵적 공범이 되고 있는 현상이 참으로 씁쓸하게 와 닿습니다. 또한 자본주의라는 명목 하에 용인되고 있는 이 현상이 역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의 동력 자체를 좀먹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젠트 리피케이션은 일부 지역의 임차인들만의 문제일 뿐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당사자로서 고민하고 연대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ccop



이슈 • 새로운 희망적 대안, 협동조합

• 메르스와 위험사회

새로운 희망적 대안, 협동조합

박계동(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

협동조합 정신을 만나다

2012년 국회 사무총장 재직 당시였다. 민주화운동의 오랜 동지인 '한국협 동조합연구소' 정재돈 이사장이 찾아왔다. 국회의 정책연구자금을 지원받는 일로 방문한 것인데 나는 정재돈 이사장이 공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얼마 지나 그가 국회의 지원금으로 번역하고 출판한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의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를 보내왔다. 집무실에서 이 책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

때마침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구호 하에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우리 뉴스 시간에도 각국의 경제 양극화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하루가 멀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대기업 등살에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었고, 괜찮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시간제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만 남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도 할 만큼 국가경제를 지탱해주는 힘의 근간인 중 간계층이 취약해지면서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다. 경제적 양극화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치유하여, 선진국 진입의 문턱 에서 정체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 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유엔과 각 나라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새롭게 제시하는 해결 방안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 공유경제이며 그 유효한 대안이 협동조합임을 알게 되었다.

나의 새로운 삶—협동조합운동

2012년 내 나이 60세가 되었다. 생각해보면 20년 학창시절, 20년 재야활동, 20년 정치생활로 정확히 구분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20년은 무엇을 할 까? 좀 더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협동조합운동은 이러한 내 게 아주 딱 들어맞는 과제라고 생각됐다. 협동조합 실천운동 중에서도 파급 력 좋은 모범적인 협동조합 기업을 상상하니 자신감도 생기고 힘도 솟았다. 협동조합운동에 뛰어들려면 우선 공부도 해야 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 도 규합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운동에 대해 이념성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 다고 생각했다. 백담사 조오현 스님의 책 『벽암록(碧巖錄)』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이념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이었다. 이념은 사람을 규정짓 고 낙인하며, 이념의 잣대로 미워하며 비난하고 심지어는 일면식도 없는 사 람을 죽이기도 하는 자연계에서 인간만이 가지는 위험한 것이 이념의 잣대 였다. 사람이나 자연이나 무상(無常)한 것인데 말이다. 협동조합운동이 좌파 라거나 진보 성향이라는 이념성으로 비춰지면 똑같은 위험성에 빠질 수 있 다고 생각했다. 협동조합에 관한 국내의 글들을 접하면서 가끔은 오해를 불 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종종 발견하곤 했다. 어떤 학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대해 '사회적기업이나 돕겠다는 정치권, 시장을 왜곡해 좀비 기업 만 양산할 뿐'이라거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 업을 나랏돈으로 연명시키면서 기존 영세업체에게는 피해만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의 성공적 모델은 협동조합에 대해 이러한 우려를 가지 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 할 것이라 기대해본다.

시장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기업은 무엇일까?

협동조합은 시장을 존중한다. 그렇다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첫째로 협동조합 기업의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증대 효과이다. 둘째로 불신사회에서 '신뢰와 정직'을 다시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사업 형태가 유리할 것이다. 셋째로, 개선 효과가 명확하고 뚜렷한 분야여야할 것이다. 넷째로, 조합원이나 협동조합 기업의 직원이 안정적으로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수익성이 보장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볼 때 막상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았다. 택시협동조합을 포함해 장례협동조합, 도시농업협동조합, 청소용역협동조합, 화물협동조합 등에 대해 시장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택시협동조합을 하기로 결론지었다.

1999년에 서울의 '금구상은'에서 11개월 동안 택시기사로 일한 경험이 계기가 되었다. 새벽 3시와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하루에 12시간씩 운전대를 잡았던 경험으로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의 상황에 대해 나름의 인식을 가질 수있었던 것이다. 17대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택시에 부과하던 특별소비세 폐지 법안을 내게 되었다. 이 법안의 관철을 위해 당시 2만 명의 법인택시 기사들과 1만 명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다. 안타깝게도 그법안은 2표 차이로 부결되었지만, 이후 부가가치세 90% 환급과 이 환급금이전액 기사들의 봉급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택시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이러한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자산으로 택시기사들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은 자명한일이었다.

믿음과 신뢰는 협동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협동조합에서 신뢰는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상, 협동조합운동 초기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도 주교와 같은 성직자나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정치인들이 협동조합을 이끌었다. 출자금을 내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출자금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협동조합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신뢰는 무형의 사회적 자산(Social Asset)인 셈이다. 이런면에서 택시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나는 비록 넉넉한 초기자본금을 가지고있지 않았지만, 택시 문제와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은 물론 기대와 희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회적 자산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택시업계의 실정

택시협동조합은 개선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택시기사들이 사업주의 '선이익 보장제'와 다름없는 사납금제에서 해방되기만 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막장 노동자처럼 인식되고 있는 택시기사라는 직업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택시기사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일하여 12만 5천원에서 14만 5천원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만근을 하면 한 달에 120만원 안팎의 기본급을 받는다. 장시간 노동인 데 반해 최저생계비는 물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보다 좀 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납금액수보다 초과 달성하여, 사주와 6대 4로 배분되는 금액을 더 받아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의 부품 파손의 경우에 당연히 회사가 처리해야할 운송비조차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월급은 적고 들어가야 할 돈은 많다 보니 택시기사들이 교대근무 없는 '일 차'나, '휴무 승차'라는 살인적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막심 고리키는 '일이 즐거우면 인생이 낙원이지만, 일이 의무이면 인생은 지옥'이라고 했다. 택시 협동조합은 이러한 현실을 명쾌하게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었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때로는 신호 위반, 과속 운전을 하고 더러는 승차 거부, 부당 요금도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승객에게 불친절하고 승객을 불안하 게 하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이야말로 택시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는 개선 효과가 가장 뚜렷하고 명확한 영역이라 생각했다.

'서기운수' 인수에 나서다

협동조합을 꾸리기 위해 택시회사 물색에 나섰다. 택시회사의 거래는 업계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다.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몇개월에 걸친 '밀당'이 진행되었으나 매매 협상은 번번이 실패였다. 거래도 어렵지만 이런 사적 거래도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에서 위험한 요소도 많다. 그 중에서도 거래가 종료된 후에도 종종 문제가 되는, 어음 거래 같은 장부 외의 부채, 소위 말하는 부외부채(海外負債)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4년 11월 17일자 〈매일경제〉에 공시된 서기운수의 법원 M&A 방식 매각 공고를 접하면서 사적인 거래에 비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법원 M&A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기로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입찰금액 40억 중 계약금 4억을 선 예치하고 잔금 36억 원에 대한 잔고 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계약금 마련을 위해 나는 눈물을 머금고 집을 팔았고 '한국협동조합연대'의 이사들도 힘을 보댔다. 지인들에게 정치할 때도 해보지 않던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난생처음 사방에서 돈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자금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협동조합의 정신이 옳다는 믿음 하나로 벌인 일은 피를 말리는 과정이었다. 안 그래도 삐끗하면 전 재산을 날릴 판국인데, 잔금 납입 일을 이틀 앞두고 청천병력이 떨어졌다.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대주(貸主)가 자신들은 정치인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갑자기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인 출신이란 게사업자금을 모을 때 그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 소식을 전해들은 아내는 충격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예순 넘은 나이에 알량한 재산마저 홀랑날려먹고 알거지가 되게 생겼으니 버틸 재간이 없었을 거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모든 종류의 금융 즉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할 것 없이 모두 찾아다녔지만 돈은 냉정했다. 은행은 담보 없이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자금 상당액을 사채시장에 의존

하여 간신히 잔금을 치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울트라 을(乙)'이 돼야 했다. 17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금융권 관련 법률 심의를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멋모르고 했던 것만 같다. 시장통에서 일수하는 사람들도 개 개인의 정보를 잘 알고 돈을 꿔주는 데 반해서. 고급 인력이 모인 은행은 산 업적 기능이 없는 단순한 대부업에 불과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함을 온몸으 로 절감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가치와 윤리를 생각하는 은행이 없을까? '보노보 은행'은 없고 '침팬지 은 행'들만 있을까 하는 한탄이 절로 나왔다. 이틀 만에 36억이라는 거액을 마련 하면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었다.

사람이 자본을 고용하는 협동조합

2015년 1월 5일 '한국협동조합연대'는 서기운수의 법원 M&A 우선 협상자 로 선정되고 1월 7일자로 본 계약체결이 완료되었다. 이때부터는 최단기간 내에 출자조합원을 모집해야 했다. 나는 '협동조합택시 우리사주 조합원 모 집 안내'라는 전단지를 들고 택시기사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서울역과 서부역에 늘어선 택시들. 그리고 김포공항의 국제선과 국내선. 삼 표에너지, 연일가스 등의 가스충전소 등에서 택시기사들에게 홍보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세 차례의 택시협동조합 설명회와 수차의 택시회사별 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열흘 동안 157명의 조합원 가입신청서 를 받았다. 조합 가입 희망자들이 출자금을 혀금으로 가지고 있기 어려울 것 이라 생각하여 은행권에서 기사들에게 출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와 대출이 불가한 저신용자가 예상보다 너 무 많았다. 조합원 가입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에서 현금 출자가 가능한 사람 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저신용자가 거의 70%에 가까웠다. 은행 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이 분들을 위해서 비상한 돌파구를 마련해주지 않는 다면 택시협동조합은 해보지도 못하고 망하게 될 처지였다. 또다시 입이 바 짝바짝 마르고 밤잠을 설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궁하면 통한다고 신용보증기관에서 이들을 보증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서울신용보증'에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서울신용보증'에서는 택시회사나 택시기사들에게 보증을 해준 적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진과 실무진을 오가면서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다.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서 40%대의 가동률로도 흑자를 내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조합출자금은 조합이 관리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에도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서기운수'의 재무제표와 각종 자료를 동원하여 설명해나갔다. 내가 국회의원이던 때와는 갑과 을이 바뀌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진심을 다한 지극한 정성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자 서울보증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가고 점차 긍정적인 반전이 이루어졌다. 결국 '한국택시협동조합'과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하나은 행'의 3자 협약이 성사되었다. '택시근로자 중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되기 위하여 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 출자금 2천 5백만 원을 6개월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자는 전원 대출이가능하게 되었다. 안전장치로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회계는 서울보증과 하나은행이 지명하는 회계법인에 의해 전표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조합원이나 은행 또는 서울시든 누가 보더라도 항상 투명한 경영이 되도록 하는 장치를 다짐했다.

그래도 문제가 남았다. 신용등급 8~9등급과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 사회경제과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았다. 중소기업지원자금 8억 원을 지원 해주면, 택시협동조합이 이 돈으로 저신용자와 신용불량자들에게 재대출을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했다. 그나마 신용불량자들이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택시업계뿐인데 서울시마저 이들을 외면한다면 이들은 곧바로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더군

다나 협동조합에서 신용불량자를 외면한다면 이는 의사가 돈이 없어 죽어 가는 화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설득했다. 우여곡 절 끝에 빠르면 9월 중으로 보증이 가능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 로써 자본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본을 고용하는 협동조 합의 정신이 구체화되는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 최초로 택시협동조합 출범하다

7월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 최초의 택시협동조합 출범식이 이루 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들과. 멀리 부산에서 온 송기인 신부님. 팔만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 협동 조합운동의 대부 황민영 선생 등 내 외빈, 그리고 협동조합택시에 큰 힘을 보태주신 서울신용보증,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출범식에 참석해주셨다. 무엇 보다도 조합원들의 눈물 글썽이는 환희의 얼굴들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 다. 노란 협동조합택시의 트렁크가 일제히 열리면서 알록달록한 '희망풍선' 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이 모습은 주요 공중파와 방송과 신문사 등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에 의해 전국에 보도되었다. 인수 후 한 달 만인 7월 말에 첫 배당이 이루어졌다. 조합워들에게 기존 월급보다 55만 원이 많은 배당금이 주어졌다. 택시 가동률이 70%가 넘을 경우 기존 회 사택시 월급에 70만 원의 추가배당을 기대하는 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가 능한 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연말이 되면 또 다른 추가배당을 약 속했다. '사람이 자본을 고용한' 결과이다.

예상했던 대로 협동조합의 효과가 새로운 곳에서도 나타났다. 아직은 기 간이 짧지만 회사택시 시절, 한 달에 7~10건씩이던 교통사고가 협동조합 인 수 후 한 달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협동이 경쟁력이 되는 것 을 실증하는 예이다. 협동조합이 출범하고 서기운수 시절부터 있었던 노동 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노조에 들어가던 경비가 연간 1억 원가량 절약되었다. 서울시 포상금 8천만 원, 보험료 절감액 1억 원 등 약 3억 원의 개선 효과도 모두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조합택시에는 사납금 대신 월수입 계산을 위한 기준 금액이 있을 뿐이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기사의 몫이다. 하루에 번 돈을 모두 조합에 납입하면 조합의 공통비용과 경비 등을 제외한 이익 모두를 조합원에게 추가로 배당한다. 그동안 밥값이나 담뱃값 등을 위해 하루하루 푼돈으로 써버리던 문제점을 없애고자 월 정산을 원칙으로 50만 원의 복지카드를 선지급한다. 사고 처리 비용은 전액 조합에서 보험으로 처리한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이 소재한 마포 부근의 택시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기사가 모자라 택시 가동률이 낮은 중에 기사들이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협동조합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소속 기사들과의수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 회사는 벌써 사납금을 20만 원 낮추었다고 한다. 택시기사들에게 불리했던 택시업계의 편파적인 조건들에도 변화가 보이는 것이다. 그 역시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전국적으로 택시협동조합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택시협동조합에는 이미 교사, 수의사, 외교관 근무자 같은 전문직 종사자나 공무원 대기업 간부 등에 이르기까지 안정적 일터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택시협동조합이 이제 막장 직장이 아닌 인생 이모작의 품위 있는 일터가 되도록 여러 면에서 힘써나갈 것이다. icoop

메르스와 위험사회

임종한(인하대학교 교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회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과거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최근 중동지역의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주로 감염환자가 발생하여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명명되었다.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된 2015년 5월 20일부터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7월 28일까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대중교통시설, 시장 등에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은 극단적인 불안에 외출을 자제했다. 메르스 감염질환의 증상, 진단, 환자 의심, 치료 등의 정보는 정부에 의해 독점된 채 의료인들에게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명확한 감염원과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동지역의 낙타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것뿐이었다. 초기부터 밀접접촉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채 우왕좌왕했다. 의심된 사람들이 환자인지를 직접 확인받을 수 있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소동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메르스 감염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다. 그 이외에도 두통, 오한, 콧물, 근육통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수 있다.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면 증상 발현 후 3일 이내 가래에서 바이러스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한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의심환자로 진단할 수 있다. 첫째,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 동지역을 방문한 사람 또는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이다. 둘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 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경우이다. 셋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와 증상이 있는 동안에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이다. 여기서 중동지역이란 아라비안 반도 및 그 인근국가(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를 가리킨다.

현재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는 개발 되지 않았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주로 하게 되며, 중증의 경우 인공호흡기 나 인공혈액투석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아직 백신 및 치료제가 없 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손 씻기, 기침 시 예절 준수 등 일반적 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 한 접촉을 피하고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기침, 재채기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메르스 잠복기는 2~14일 정도이며,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25개국에서 1,167명 발생, 사망 479명이라고 한다. 치사율은 40%를 육박한다.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은 손 씻기와 소독 그리고 N95마스크 이상의 착용이라고 특정했다.

처음 우리 정부가 밝힌 '메르스 감염 유의사항'에 많은 이들은 생소해했다.

'낙타와 접촉하지 말고. 덜 익은 낙타 고기나 낙타 젖을 먹지 말라'는 안내는 많은 국민을 의아하게 했다. 우리나라에서 낙타를 접촉할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정부 안내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무성했다. '거리에 낙타 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메르스에 감염되느냐'는 식의 풍자가 널리 퍼지며 정 부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였다. 정부의 안이한 초기 대처는 문제를 더 키웠 다. 메르스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비밀로 해 메르스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 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 기자회견 전까지 메 르스를 두고 '단순 감기 수준'이니 '손만 잘 씻으면 감염되지 않는다'는 식의 한가한 대책만 내놓았다. 결국 이런 잘못된 대처는 이후 더 큰 비극을 불러 오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 초기,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 원에서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보가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일찍 전달되었더 라면, 메르스 사태가 이처럼 확대되진 않았으리라.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 성수대교 붕괴…

국민안전처가 2013년 3분기부터 2년간 국민안전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는 응답률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난 해 2분기 1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전 체감도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올해 1분기에는 24.4%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1주 년 등이 겹치며 올해 2분기 조사 때는 22.0%로 다시 하락했다. 메르스 공포가 극심했던 6월에는 '안전하다'는 응답률이 19.2%까지 떨어졌다. 세월호 참사 나 메르스 사태처럼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체감도는 급락하지만 회복세는 더딘 편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 기간 계속하는 것 으로 분석됐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메르 스 사태로 환자가 186명 발생했고. 36명이나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 다. 가족들이 자택에서 격리되는 사이.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했고. 메르스로 사망한 부모를 24시간 내 화장 처리하도록 해서 제대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일 등은 가족들의 가슴에 씻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메르스가 할퀴고 간 상처들을 보면서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되새겨본다. 이 사태가 준 교훈을 잘 새겨 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린 무엇을 배우게되었나? 메르스 사태를 통해 그간 보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알게 된일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근저를 살펴보면, 그 불안의 뿌리가 전혀 근거 없는 불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고, 사고나 재해가 반복된다면, 어찌 개인의 불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반복적인 정책 실패와 무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지금과 같이 국제교류가 빈번한 시대에 국가의 신종 감염성질환에 대한 대비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염성질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게 권한과 독립성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전문가가 20~30여 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경험이일천한 공중보건의로 채워진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질환과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2년 말 기준으로 기관 수로는 5.8%, 병상 수로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 수로 볼 때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 OECD 국가들과 비교조차 하기 어렵다.

2011년 기준 한국은 전체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이 55% 정도로,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OECD 국가 평균 72.2%보다 17% 포인트 낮다. 이는 칠레(46.9%), 멕시코(47.3%), 미국(47.8%) 등에 이어 최하위 수준으로, 35개 국가 중 32등에 해당한다. 비교 대상국 중 공공의료 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85.6%)였고, 덴마크(85.3%), 노르웨이 (84.9%). 체코(84.2%)도 상위권에 속했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 양적으로 절대적인 부 족과 함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하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에도 차이가 난다. 응급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응급환자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아직도 갈 길 이 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응급실이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통로로 비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마치 시장바닥의 모습과 크게 다르질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응급실에서 감염환자들을 위한 격리병상을 갖추지 못해 응급 실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감염성질환을 옮기는 온상으로 작용했다.

개인의 건강정보를 잘 관리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불 평등을 해소하며, 질병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 관리해 전체적으로 의료 비 절감 효과가 큰 것이 일차의료에서의 주치의제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 료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 문제가 많았던 미국, 프랑스도 최근 주치 의제를 도입해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에선 종합병워 위주의 의료체계를 고수해 다른 나라에 비해 불필요한 입원 과 병원 방문이 많고. 의료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0~2010년 사이 연 의료비 상승률이 8.7%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 다. 중복 검사와 의료정보 관리의 부실로 의료비에 거품이 많은 탓이다.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68세 남자 환자도 3군데 병원을 전전하다 4번째로 삼성병원에 내원했듯이. 환자들의 대형 병원 쏠림현상. 의사 쇼핑 행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을 가져. 다주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환자의 간병 자체를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형태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요인들이라고 볼수 있다.

병원들은 수익성 위주로 6인실 병상을 양산했고. 가족들에 의존하는 간병

체계에서는 병원이 오히려 환자들과 가족들이 병을 얻게 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감염이 확산된 주요 원인은 중동과 달리 '슈퍼전파자(한 사람이 8명 이상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경우)' 수가 많았으며 국내 병원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개방형 공간이라는 점과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환자를 보호하는 후진적인 간병문화가 한몫을 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에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그동안 미뤄놓았던 '포괄간호서비스' 실시 등 선진의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포괄간호서비스란 환자 입원 시 환자의 가족이나 간병인이 수행했던 간호 · 간병을 의료면허증을 소지한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기본 간호부터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까지 병원 책임 하에 제공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후진적인 간병체계로 인한 문병인과 간병인들의 감염이 속출되는 상황에서 2013년 도입된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메르스 환자의 돌봄과 감염 관리에 헌신한 의료인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가지게 된다. 메르스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 있던 시기에, 확진된 메르스 환자임에도 입원을 시켜 돌본 인하대병원의 사례 등은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공의료기관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민들은 응급사고로, 신종 감염성질환으로 그 피해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민들의 피해가 어찌 이것뿐이랴? 시민의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고 벌어진 일이 이것뿐이겠는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다. 4시간마다 1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다. 2010년 작업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는 9만 8천여 명,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7조 6천억 원이 넘는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사고로 숨진 사람의 비율

이 지나치게 높다. 국제노동기구(ILO)¹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우리나라 노동 자의 산재사고 발생률은 10만 명당 9.9명으로 2008년 스위스의 10만 명당 1.1 명. 2008년 스웨덴의 10만 명당 1.2명에 비해 8~9배나 높았다. 참으로 부끄러 유 수치이다.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날로 까다로워지면서 불승인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실제 산재 피해자가 이보다 더 많다는 데 문제의 심 각성이 있다. 하인리히에 의한 조사에서는 중상 1건에 대해 경상 29건, 무상 해 사고는 300건 비율로 발생한다. 즉. 치료 기간이 긴 사고에 비해 치료 기간 이 짧은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요양일 별로 볼 때 1달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훨씬 적게 발생하고 있다. 경미 한 사고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반 영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산재화자를 생각해봤을 때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많은 수가 산재환자로 잡힐 수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산 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체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제 기능을 발 휘하도록 요구해야 하지 않은가? 일자리를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 요하지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특별히 3D업종 하청노동자에게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빈번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각종 안전관리 대책들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의 부재는 하청으로 이어지는 사슬 중에서 경제 적으로 가장 약자의 위치에 놓인 하청노동자에게 산재사고가 집중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보단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문화는 다 른 나라보다 유난히 많은 중대 재해를 일으켜. 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사고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¹ 국제노동기구(ILO). 노동통계 데이터베이스(LABORSTA) http://laborsta.ilo.org/STP/

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 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됐고, 300여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많아 전국민에게 충격과 침통함을 안겼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8분 멀쩡하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시민 3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중 등굣길이었던 무학여고 학생들의 피해가 제일 컸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피해가 컸던 것도 세월호 사고와 닮은꼴이다. 성수대교는 건설 당시 설계만 해도 트러스식 다리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트러스식 공법은 각 철조구조물을 연결하는 이음새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무너지기 쉬운 공법이다.

트러스식 공법으로 만들어진 성수대교는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음에 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성수대교의 설계 하중을 초과해 평상시 과적차량이 많이 지나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수대교가 그랬던 것처럼 산재사고 역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 가능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성수대교와 같은 사고가 1년에 60~70번씩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성수대교 붕괴와 세월호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우리 생활에 어떤 재앙을 가져다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고도 경제성장이라는 화려함에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보 듯이 공동체의 이익을 저버리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잘못된 기업관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의 생명마저 기업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소모품처럼 이용되는 천박한 기업문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해당 조직의 모든 구성원과 공동체 전체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는 의료체계를 수익을 중시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맡겼을 때. 사회 전반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의료체계는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매우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지금이라도 이 교훈을 가볍게 여겨서는 결 코 안 된다

위험사회에서 협동사회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는 상 위 4위, 사회갈등지수는 2위로 높아지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떨 어지는 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균 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어둡게 하는 평가와 징후 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르스 사태는 작게 보면 정부의 감염병 초기 대처 실패가 가져온 사회문 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다 넓게 보면 정부의 정보 독점과 물질적인 성 장 위주의 사회발전 전략이 가져다준 한계와 폐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까지 홍콩에서 유행했던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 한 구제역도 이번에 유행한 메르스 사태와 같은 맥락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 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은 사스-코로나 바이러스(SARS coronavirus. SARS-CoV)가 인간의 호흡기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다. 2002년 11월에 서 2003년 7월까지 유행하여 8.09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774명이 사망했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5.660여 개 농 장에서 총 사육두수의 33.3%의 돼지. 3.4%의 한육우. 8.4%의 젖소 등 345만 두의 가축이 살처분되었다. 또한 살처분과 방역 과정에서 공무원 9명이 사망 했고 1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심지어 구제역 양성 판정에 비관한 농민 자살 사건까지 일어났다. 2010년 구제역 검사 결과 중 국가 검사 기관인수의과학검역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살처분을 한 곳은 총 167곳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예방 목적으로 가축들을 매립했다. 심지어 구제역 발생 농장이나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병 발생과는 관계없이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1년 동안 300만 두가 넘는 가축을 살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범위로 구제역이 확산되자 정부는 2010년 말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을 실시한 지 한 달이 경과되면서 구제역 발생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추가 구제역은 발병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대대적인 규모의 살처분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구제역에 대한 살처분이 옳은 선택이었으며,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가축을 대량 학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여러 시민·종교단체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생매장 위주의 폭력적인 살처분이 진행되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사스, 구제역, 메르스로 이어지는 연속된 사건으로 살펴보자. 모두가 인수공통질환²으로 지속적인 환경오염과 환경파괴가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바꾸고, 신종 감염병의 위험을 증가시켜 발생된 사건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질환의 발생이 단편적인 대응으로 결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의 성장 모델이 그 역할을 다하고, 새 대안을 찾는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오늘날 더 주목을 받

² 사람과 동물 간에 옮겨지는 질병으로, 세계적으로 200여 종이 알려져 있으며, 인류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종류는 100여 종에 이른다.

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 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발전해왔고, 사회적경제의 생 태계를 형성하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의료협동조합은 시민과 전문가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의료사회에서 시민들과 의료 전문가들이 소통하는 모델을 보여주었다. 농촌 과 공단 변두리 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20개의 의료복 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산 성장했고. 현재 8만여 명의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주치의제 추진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 황이었지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이미 민간 차원에서 주치의제를 모 범적으로 시행해온 좋은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장애인 들을 위한 주치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기 위 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새로운 주치의제 모델을 만 들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복지체계를 만드는 데 새 전 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럽과 북미 등 선진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보듯이 국 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 발전 모 델이 주목받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20여 년간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보이고 있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 회적기업의 성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다양한 협동조합운동 의 혁신과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원리로 포함하

³ 임종한 외, 『가장 인간적인 의료』, 스토리플래너, 2011; 임종한 외, 『참 좋은 의료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스토 리플래너, 2015.

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제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등 공공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소통과 공유, 지역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왜곡된 기업의 논리가 시민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생명 가치가 우선되는 새로운 협동사회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었지만,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매우 미약하다.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성찰하고 평가하여, 이를 한국 사회가 성숙하는 밑 거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 학계, 협동조합 및 사회경제계에서 나설때가 아닌가 싶다.

진정으로 메르스 사태를 종식하게 하려면 시민사회, 학계, 협동조합 및 사회경제계에서 참여하는 사회 논의 기구를 만들어 사회 개혁의 방향을 적극제시했으면 한다. 마침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가 8월 18일에 발족하였다 하니, 앞으로 국민연대가 이러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향후의 사회 개혁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먼저, 메르스 사 태 원인을 규명해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직 개편과 감염성 질환 분야 전문 인력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포괄간호서비 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간병문화를 바꾸 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둘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각종 규제 철 폐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당되는 분야에서는 그 규정 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당되는 것이면 오히려 강화를 해야 한다.

19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정으로 전문기관 대행을 허용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50인 이상 사업장 2만

8.930개 가운데 산업보건의를 고용하고 있는 곳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 다.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의 건강 관리가 경영에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의 공개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 목해야 할 것은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나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의 정보 독점 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이다. 지금의 위기는 물질성장 위주의 사회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어온 각종 개발사업 등에 기 인된 것이다. 사람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 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질환의 증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만들어지고 있다. 형식화된 건강영향평 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이 개발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해주기보다는 위험성 을 지닌 개발사업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닌가?

기업이 이윤을 앞세우고.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등하시하다면. 지금과 같은 위험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까? 생활세계에 위험이 산재한 지금의 현대사회의 위험을 해결하려 면 기업의 체질부터 바뀌어야 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더디 가더라도 정보를 공유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며 함께 가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의료와 일차의료가 취약해져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지므로. 공 공의료와 일차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 비스발전기본법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 진주의료원과 같이 지방에서의 의료원이 폐쇄되는 일이 벌어 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와 일 차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해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이윤을 위해 사람의 생명과 안

전이 무시되던 사회에서 생명 가치와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회로 전환되어 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정부 주도의 사회 발전 시기, 시장 지배를 통해 기업 이 변화를 일방 주도하는 시기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정부-시장-시민사회(사회적경제) 간의 상호 협력의 시대로 한국 사회는 보다 민주화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건으로 수많은 귀한 생명을 잃고 난후, 우리 사회가 얻은 귀한 역사적 교훈이다. icoop



해피브릿지의 새로운 보상제도 만들기

문성환(해피브릿지협동조합 이사)

1. 들어가면서: 해피브릿지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해피브릿지가 주식회사에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 2년 6개월이 되었다. 협동조합 중에 노동자협동조합이 많지 않고. 전환 사례는 거의 없으 니 해피브릿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더러 관심을 가져주시 고 질문도 하시는데, 참으로 면구스럽고 말씀드릴 게 별로 없다. 이런 부끄러 운 상황에서도 이 글을 쓰는 것은 해피브릿지가 미약하게나마 노력하고 시 도한 것을 공개함으로써 뜻이 있는 분들의 도움과 좋은 의견을 기대하기 때 문이다.

지난 3년은 해피브릿지가 주식회사 체제에서 노동자협동조합 체제로 전 환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주식회사 때의 관성과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가장 많이 애쓴 부분은 조합원 중심의 지배구조(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었다. 조합원 중심의 지배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해피브릿지 구성원들을 조합원다운 조합원으로 바꾸어간다는 것이다. 고용된 사람이 아닌 조합원은 협동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협동하는 방식으로 새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사업 결과를 협동조합답게 분배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 한다. 평생 시장자 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배우고. 경쟁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해오던 사람들 이 하순간에 협동조합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기라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 으로 전환은 했지만 형식과 내용면에서는 아직 노동자협동조합이라 하기는 어려웠다.

해서 해피브릿지는 협동조합으로 안착하기 위해 HBM협동조합 경영연구

소를 만들었다. HBM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노동자협동조합의 가장 모범 사례인 몬드라곤의 경영 사례를 학습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한국형 노동자협동조합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연구소에서는 주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발견했고, 이를 해피브릿지에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한 주요한 몇 가지 요소 중 가장 핵심은 '일자리' 문제다. 몬드라곤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든다'.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몬드라곤노동자협동조합은 초창기부터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이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게 하고자 교육을 했고, 그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새로운 협동조합을 계속 만들었다. 협동조합이 일자리를 생산해내자 많은 사람들이 지역공동체에 남아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지역공동체가 유지되자 협동조합 외에 주식회사와 자영업소, 기타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온 몬드라곤의 경영 원칙이 70년 넘게 몬드라곤을 살아남게 한 것이다. 일반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몬드라곤노동자협동조합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출발할 때 생각이 달랐고 그 생각은 다른 결과를 낳았다.

ICA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결사체이다. 조합원들이 일자리로 해결하는 첫 번째 욕구는 경제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더러 다른 필요에 따라 결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경제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들다. 일자리를 통해 가족과 개인의 생존이 해결되어야 한다. 경제적 필요와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노동자(일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노동) 조합원들은 스스로 급여를 결정하고(보상) 잉여를 처리(분배)한다. 보상과 분배를 스스로 결정하려면 경제적 이기심을 통제하기 위한 결사가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 경제적 양극화와 황금만능주의, 상대적 빈곤에 따른 사회적 박탈감은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심어주고, 결국 노동을 소외시킨다.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빚어내는 이 같은 극단적인 자기모순 하에서 공정한 분배에 따른 경제적 만족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해피브릿지 조합원들은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이 현실적 제약임을 알고 있었다. 이미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사심과 이기심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과 결의가 필요했다.

새로운 보상과 분배 방식은 예민한 문제인 경제적 이해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합의하는 과정이었고, 앞으로 조합이어떻게 일자리를 지켜낼 것인가 학습하는 과정이었다. 이 글에서는 해피브릿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만족을 위해 새로 만든 보상제도를 소개하다.

2. 내용: 새로운 보상제도 만들기(급여연대의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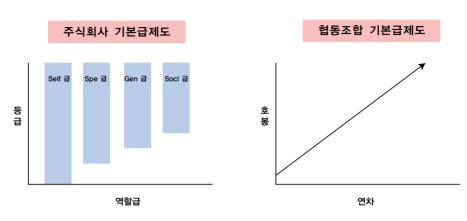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자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권리 부분이었다. 권리 중에서도 보상 문제였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고용노동에 익숙한 노동자들의 일반적 경향일 것이다. 협동조합 학습과 연수 등을통해 조합원 결의에 따라 보상제도를 만들 수 있음을 조합원들이 알게 되었다. 주식회사 시절의 보상제도는 그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 협동조합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겼다. 나아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보상제도를 만들고 싶어했다.

주식회사의 급여제도는 '역할급에 따른 고과 호봉제'였다. 해피브릿지식 고과 호봉제는 직원들을 역할(SELF, SPECIAL, GENERAL, SOCIAL)급으 로 나누고, 역할에 따른 호봉급을 달리했다. 풀어서 설명하면, SELF급 호봉 은 단순 작업을 하거나 숙련도가 낮은 직무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받는 호봉이었다. SELF급 역할을 하는 직원은 그 역할급에 따라 정해진 호봉에 맞춰 해마다 급여가 올랐다. 즉 역할에 직능급적 성격을 넣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역할 호봉이 정해졌다. GENERAL급 호봉은 주로 본부장급이나예비 경영진 정도의 역할과 직무를 맡는 사람들이 받았다. SELF 역할급과 GENERAL 역할급은 1호봉당 약 1.5배 정도 금액 차이가 있었다. SELF 역할을 하는 노동자도 인사평가를 통해 1년에 3단계씩 승급해 급여를 많이 받을수도 있었다. 어느 정도 조직 내 업력이 생기면 자기계발을 통해 승격도 할수 있어서 SPECIAL 역할로 또 GENERAL 역할로 갈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기간이 길고 기본적으로 동료 간 경쟁을 통해 승급 또는 승격하는 제도였다. 주식회사 시절 해마다 인사평가 시즌에는 급격히 술자리가 많아지고 동료간 상 하급자 간 갈등이 많았다. 선배 사원들은 인사평가 시즌에 불려다니면 더러 찾아다니면 내부 갈등을 조절하는 데 한두 달을 보내야 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마당에 이전의 보상제도가 좋든 나쁘든 새 보상제도를 만들어야 했다. 새로운 보상제도는 협동조합의 가치가 담긴 제도여야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합의가 주요한 의사결정 수단이다. 새로운 보상제도를 만들 때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했다. 우선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보상 관련 외부 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보상제도의 방향을 안내받으면서 조합원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그리고 새 보상제도를 만들 '인사제도위원회'를 구성했다. 2013년 당시 조합원이 67명이었는데 이들 중 평의회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 12명으로 인사제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제도위원회는 기본급제도 외에도 성과급을 나누는 성과측정제도(인사평가제도)까지 재설계했다. 이 사건은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급여와 성과금을 어떻게 받을지 논의하여 이를 제도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안을 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활동을 했다.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말까지 인사제도위원회의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신보상제도를 2015년도에 적용하고 있다.

해피브릿지의 변회된 기본급제도 비교



- 1) 고과호봉제(호봉급+직능급)
- -입사평가의 결과가 기본급여 반영(승급, 승격)
- 2) 역할별로 별도의 급여테이블 적용
- 3) 고성과제 중심의 보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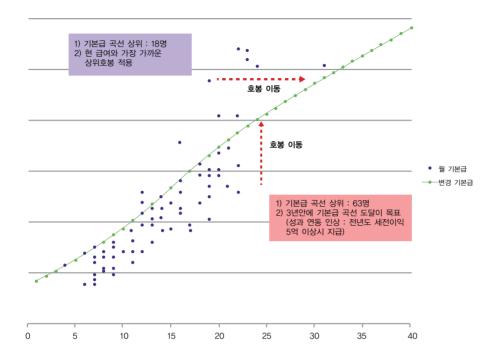
- 1) 호봉제(연공급)
- -인사평가의 결과가 기본급에 영향을 주지 않음
- 2) 하나의 급여테이블 적용

새 급여제도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형평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차에 따른 호봉제였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쓰는 오래된 보상제도인데 조합원들은 이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조합원, 직원 그리고 경영진까지, 조 합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에 몬드라곤에서 배운 급여연대 개념을 더했다. 급여연대의 핵심 내용은 기본급의 하안선과 상한선 안에서 연공식 기본급여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었다. 가장 낮은 연공 급과 60세 퇴직 때의 연공급의 차이가 4배를 넘지 않도록 설계했다. 고졸 사 원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기본급이라. 전문대졸(초대졸) 신입 여사원의 연 차를 계산해보면 3호봉이 된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온 남자 신입사원이 전 문대 졸업자라면 군대 1년을 1호봉 인정해 보통 5~6호봉에서 최초 기본급을 받게 된다. 그럴 경우 실질적 최저, 최고 기본급 차이는 약 3배에 이른다. 주 식회사 때에는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약 7.6배가 났다. 7.6배 차이는 기본급

만 따졌을 때 그러했고 각종 수당과 성과급까지 계산하면 더 크게 벌어졌다. 현재 해피브릿지의 급여는 기본급(70%)에 급여성 보상(각종 수당+성과금+상여금) 30% 정도로 이루어진다. 인사제도위원회에서는 기본급만 합의하고 결정해놓았다. 나머지 급여성 보상들은 기초적인 가이드라인만 만들어놓고, 제도 운영은 경영진들에게 위임했다. 경영진들이 성과를 내는 데 급여성 보상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파생되었다. 전 직원의 연차를 다시 계산해서 새로운 기본급 테이블에 적용해야 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 사 때의 연차를 인정하지만, 사내외 경력 및 학력 및 병력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주식회사 때 실행한 승급과 승격 제도에 의해 연차에 따라 일정하게 급여가 나열되어 있지 않았다. 입사 동기이지만 승급이나 승격을 한 탓에 적지 않은 호봉 차이가 나는 경우가 나타났다. 막상 단일호봉제로 통합을 하자니 과거 평가에 따른 급여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난제 였다. 조합원들은 '역량과 역할 따라 일하고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는 해피브 릿지만의 급여연대 정신을 발휘했다. 이 명구는 인사제도위원회 활동의 근 간이 되는 공유가치였다. 위원회 활동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원칙에서 다시 시작했고, 새로운 제도에 적극 적용했다. 주식회사 때는 경쟁을 통한 고 성과자 중심으로 보상을 서열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비슷한 성과와 암묵적 업적이 있어도 낮은 호봉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제 도에서는 과거 고성과자들의 업적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식 회사 시절 인사평가가 낮은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과 역량에 따라 일하지 못 한 환경에 따름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새롭게 시작하는 노동자협동조합에서 는 과거의 경쟁과 차별을 극복하고 협동과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전 구성원의 기본급 분포와 향후 조정 방향을 보여주 는 그래프를 살펴보자. 새로운 기본급 곡선 위에 이전의 높은 호봉은 그대로 인정해 새 기본급 호봉에 수평 적용하고, 기본급 곡선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구성원들은 3~5년에 걸쳐 기본급 곡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래프에서 보이듯 전반적으로 기본급이 올랐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도 있었다. 조합원들이 결정 해서 올라간 기본급은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조합의 성과에 따라 기본급이 더 올라가고 성과금이 많아질 수도 있지 만, 그 반대의 경우에도 조합원 스스로 급여를 낮추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가 낮아 보상을 낮추는 상황은 없어야겠지만 조합원 스스로 자신 들의 보상을 결정해본 경험은 조합 상항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정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주식회사에서는 한 번 올라간 급여를 내리기는 어렵다. 고성 과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회사에 남겨야 한다. 그래야 이윤이 많이 생기기 때 문이다. 그 대신 인사평가를 해서 급여에 차이를 두거나 구조조정이란 이름 으로 해고를 하여 고용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의 멤버십은 다른 협동조합보다 그 결사의 강도가 세다. 스스로 자신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출자금을 내놓아야 한 다. 조합이 어려워 해산하게 되면 막대한 출자금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일자리까지 잃어버리는 이중의 어려움에 겪게 된다. 그러니 조합이 흥할 때나 어려울 때 조합원 자신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 동하는 훈련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 훈련으로 해피브릿지에서 실 시한 것은 새 보상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지면 제약으로 분배제도는 간략히 소개만 하겠다. 분배제도(잉여금 처리 기준)는 협동조합기본법 표준정관을 비교적 충실히 따라 조합의 정관에 반영했다. 형식은 기본법을 따랐지만 내용 면에서는 해피브릿지만의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법정적립금은 조합원의 출자금 보호와 사업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잉여금의 30%를 적립한다. 임의 적립금은 사업준비금과 특별적립금으로 나뉘어 적립하는데, 조합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 사업준비금은 주식회사에서 넘어온 유보금을 적립해놓은 상태에서 조합이 출발했다. 그리고 해마다 임의 적립금의 대부분을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특별적립금은 조합원 복지와 앞으로 생길 공제조합을 염두에 두고 적립하고 있다. 노동기여배당의 최초 설계는 조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조합원 간 차이를 두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 간 기여의 차이를 계량하기 어렵고, 아직은 조합 업력이 낮기에 조합원의 참여와 협동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당분간 평등하게 지급하고 있다. 출자 배당은 몬드라곤 기준을 준용하여 배당률을 해마다 새롭게 총회에서 결정한다.

3. 글을 끝내면서

해피브릿지노동자협동조합은 법적으로는 협동조합이지만 내용에서는 아 직은 전화 과정에 있다고 해야 한다. 지난 3년은 형식적 전화 과정이었다. 형 식적 전화이란 해피브릿지만의 협동조합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는 뜻이다. 조합은 계속해서 조합원들의 경험과 의사에 따라 새롭게 지배구 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특히 초창기 협동조합은 형식적인 변화를 잘 관리해 야 한다. 축적된 경험이 짧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조합일수록 형식을 만 드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훈련이 많이 일어난다. 다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 는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제도와 형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몇몇 조 합 활동가와 앞잡이들이 선도해서 나온 결과는 아무리 세련된 것이어도 조 합원들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설령 몇몇 사람들이 고심해서 만든 제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해도 조합원들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부족한 채로 이뤄진 제도적 최적화는 조합을 혼란 하게 만들기도 했다. 조합 수준에 따른 당사자들의 결의가 좋은 의사결정의 시작이다. 그 바탕에 미션과 비전이 명확하고 전략이 작동된다면 더디더라 도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진다.

전환기에는 과거의 경험과 지금부터 시작되는 미래지향 사이에서 인지 부 조화가 발생한다. 조합원들 사이에 조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을 위한 교육 콘텐츠는 따 로 없다. 실제로 따로 있기가 어렵다. 다만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 이념에 따 라 한걸음씩 딛고 가는 과정에서 느끼고 발견되는 것들이 현재까지 노동자 협동조합의 교육이었다. 이번의 신보상제도도 우리가 직접 찾고 실천해본 교육의 한 방편이었다. 새로운 보상제도가 아주 세련되고. 주변의 이목을 끌 만한 제도는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일반 호봉제도이다. 그러나 그 안에 는 해피브릿지 조합원들이 함께 일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 다. 낮게 평가된 것은 연대정신에 입각해 높이고. 높은 것은 또 그대로 인정

했다. 왜 논란이 없었을 것이며, 불편해하는 조합원들이 없었겠는가? 심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때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그때는 개인적 불만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 제도가 조합의 발전과 협동하는 문화에 도움되느냐'라는 질문에 입각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제도와 형식은 그 구성원의 정서와 정도에 따라야 한다. 혁명적 혁신이 아니고서는 너무 앞서가면 이해가 부족해지고, 너무 현실만 반영해도 어설프다.

'역할과 역량에 따라 일하고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는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일에 따른 보상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안은 없겠지만 협동조합 보상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따르고, 노력의 차이를 측정해 지급할 수 있는 보상제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직무값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합의된 기본급 체계에 직무값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주식회사 때의 역할호봉제와 비슷할 수 있으나 그때와 다른 점은 조합원들이 일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무값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가를 합의해가는 과정에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그 직무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성과 측정은 팀 성과만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개인별 변별력은 없다. 팀원들이 서로 도와 좋은 성과를 냈으니 팀 성과에 따른 성과 측정이 협동조합에 맞을 듯하다. 그러나 특별한 업적도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성과금제 보완은 계속되어야 한다.

협동조합만큼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사업체 형태는 많지 않다. 협동조합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은 공정한 보상과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피브릿지 사례에서 보듯이 조합원 전원 합의는 어렵겠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우리의 결정'에 의해 합의된 보상안을 만들 수 있다.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 중에는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드물다. 다소 보상금액에 대해 섭섭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섭섭함은

극복할 수 있다. 분배 정의의 체험은 성실한 노동과 창조적 활동을 더 자극 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조합 안에서는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 리지 않고, 실직에 따른 빈곤의 공포심을 덜 느낄 수 있다. 해피브릿지 새 보 상제도는 제도의 완결성보다는 조합원들의 합의 과정에 큰 의미가 있다. 민 주주의적 합의 체험은 지금까지의 형식적 결사를 내용적으로 결사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믿는다. icoop



박해성



'에너지 자립'의 꿈, "함께 꾸면 현실이 돼요!"

황세원(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사회적경제 석사과정)

침체된 재래시장만 봐왔다면 서울 상도동의 성대시장에 가봐야 한다. 깜 짝 놀랄 만큼 활력이 있는 시장이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장보러 나온 사람들 로 북적인다. 가게마다 물건이 쌓일 새 없이 팔리고 있다. '지역 경제가 돌아 간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조금이나마 와 닿는다.

이런 시장 길을 따라 올라가던 중이었기 때문인지 독특한 간판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생뚱함이 덜했다. '에너지슈퍼마겐', 슈퍼마겐이 우리나라에 처 음 들어왔던 시기의 맞춤법을 따라 '슈퍼마켄'으로 표기했다는 이곳은 국내 최초의, 에너지 절약 상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다.

23㎡(7평) 크기의 작은 공간, 안에 들어가니 자전거가 먼저 눈에 뛰다. 페달 을 밟아 생성한 전기로 선풍기를 돌리는 자전거다. 처음부터 양쪽에 터진 문 으로 공기가 통하도록 꾸몄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그리 덥지 않지만 이 자전 거는 거의 쉴 틈이 없다. 동네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려주는 덕분 이다. "너희들이 더 덥다"면서 말려도 그저 즐거운지 순서를 기다리며 페달 을 밟곤 한다고.

선풍기를 돌리는 전기뿐이 아니다. 전등을 켜고 컴퓨터를 켜는 등 이 공간 에 필요한 전기도 자체 발전으로 만든다. 뒷문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다. 옆집으로 흘러들어갈 만큼 발전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기 고지 서에는 늘 '()'이라는 숫자가 찍혀 나온다.

지난겨울 난방은 작은 난로 하나로 해결했다. 가지치기한 가로수 등 폐목 재를 압축한 '팰릿'을 연료로 하는 난로인데. 한 포대에 1만 원인 팰릿 총 15 만 원어치로 겨울을 넉넉하게 날 수 있었다.

여기서 파는 것은 LED 전구, 휴대전화 충전이 가능한 소형 태양광 패널, 전력 차단 콘센트, 방풍재 등 에너지와 관련된 제품들이다. 그와 동시에 이 공간 자체가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보여주는 모델인 셈이다.

이 가게의 운영 주체는 서울시 마을기업이자 협동조합인 '마을닷살림'이다. 마을닷살림이라는 기업의 설립 목적을 최대한 간단하게 말하면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조합원은 동네 목수, 건축사, 태양광전문가 등 사업자 34명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테리어, 단열 공사, LDE 조명 교체, 보일러 수리 등이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 마을닷살림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다.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개념과 단위들이 양손으로도 다 꼽기 어려울 만큼 많다.

먼저, 에너지슈퍼마켙이 위치한 이 주변을 '성대골'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 아야 한다. 성대골은 행정구역상으로 상도 3~4동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옛 이름이다. 에너지 절약을 실험적으로 실천하던 주민들이 2011년 12월 '성대



〈사진 1〉에너지슈퍼마켙 외부

골 에너지절전소' 활동을 시 작했고, 이 일대 1,000여 가구 는 2012년 서울시에 의해 '에 너지 자립마을'로 지정됐다. 주민들은 에너지절약운동을 다양한 활동으로 펼쳐가기 위해 비영리법인 '성대골사 람들'을 결성했고, 영리 사업 을 위해 협동조합법인 '마을 닷살림'을 설립했으며, 그 첫 구체적 사업이자 브랜드가 바로 '에너지슈퍼마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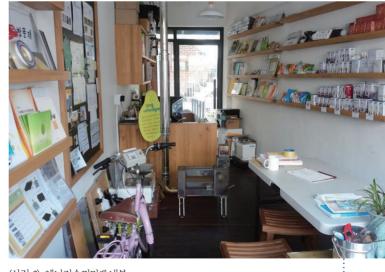
마을닷살림 김소영 대표는 "우리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사업자 조합원 위주이지만 그 기반이 '성대골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만 든, 지역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절약 실천 위해 '성대골사람들' 결성

그런데, 이곳 주민들이 유독 '에너지'를 주제로 한 사업에 이렇게 열심인 이유는 뭘까? 김 대표는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해 6년 전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상도3동은 인구 2만, 1만 5,000세대인데 지역 안에 초등학교가 없어요. 아이 낳아 키우며 사는 주민보다는 들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용할 만한 변변한 시설이 없고, 여기 사는아이와 부모들의 불편함은 더욱 컸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보자고 나선 거죠."

상도3, 4동의 몇몇 주민들은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위해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힘을 합쳤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11년 83㎡(25평) 규모의 공간이 마련됐다. 김 대표는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도서관이 만들어지자 그 뒤에 공공 어린이도서관이 두개나 생겼고, 올가을에도 하나 더 문을 열 예정"이라면



〈사진 2〉에너지슈퍼마켙 내부

서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인 주민들의 힘이 그냥 사그라지지 않고 그다음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 시기인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대단했고, 이곳 주민들도 불안감을 느꼈다. 전기를 마음껏 쓰고 살았던 생활 방식을 처음으로 돌아봤다.

사회 전반의 공포는 금세 사라졌다. 언제 두려움에 떨었냐는 듯 다시 예전처럼 에너지를 쓰며 살아갔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그러지 않았다. 환경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함께 공부했고 그 결과,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거나 최소한 더 짓지 않으려면 우리와 같은 도시 사람들이 전기를 덜 써야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어린이도서관 벽면에 각 가정의 월별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를 붙여나갔다. '뭐라도 더 줄일 게 없나' 하는 눈으로 찾아보 자 빼야 할 콘센트, 꺼야 할 스위치들이 보였고, 각 가정의 막대그래프들은 점점 짧아졌다. 그렇게 '전기를 덜 쓰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나갔다. 이것이 '성대골 에너지절전소' 활동의 시작이었다.

2012년 '성대골사람들'이라는 주민단체를 결성한 뒤로 활동은 다양하게 뻗어나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착한 가게' 선정이다.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동네 가게들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더 애용하도록 하려는 활동이다. 처음에는 상인들의 호응이 크지 않아서 지정해준다고 해도 마다하는 곳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인식이 퍼지자 이제는 꽤 많은 가게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 2012년 15곳으로 시작해서 2013년에는 16곳을, 2014년에는 51곳을 더 지정했다는 것을 보면 호응도를 엿볼 수 있다.

2012년 8월부터는 마을 장터 행사를 '에너지 축제'로 바꿔서 치르고 있다. 1 톤 트럭에 태양광 패널을 장착한 '이동식 카페', 자가발전 솜사탕 기계 등을 통 해 주민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한편 환경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상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퍼포먼스 등을 보여주면서 '메시지가 있는 행사'로 만든 것이다.

이런 활동들의 성과는 '전기 사용량 감소'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동작구 전체로 보면 전기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성대골 주민들은 2011년 이후 전년 대비 전기 사용량이 매년 10% 안팎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3년 10월, 협동조합 마을닷살림을 설립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각자 가정 안에서 전기 사용을 줄이려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테면 태양광 발전기 설치 및 관리, 단열 공사, LED 조명 교체, 보일러 효율 높이기 등 주택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에너지슈퍼마켙의 문을 열었다. 이 공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이렇게 설명했다.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집에서 주스를 만드는 데

도 전기로 믹서기를 돌리는 방법밖에 없는 줄 알지만, '비전력 주서기'라는 게 있어 요. 말 그대로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드는 '도구'인 것이 죠. 비전력 비데도 있고, 수 동이나 태양광으로 휴대전 화를 충전하는 기기도 있지 요. 물론 비데와 휴대전화를 안 쓰는 게 더 '대안적인' 삶 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



〈사진 3〉 성대골 에너지 축제의 이동식 카페 모습

겠지만, 도시인의 생활에 맞는 방법을 찾아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타협 점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중학교 정규 수업으로 에너지생태 강의

아직도 설명할 내용들은 더 있다. 에너지 교육과 관련한 것들인데, 그 중하나가 에너지생태교육 전문 강사를 배출하기 위한 '전환마을학교'다. 15주과정의 교육을 지금까지 2회 진행했고, 총 50여 명의 강사가 배출됐다. 그 중1기 수료생 10여 명은 이미 서울시 전역에서 강사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처음에는 지역 주민 위주로 참여했지만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도 수강생들이 찾아오고 있다.

또 하나 성대골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생태수업이다. 2011년, 주민들이 막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외부 강사를 초 빙해 생태 수업을 듣던 시점부터 이를 위한 노력은 시작됐다.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근 국사봉중학교에 생태 수업을 제안한 것이다. 다행히 학교 측도 필요성에 공감해서 2012년 1학



〈사진 4〉 국사봉중학교 학생들이 저에너지하우스를 짓고 있다.

기부터 주민 특강 형태로 수 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2014년에는 정규 수업으로 발전했다. 국사봉중학교 2학년 6개 반 학생들에게 매주 1시간씩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에너지 절약 노하우, 에너지전환마을, 적정기술 등을 주제로 가르쳤다.

의미 있는 것은 색상에서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 '저에너지하우스'라는 실험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10 ㎡(3평) 크기의 임시 컨테이너 공간이긴 하지만 학생들 힘으로 만들어낸, 에너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시도한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리고학생들은 이 공간을 생태에너지전환카페로 사용하기로 했고,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이다. 매점 겸 에너지 절약 제품 판매장, 전시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에너지슈퍼마켙의 제품들도 들어갈 예정이다. 절전을 실천하면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등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솟아나오고 있다고. 이밖에도 에너지생태수업은 인근 장승중학교와 다른 지역 중학교들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교육적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전환마을학교'가 배출한 주민 강사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주민들의 비영리적인 활동이 일자리를 만들고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는 전국의 적정기술 개발자 및 기업들과 협력해 온라인 쇼핑몰 '이-슈퍼'(www.e-super.co.kr)를 열었다. 활동 영역이 자연스럽게 전국으로 확장된 셈이다. 여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에너지 절약 제품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생활기술공모전 등을 통해 발견된 아이디어와 기술이 소개돼 있다. 아직 아이디어 단계인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의 호응과 여러 가지 제안 등을 만나면 실용화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실제로 제품화해서 판매, 유통하는과정도 마을닷살림이 함께하고 있다.

일상의 소통 네트워크가 사업을 지탱하는 힘

성대골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밖에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마을학교에서는 부모커뮤니티, 연극교실, 인문학교실, 도시농부학교, 숲체험교실, 합창단 등을 운영하며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엄마들 독서 모임과 어린이 기자단 활동이 진행된다. 제목이 붙지 않은 일들까지 치면 더 많다. 주민들은 지나가다가도 에너지슈퍼마켙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며 담소하고, 아이

들은 방과 후에 심심하면 이 가게나 어린이도서관에 들러서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는다. 이런 모든 일상의 소통과 네트워크가 수많은 활동과 사업들을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힘이다.

설립 첫 해인 2014년 마을닷살림의 매출은 3,000여만 원. '기업'이라는 기준으로만 보면 아직 안정적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김 대표는 "아직은 수익보다는 가치가 우선"이라고 했다. "오늘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50년 된 2층집 에너지 효율화 공사 견적을 냈다"면서 "이 공사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얼마만큼 줄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지역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까지가 다 우리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수익을 늘리기 위해 규모를 키우는 것에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협의하면서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아쉬운 것은 새로운 일들을 더 만들어가고 싶어도 정책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 "이미 많은 지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거나 기존 활동의 영리적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마을닷살림과 성대골사람들은 이미 공간 4곳의 임대료 및 운영비 월 280만 원을 수익과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더 수익을 내기 위해 영리적인 쪽으로 치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고 했다. 에너지자립운동을 희석시켜서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시도는 계속된다. 현재 이들은 "진정한 '에너지자립마을'이 되기 위해 큰그림을 그려가는 단계" 위에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성대골 주민 30여 명은 독일의 7개 에너지자립마을 탐방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수십 년 된 미래, 자립마을의 가능성을 직접 보고 온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마을'에 비해 지역 경계가 불분명하고 들고나는 주민들이 많은 서울에서 너무 원대한 꿈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지역적 경계 안에 웬만한 공공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주민 공동 소유인 나대지가 있고, 대를 이어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는 독일의 마을과 한국의 도시 환경을 비교하는 자체가 의미 없어 보인다.

게다가 성대골의 주택들은 "외벽에 단열재를 붙이면 옆집과 간격이 너무줄어서 갈등이 빚어질 정도"로 다닥다닥 들어서 있다. 또 대부분 공동주택이라서 태양광 패널을 붙일 공간도 부족하다. 서울시 안에서 일조량 적은 곳으로 꼽히는 등 자연환경에도 기댈 여지가 없다.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 이런위치에 있는 자립마을은 없다"는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탐방에서 한계보다는 희망을 더 많이 보고 왔다. 에너지 자립 200%, 즉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의 두 배인 독일의 '쉔하우 마을'에 방문했을 때, 83세가 된 1세대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1인이 있으면 꿈은 결국 이뤄집니다."

이 말을 전하는 김 대표부터가 그 '1인'이 될 각오가 충분해 보였다. '1만 세

대의 에너지자립마을'을 기준으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량을 제시하고자 한다든지,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에 기여하고 싶다든지, 해야할일과 하고 싶은 일이 끝도 없이이어진다.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만한데도 이런 모든 계획과 준비에 열정이 계속 샘솟는다고한다. 일요일이면 어서 출근



〈사진 5〉 전환마을학교의 에너지생태교육 강사 양성 과정

해서 일하고 싶을 정도라고.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씻기고 옷 빨아 입히고 밥 해서 먹이는 것처럼 지금 하는 일들도 그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엄마들이 가정에서 마을로 나왔고, 마을에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 안에서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한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다. iccop

왜 그 많은 협동조합은 실패했을까? -김은남. 『이런 협동조합이 성공한다』, 개마고원, 2015

강양구(〈프레시안〉 기자)



며칠 전, 대학교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공장 후배 하나가 규모가 큰 언론사 로 자리를 옮겼다. 나이 터울이 커서 함께 학교를 다닌 적은 없었지만 같은 동아리에서 학교생활을 했던 공통점이 있었던 터라서. 입사 때부터 애틋하 게 생각했던 후배였다. 기본기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욕심이 많아서 일도 곧 잘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와 눈에 띄게 관계가 소원해졌다. 여러 이유

가 겹쳤겠지만, 딱 한 가지만 꼽자면 공장을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조직 내부 갈등이었다. 3년 전 일부 주주가 공장을 어떤 기업에 매각하는 걸 막아보고자 떠올린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어, 어, 어' 하는 과정에서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처럼 협동조합 전환에 깃발을 든 이들 혹은 선뜻 내키지는 않지만 '독자'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들과, 여전히 협동조합을 미심쩍어하는 동료 사이에 눈에 띄게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협동조합 전환에 회의하는 이들의 속마음이야 제각각이었겠지만, 그 친구도 굳이 따지자면 그쪽이었다.

정식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 2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 여럿이 공장을 떠났다. 이 친구가 나름 청 춘을 바친 공장 대신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기기로 선택한 데도 이런 갈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잠시 후회를 한다. '그때 나는 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자고 깃발을 들었지?'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터라서 『이런 협동조합이 성공한다』를 읽으면서 자꾸 공장의 상황이 겹쳐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 때문일까? '성공' 사례를 모아 놓은 협동조합 이야기의 행간에서 보이는 고민, 갈등, 아픔 등이 밟혀서 여러 번 책장을 덮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나는 여기소개된 협동조합 한 곳의 조합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는 이 책이 충분히 조명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밝은' 면 보다는 지금 협동조합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설픈 고민을 나 열해볼 생각이다. 생존을 강조했으니, 고민은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의 '결사 체'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사업체'로서의 비전에 방점이 찍힌다. 안타까운 일 이지만, 사업이 안 되면 초기에 굳건했던 결사도 해체되기 십상이다.

협동조합마다 사업체로서의 수익 모델은 각각일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자신의 협동조합에 맞춤한 매력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 그것 을 뒷받침할 상당한 자본금까지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성공' 사 례에 속하는 이 책에서 소개한 협동조합 대부분을 포함해서도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개의 사업이 그렇듯이 초기에 상정한 수익 모델이 생각처럼 굴러가지 않고 삐거덕거릴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초기의 시행착오도 불가피하다. 그 런데 상당수 협동조합은 이 단계를 버틸 정도로 자본금이 충분치 못하다. 이 즈음부터 '잘했네, 못했네' 등의 집안싸움이 시작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결 사도 와해된다.

이 대목에서 아쉬운 것이 바로 협동조합에 맞춤한 금융 생태계다. 협동조 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시중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자를 못 내거나 원금을 떼일 확률은 전무하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일반적인 회계 기준으로는 자격 미달인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우리 공장의 사정이 지금 그렇다!)

과문하지만, 협동조합이 전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적으 로 적지 않게 자리 잡은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 생태 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협동조합에 맞춤한 금융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최소한 일반 금융기관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라도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성공한' 협동조합은 요원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협동조합 간의 '연대'를 놓고서도 한마디 해야겠다. 협동조합 에 맞춤한 금융 생태계가 전무한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협 동 경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 책 의 말미에 덧붙인 대담에서 김성오도 강조하고 있듯이. 고립무원의 협동조 합끼리라도 뭉쳐야 산다.

공장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도 내심 그런 기대가 있었다. 언론사로서 는 최초로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화한 터라서, 생활협동조합 등 어 느 정도 기반을 갖춘 선배 협동조합의 관심을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금까지 그런 협동조합 간의 '감동적인' 연대는 찾아볼 수 없다.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못한 탓일까?)

사실 다들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어서이지, 선배 협동조합 사이에 서도 연대보다는 상호 불신에 기반을 둔 반목이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후배 협동조합에게 먼저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또 그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누군가 해주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몽상일 뿐일까?

이 책에서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비결 가운데, "협동조합끼리 연대하라"가 빠진 것도 이런 사정 탓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보통 '이익'을 매개로 손을 잡은 이들 사이는 ('이념'으로 손을 잡은 이들보다) 굳건한 의리가 있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한국의 협동 사회는 이익이 눈앞에 있는데도 서로 연대하지 못하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 나는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협동조합에 맞춤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 역시 리더십을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로 꼽지는 않았지만, 협동조합 이야기마다 멋진 주인 공이 있다. 그들은 모두 요즘 유행하는 말을 빌리면 '혁신형 창업자'이자 새로운 리더십의 창조자다.

그 자신이 성공한 협동조합 리더십의 한 본보기인 아이쿱생협의 신성식은 말미의 대담에서 이 대목을 정확히 지적한다. "훈련된 경영자"가 없는 협동 조합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 한다. 하지만 그 협동조합에 맞춤한 리더십을 어떻게 키울지는 여전히 어려 운 문제다.

그러니 남다른 사명의식을 가지고 협동 경제를 들여다보기로 작정한 저자 가 다음에는 이런 작업도 한 번 해주면 좋겠다. "이런 리더가 협동조합을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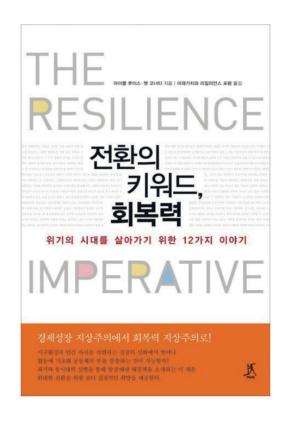


공으로 이끈다." 그런 책이 나오면 당장 나부터 정독하고, 우리 공장 식구 전 체랑 돌려서 읽어볼 생각이다. 물론 이 책도 이미 여럿에게 권했지만 말이다.

icoop

위대한 전환을 위한 회복력 이야기 —마이클 루이스, 팻 코너티,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따비, 2015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우리는 2015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를 통째로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세월호 사고, 메르스 확산과 공포, 북한 의 현존하는 도발, 사회적 이념 갈등, 사회·경제적 양극화, 청년실업의 심화, 지역경제의 약화, 낙후된 지역사회, 공동체 해체현상의 가속, 높은 가계대출, 높은 지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한국 사회는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 은 지난 시기 경제성장만이 한국 사회 존재의 모든 목표인양 사회의 모든 역

량이 경제성장을 위해 투여되었으며, 그 결과 고도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 루었다. 위에서 열거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은 경제성장 지상주의에서 비롯 된 것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재난과 유럽발 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국가 간 이익을 위한 처절한 전쟁 등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하며 광범위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의 저명한 행정학자인 윌 다브스키(Wildavsky)가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위기에 대한 대응 방법 역시 알려지지 않은 경우 예방적(prevention) 전략보다는 회복적 (resilience)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를 회복력이 강한 사 회로 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R*esilience Imperative*, 회복력 지상주의)에서는 경제성 장 지상주의에서 회복력 지상주의로 우리 사회가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사회-생태-경제의 각 영역에서 전환을 위한 노력과 사례 및 과정들을 설 명한다. 경제성장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세대내 세대간 형평을 이루고,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민주주의와 사회연대경제, 공유생산 및 공유경제와 사회적금융, 지역경 제와 지역자치의 활성화,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과 지역재생, 지속가능 재생 에너지와 로컬푸드 사슬. 식량 주권의 회복 등 다양한 사회혁신운동의 지형 점들이 투영된 것이 사회-생태-경제적 궁극의 균형 경제이며, 전환을 위한 방향임을 밝힌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12가지 이야기'로서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은 총 12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궁극의 균형경제 와 회복력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여정과 그 의미로 ① 지역공동체와 지역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유재의 확보. ② 민주적 분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재창 출, ③ 협동조합은행과 공동체토지신탁 등 사회연대경제의 구축, ④ 인류와 지구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환경보전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개인의 부'와 '공동의 부'를 통해 시장과 화폐 및 사유화와 부채의 문제 등을 진단하고, 제3장에서는 금융자본에서 비롯된 부채의 문제를 넘어서는 무이자대출을 소개하고 이를 실현하고 있는 토지노동자본(JAK, Jord Arbete, Kapital) 협동조합은행의 사례를 소개한다. 한편한국 사회가 현재 첨예하게 겪고 있는 높은 지가와 부동산 문제의 전환책으로 공동체토지신탁(CLT, Community Land Trust) 이야기(제4장)가 있으며, 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자립사회를 위한 전략적 방법(제5장)이 논의된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 가기 위한로컬푸드와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공유자원의 공동 관리를 위한 알래스카어민들의 이야기(제6장)가 다루어졌으며, 지역공동체 경제를 위한 공동체기금과 금융에 기반한 마을경제 이야기(제7장)가 있다.

또한 상생의 금융 혁신을 위한 공동체은행과 공동체주식 이야기(제8장), 지역에서의 사회연대경제를 향한 노력과 지역공동체 기반 농업 그리고 식량 주권을 위한 비아캄페시나(제9장), 경제민주주의와 협동조합 자본(제10장), 전환을 위한 새로운 소유권으로서의 경제민주주의와 신탁운동 그리고 토지은 행협동조합(제11장)을 다루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성장 지상주의와 소비주의 문화를 넘어서는 사회-생태-경제적 변화를 위한 탐색(제12장)을 제안한다. 각각의 모든 장은 회복력 관점에서의 성찰을 함께한다.

사회의 위대한 전환(The great transition)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우리는 회복 력 지상주의를 위해 '나'에서 '우리'로 재결합하여야 하며, 상호부조하고 상호 의존하는 문화적 전환을 조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회복력과 협력(협동) 은 그것의 주춧돌이며 회복력의 일곱 가지 원칙과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원 칙을 비교한다.

회복력의 일곱 가지 원칙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원칙
1. 사회적·경제적·생태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속시킨다.	1. 구성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이 그들의 협력에 의해 자본 을 조달할 때, 이에 기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되, 다만 그 에 따른 보상은 없거나 혹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2. 모듈회를 유지한다. 연결시키되 종속적이지 않도록하고, 스스로를 변형시키고 적응시킬수 있는 독자적 수단을 확보 한다.	2. 각각의 협동조합은 지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외부 의 관계, 재정운용, 연합 등은 민주적 결정에 기초해야 한 다.
3. 현재 벌어지는 것들을 인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의사소통의 피드백 루프를 조직한다.	3. 지방,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 있어서 협동조합 간의 협 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4. 강한 네트워크, 관계망에서의 신뢰,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리더쉽 등 사회적 자본을 구축한다.	4. 협동조합은 지발적이며, 개방적이고, 조합원들에 대한 포 용력을 가져야 한다.
5. 학습, 실험, 지역적인 거버넌스의 경험, 변화 지향적인 혁 신에 초점을 둔다.	5. 협동조합은 교육, 훈련, 정보를 조합원, 선출직 대표자, 모 든 피고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협력의 본질과 그 편익 에 대한 교육이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미칠 수 있어야 한다.
6. 중첩성과 가외성이 거버넌스 체계속으로 체화되고, 공유 재산권과 사유재산권이 혼합되도록 정책을 입안한다.	6. 민주적 거버넌스란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합원 1인당 1표의 권리를 행사 한다.
7. 모든 생태적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고 대가를 지불한다.	7. 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의 편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이 원칙에다 지구의 생태환경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현재 공식적으로 논의중임)

올 3월 한국을 방문해 서울시청에서 회복력 강연과 『전환의 키워드, 회 복력」의 번역자들과의 모임에 참여한 공동저자 중 한명인 팻 코너티(Pat Conaty)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룬 수많은 책들이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점 들을 열거하고 정리한 후, 그에 대한 대책은 마지막 장에 두루뭉술하게 제시 하는 데 그쳤다. 개별 장(chapter)에서 문제점을 심층 있게 다루고, 그 해당 장 에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현실성있는 책을 쓰 고 싶었고, 그 책이 바로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이라는 책"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은 다수의 자발적 참여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 출판된 책이다. 2012년경부터 페이스북의 온라인 그룹 '리질리 언스 학습 네트워크(Network for Resilience Study)'의 느슨한 연대에 기초해 리 질리언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던 중, 사회적경제와 마을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활동가의 요구와 리질리언스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3년

하반기에 〈미래가치와 리질리언스 포럼〉이라는 오프라인 모임을 출범시켜, 지금까지 7차에 걸친 포럼을 진행해왔다. 그 포럼이 중심이 되어, 『회복력 지상주의(Resilience Imperative)』라는 책을 접하고, 번역을 통해 국내 소개의 첫발을 떼게 된 것이다.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은 150여 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초기 출판비용을 위한 자금을 모은 사례도 남겼다.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한국어판은 처음으로 원서의 언어인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번역된 책이다 (프랑스어판이 현재 준비 중임). 지난 3월, 팻 코너티는 한국에서 본인의 책이 은밀히(?) 번역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미래가치와 리질리언스 포럼〉의 가치와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은 최근에 출판된 그 어떤 사회경제적 현상을 진단한 책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지구 환경과인간 자신을 착취하는 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 협동에 기초해 공동체의 부를 창출하는 협동경제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협동에 기초한 전환책들의 핵심 공통점으로 사유화를 거스르는, 공유재 창출과 협동적 소유권 방식이 인류 공동선과 궁극의 균형경제로 가는 방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미래를 개척하는 우리들에게 행동의 지침서가 되는 정치경제학적인 책이다. 위대한 전환을 위한 일독을 권한다. iccop

현동조합과 지역사회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 클리블랜드 모델

한때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미국 오하이오(Ohio) 주의 클리블랜드 (Cleveland)는 1950년에 비하여 인구는 반 토막 났으며, 경제가 쇠퇴하면서 빈 곤률은 30%에 달하게 되었다.

2008년 클리블랜드재단(Cleveland Foundation), 오하이오직원오너십센터 (OEOC) 등 비영리조직, 민간기업, 클리블랜드 시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 살리기에 나섰으며 연평균소득 USD 18,000을 넘지 못했던 클리블랜드의 그렌빌 (Glenville)에 2009년부터 노동자협동조합인 세탁협동조합(ECL, Evergreen Cooperative Laundry), 에너지협동조합(E2S, Evergreen Energy Solutions), 그리고 그린하우스협동조합(Green City Growers Cooperative)을 차례차례 설립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클리블랜드 모델(The Cleveland Model)로 명명되어 혁신적 인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 안정화의 모델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이 에버그린협동조합 모델은 몬드라곤협동조합의 경험을 공부하여 그 영감 을 얻었으며, 특히 세탁협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업 인수를 위해 3년 동안 시 급당 50센트씩을 차곡차곡 모아왔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세 협동조합은 각각 친환경 세탁사업 및 태양광 설비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는 지역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에버그린협동조합(Evergreen Co-operative)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쇠퇴하던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출처: 커먼웰스(Common Wealth) 홈페이지 http://community-wealth.org/ 에버그린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evergreencooperatives.com/

필요한 요구를 협동으로 해결하는 얼라이드 커뮤니티협동조합

1998년 영국에서 시작한 타임뱅크(Time Bank)는 지역화폐로 이웃 간에 상호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준다면 필요할 때 그 시간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제도이다. 타임뱅크 제도로 필요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비공식 커뮤니티경제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설립된 미국 위스콘신(Wisconsin) 주의 데인카운티(Dane County)의 데인카운티타임뱅크(DCTB)는 이러한 서비스 및 기술 교환을 통해 보다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2,500명의 사람들과 조직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의 프로젝트 중 하나가 얼라이드 커뮤니티협동조합(Allied Community Co-op)이다. 이 사회적 다중이해자협동조합은 저소득층 지역 주민과 지역 파트너들이 함께 설립했으며,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과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라 설정한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의 소규모 사업 등 일자리 개발과 사회 교육 발전이다. 이들의 활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는 것 이외에 용기정원(container garden) 프로젝트, 지역극장 만들기, 에너지 프로젝트등 다양하다. 특히 이 지역에는 마지막 식료품점이 문을 닫은 후, 주민들이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주민들은 함께 식료품점에 가기 위해 차량을 함께 이용하거나 윌리스트리트협동조합(Willy Street Coop)과 연계하면서 지역에 주민 소유의 약국과 식료품점 설립을 고려 중에 있다.

출처: 데이카우티타임뱅크 http://www.danecountytimebank.org/

아프리카 협동조합의 커뮤니티에 기여를 알 수 있는 사례 연구 발표

코퍼라티브유럽(Cooperatives Europe)과 코퍼라티브칼리지(Co-operative College)가 아프리카 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영향력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1개의 아프리카 협동조합 모범 사례 소개를 통해 이들이 청년, 여성의 권한 강화 커뮤니티 발전, 사회 및 경제적 혁신을 가져온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아프리카의 눈부신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주민 4억 명이 아직까지 하루 USD 1.25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포스트 2015'에 발맞추어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개발정책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빈곤 근절과 통합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소중한 모델인 협동조합의 사례를 알리고자 했다.

그중 말리의 Dougourakoroni 면생산협동조합은 가뭄으로 땅콩 생산이 더이상 불가능하게 된 농촌 지역에 1996년 설립되었다. 2004년에는 공정무역인증을 취득했고, 고품질의 면 생산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조합원의 소득도 증가했다. 이후 야외에서 공부하던 커뮤니티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했으며, 이사회 등 여성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내부 규칙을 마련하는 등 성 평등에 기여하고 있다.

커피 산지로 유명한 콩고는 내전으로 시장을 잃고 많은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커피를 밀반출하기 위해 한밤중에 르완다 국경을 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낳고 있다. 2001년 274명으로 시작한 Sopacdi 커피 협동조합의 현재 조합원은 3,600명이며, 이중 20%은 대부분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다. 이 협동조합은 커피 판매 1kg당 4.5센트의 기금을 붙여 여성위원회나 여성들의 창업을 돕고 있다(현재까지 USD 15,000 기금 달성). 또한 40년만에 콩고 최초의 커피 세척장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우간다 Kigayaza 협동조합은 네크워킹, 교육 및 훈련 제공을 통해 청년 생산자들을 돕고 있으며, 가나에서는 Acca시장여성교통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짐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여성 상인 조합원들을 돕고 있다. icoop

출처:

ICA 홈페이지 www.ica.coop

보고서 전문 https://coopseurope.coop/sites/default/files/Building%20Inclusive%20Enterprises%20in%20Africa_ LR.compressed_0.pdf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발간도서

생협평론 2010 겨울 (창간호)

발간사

협동조합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병호 (iCOOP협동조합연구소장)

축사

인간의 본성, 그리고 생협 정태인 (경제평론가)

열린 생협 운동의 비전제시를 기대하며 이정주 (iCOOP생협연합회 회장)

길잡이

iCOOP생협, 세상에 말 걸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창간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김형미 (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이의남 (iCOOP고양생협 이사)

창간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이슈

웅포금강에서 사라진 이름들 송기역 (르뽀작가)

투기자본이 판치는 세상, 공정무역은 위태롭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아이쿱 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지구촌 협동조합 소식

한국의 공정무역 현황 김태연 (iCOOP생협개발부 무역팀장)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 : 경제 대안 운동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iCOOP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돌발논문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우리는 속고 있다, 속는 줄도 모르고 천안함언론검증위원)

서평

지성 이선옥 (구로생협 문화위원, 르뽀작가)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생협평론 2011 봄 (2호)

길잡이

먹을거리만 다루라고요?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근 (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 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 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허헌중 (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신성식 (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닫회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이슈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분숙 (르뽀작가)

복지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해부한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조합원 활동가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원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돌발논문

SSM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친서민 대 친대기업으로 양분되는 보도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평

『식품주식회사』

엄은희 (부산대학교 HK교수)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1 여름 (3호)

길잡이

협동조합 공부 제대로 한 번 해 봅시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정찬율 (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장종익 (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시스템

번역: 김연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丸山茂樹 (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좌담회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이슈

3.11 농협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건강보험 하나로운동, 참여할까, 말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저자)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돌발논문

에너지 위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팀장)

서평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

오귀복 (아산YMCA생협 이사)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1 가을 (4호)

길잡이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위해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김형미 (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오항식 (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회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권순실,김민경,이미연,장남희,김아영

이슈

협동의 정신과 평창 동계올림픽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생협법 개정,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된다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한국협동조합의 나아갈 길

홍광석 (국제협동조합연맹 분과기구담당)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ㄹ뿌

제2,제3의 용산, 명동3구역을 말한다

유채림 (소설가/홍대철거현장 '두리반' 주인)

서평

『복지국가 스웨덴-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허인영 (아이쿱구로생협 조합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2011 윤리적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작

우리는 사회공헌반이다!!!

류지형 (교사)

위대한 생산

김시은 (주부)

내가 공부하는 이유

유형석 (용인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생협평론 2011 겨울 (5호)

길잡이

협동조합님,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현동조합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권순실 (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박제선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조병민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정규호 (모심과 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이쿱생협

김대훈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번역: 김연숙 (아이쿱형동조합연구소)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北川太一(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좌담회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이슈

종편 방송을 어찌 할꼬?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르백

강은 가르지 않고 막지 않는다

서분숙 (르뽀작가)

돌발논문

지속 가능한 사회는 행복한 노동에서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서평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차형석 (시사인 기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2 봄 (6호)

길잡이

지금,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말해야 한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정원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김현대 (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그 성과와 과제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번역: 김연숙 ((재)아이쿱혐동조합연구소)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題

杉本貴志 (関西大学商学部教授)

신철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회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이슈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박범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

철도민영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몇 가지 것들

박흥수 (공공운수정책연구소 연구원)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르뽀

세 가지 물음 - 정리해고 철회투쟁 1000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이야기

연정 (르뽀작가)

돌발논문

소셜미디어로 그리는 소셜디자인

고재열 (시사IN 문화팀장)

서평

『민주주의 색깔을 묻는다』

조영훈 (청년유니온 조합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2 여름 (7호)

길잡이 탐욕이 아닌 필요에서 출발하는 협동조합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 (㈜아틀리에 대표이사/ 7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24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39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2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63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76 특별기고 - 살아있는 역사: 50년 전, 영국 북서부 로저 리차드슨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90 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Special Column** - Living History: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R C RICHARDSON 102 fifty years ago 좌담회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억, 조성돈, 김아영 112 이슈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 1년, 그 현장을 가다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122 세계평화는 강정에서부터! 133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44 돌발논문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다 송명훈 (리셋 KBS뉴스 기자) 145 서평 이창근 (쌍용자동차 해고자) 『자본주의, 그 이후』 154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159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2 가을 (8호) 길잡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독자를 기다리며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 의 만남 신효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7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 (『몬드라곤의 기적』저자) 19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김아영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원칙과 실천전략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31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현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 (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40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57 연구기획팀장)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 (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72 좌담회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86 이슈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 -세종대 생협을 지키기 위한 싸움 문효규 (세종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102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앞두고 김대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노동자 협동조합을 생각한다 대외협력팀장) 113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21 르백 안미선 (르뽀작가) 농민의 꿈 122 이계삼 (765kV 송전탑 반대 故이치우열사 돌발논문 분신대책위 사무국장)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134 서평 이정주 (쿱스토어 대표) 『협동조합, 참 좋다』 146 현동조합소식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축하하며 진행된 다양한 기념행사 149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생업평본 2012 거울 (9호)		
길잡이 협동조합시대, 자금 조달이라는 걸림돌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7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조혜경 ((사)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6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정원각 ((가)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28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댕신협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42
좌담회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기노채, 김대훈, 민앵, 조향숙, 김아영	56
이슈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연대, '청년연대은행(준)'	조금득 (청년연대은행 추진위원장)	73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김남주 (변호사)	84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95
르뽀 아직, 거기 그들이 있다	이혜정 (기록노동자)	96
돌발논문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태, 무엇이 문제고 얼마나 심각한가?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원/ 아이쿱 구미생협 조합원)	107
서평 『화폐전쟁』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117
협동조합소식 코퍼라티브 유나이티드 (The Co-operative United) 참가기	이주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121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	[작	126

생협평론 2013 봄 (10호) 길잡이 왜 협동조합 생태계인가?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7 현동조한 생태계에 대한 구상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20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김홍범 ((주)아이쿱축산 상무대행) 35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권미옥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52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항식 (아이쿱생협 쿱서비스 경영이사) 68 좌담회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현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80 이슈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몰려온다 박기용 (한겨레 사회부) 98 금융협동조합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육성하라 신철영 (아이쿱생협 클러스터추진위 106 집행위원장)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14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22 돌발논문 물의 공공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3 서평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최은미 (밝맑 도서관) 133 협동조합소식 세계 협동조합 생태계는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가 대외협력팀) 138 특별기고 신철영 (아이쿱생협 클러스터 아이쿱생협은 과연 성장신화에 빠졌나? 추진위 집행위원장) 141

생협평론 2013 여름 (11호) 길잡이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한 공부, 그 하나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생협법 •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번역: 이향숙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7 연구원 関 英昭(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46조를 철폐해야 김형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33 하는 이유 현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이재욱 (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46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53 이사장) 좌담회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64 이슈 아이쿱생협, 물 사유화 저지와 공공성 회복 운동에 이미연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참여홬동팀) 81 뛰어들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전아름 (보건의료노조 선전부장) 97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09 ㄹ뿌 서부이촌동, 오세훈의 단순한 아이디어로 황폐화 된 삶의 터전 윤형중 (〈한겨레〉 사회부) 110 기획연재 순천언론협동조합을 가다 120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서평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130 협동조합소식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4

높아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위상과 평가

생협평론 2013 가을 (12호)

길잡이 협동조합, 정부 지원을 요구해야 하나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협동조합 법·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들: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최유성 (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8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2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	34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강민수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43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54
좌담회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완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66
이슈		
못살겠다, 협동조합이다! -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기	이대희 (프레시안 협동조합팀장)	84
국정원 사태와 실종된 한국 민주주의	배성인 (한신대학교)	93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03
돌발논문 민영화의 덫,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104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중국집 '철가방'들이 일군 협동의 힘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18
영화평 〈위 캔 두 댓〉	정설경 (생협평론 편집위원)	130
협동조합소식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의 사회적 확산을 보장하는 일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4

생협평론 2013 겨울 (13호)		
길잡이 협동조합의 정체성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7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24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30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45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톺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 (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56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68
좌담회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80
이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과연 누구인가? -상수도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92
22조 원 퍼부은 4대강사업의 실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104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13
돌발논문 30년 후 기초연금,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의 절반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후퇴, 쟁점과 대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114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③ 이 학교 매점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27
서평 현명한 소비자로는 부족하다 『질병판매학』	민앵 (살림의료생협 이사장)	137
협동조합소식 전세계 협동조합들은 무엇을 고민하는가?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42
생협평로 과월호 목차		146

생협평론 2014 봄 (14호) 길잡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향해서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7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17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박 김성기 (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29 이사장)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43 좌담회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55 이슈 몬드라곤 파고르의 실패 이시즈카 히데오 (협동총합연구소 생명과 생활 주임연구원) 72 モンドラゴン、ファゴールの失敗 石塚秀雄 89 미디어 공공성 현황과 그 회복 가능성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107 아이쿱생현 만평 이동수 (만화가) 115 돌발논문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이선옥 (기록노동자) 116 르백 밀양, 보통 사람들의 싸움을 기억하라 희정 (르뽀작가) 129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④ 조합원이 주인 되는 방송, 4월1일 시작합니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37 서평 이웅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세계를 바꾼 과일의 운명: 바나나』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 148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현동조합소식

사회적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렛대가 되다

151



생협평론 2014 여름 (15호)		
길잡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불리는 것들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8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4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38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권 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54
좌담회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이야기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64
이슈		
규제 완화라는 재앙, 그리고 의료민영화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79
저성장시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유주택의 역할	변창흠(세종대학교 교수)	88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98
돌발논문 논습지의 중요성과 보전대책	주용기(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99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⑤ 삶의 질 높여줄 '우리의 집'을 구상하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16
서평 『가치를 다시 묻다』	신미정(구로생협 조합원)	126
협동조합소식 GMO 오염의 대가를 치르게 될 유기농 생산자들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0

생협평론 2014 가을 (16호)

길잡이 협동조합 교육, 절실한 이유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문영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8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2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금현옥 (군포e비지니스고등학교 교사)	39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박주희 (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53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김아영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박사과정)	72
좌담회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82
이슈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소비자 인증시대	박인자 (아이쿱인증센터 회장)	107
'유기농의 진실'이 놓친 진실들	김홍범 ((주)쿱스토어 광주전남 이사)	117
지하철 9호선을 협동조합으로?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130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41
돌발논문 농산물가격 폭등과 폭락, 그원인과 처방은 무엇인가?	이호중 (녀름 연구기획팀장)	142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⑥ 협동으로 함께 굽는 빵, 동네빵집 되살릴까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54
에세이 협동조합 역사: 로치데일협동조합을 다시 생각한다	R.C. 리처드슨 (영국 윈체스터대학)	165
Co-op History: Re-visiting the Rochdale Pioneers	R.C.Richardson (University of Winchester UK)	170
영화평 눈부신 순간에 대한 기록	주현숙 (독립영화감독)	175
협동조합소식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노력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80



생협평론 2014 겨울 (17호) 김잡이 성장앓이하는 모든 현동조한들에게 역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한국현동조합의 성장통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김대훈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8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윤주일 (쿠피협동조합 이사) 20 현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강민수 (쿱비즈협동조합대표) 32 김성오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41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크리스 콘포스 53 A Paradox Perspective (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좌담회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제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71 이슈 쌀 전면개방과 식량주권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92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아서 오영중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 104 돌발논문 세월호 참사만큼 심각했던 세월호 언론보도 참사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112 ㄹ뿌 잊지 않겠습니다 이하늬 (미디어오늘 기자) 124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32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⑦ 서민도 이용 가능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꿈꾸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33 서평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정원각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144 협동조합소식 김영미 협동조합의 상상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48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52 발간도서 168

생협평론 2015 봄 (18호)

길잡이

발간도서

고립을 넘어 함께하는 세상을 향하여	박종현 (변십위원상)	4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0
합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26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협동조합의 지형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톤	48 إ) 61
좌담회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75
이슈		
사람다움의 샘, 함께하기 : 세월호, 3·11, 그리고 생혐의 조합워들	김형미((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92
한·일 생협의 풀뿌리 교류의 궤적과 향후: 어려운 사회를 지지하는 중심은 '사람에게	시바 사나에(일본협동조합학회 부회장)	103
돌발논문 갑을 관계를 넘어서려면	김찬호(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121
르포 고맙데이 사랑한데이: 농축업 이주노동자와 아름다운 농부 고용주	공정경(아이쿱 시민기자)	130
아이쿱생협 만평	박해성(만화가)	141
기획 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⑧ 오래된 여관촌을 바꿔낸 청년들의 힘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142
서평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유정식(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세운(동작신협 전략기획팀)	151 156
협동조합 소식 협동조합의 역할, 어디까지일까?	김영미(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60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64

177

생협평론 2015 여름 (19호)

길잡이 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박종현(편집위원장)	4
특집 청년과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10 25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롱(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32 41
좌담회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김진회,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58
이슈		
크라우드펀딩법이란 무엇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하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이대중(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과장)	78
제도로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자	공정경(아이쿱 시민기자)	89
돌발논문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을 위한 충분조건들 :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전제	신성식(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EO)	97
르포 노동자협동조합 설립과 두 개의 시각 :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	송문강(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107
아이쿱생협 만평	박해성(만화가)	121
기획 연재 / 클린광산협동조합 폐업 위기에서 함께 살길을 찾다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122
서평 개인인가, 관계인가?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홍훈(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33
협동조합 소식 청년들을 위한 협동조합의 국제적인 노력 증가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7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42
발간도서		160

1. 단행본

제 목	발행년도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보고서』(염찬희 옮김)	201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운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획, 아너스 오르네 지음, 이수경 옮김)	2015
『사람을 탐하다: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인물탐구동아리 사람 엮음)	2015
『: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출판지원, 김창진 저)	2015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출판지원, 김창진 저)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 2014』(E-Book)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2013
「협동조합 운영 시례집」(서울특별시)	201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시람들.(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정광민 옮김)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니시무라 이치로 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2013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와카츠키 타케유키 저,이은선 옮김)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그물코)	2012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오리토이사오와카니시 케이코 저, 이은선 옮김)	2012
『후쿠이생협의 도전』(일본생협연합회 엮음, 이은선 옮김)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에드가 파넬 저, 염찬희 옮김)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김형미 외 저)	2012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김형미·김영미 옮김)	2011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2009
『생활속의 협동』(오시와 마리 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2008
『협동, 생활의 윤리႔(COOP생협연대)	2008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한국생협연합회 역)	2006
『새로운 생협운동』(사)한국생협연대 엮음)	2002

2. 자료집

제 목	발행년도
『협동조합 제(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의미와 사례』	2014
『제1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2014
(제 30회 후속교육) 『아이쿱생협 생산자에게 듣다』, (제35회 포럼) 『아이쿱생협 생산자 회원의 특성』	2014
(제33회 포럼 지료집) 『윤리적생산을 위한 iCOOP생협 생산자들의 활동과 비전』	2014
(제34회 포럼) 『2014 국제협동조합의날 기념 지속기능한 협동조합을 위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4
(GSEF 2014—COOP SESSION) 『협동조합 제(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의미와 사례』	2014
『CS지유대학 – 수강생 격언집』	2013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2년 활동 자료집』	2013
(제2s회 포럼 자료집) 『농지가격이 친환경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13
아이쿱생협 국제포럼((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제:2회 포럼) 『커뮤니티 활성회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2013
(제XI회 포럼 자료집) 『한일 생협의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발표』	2013
(2013년 시민사회포럼·한국NGO학회·(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기획 포럼) 「윤리적 소비와 시민사회」	2013
『2013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3
(제28회 후속교육 자료집) 『공정무역을 통한 인권회복 활동』	2013
(제2)회 후속교육 자료집) 『생활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분석』	2013
(제2)회 포럼 자료집) 『:COOP생협의 공정무역 현황과 방향』	2013
(출판기념세미나 및 제26회 포럼 자료집) 「일본생협 매장사업의 실제와 시사점, (현대일본생협운동소 사) 저자에게서 듣는 일본생협운동의 전망」	2012
『2011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2
(제25회 후속교육 자료집) "유럽 민중의 집과 지역 네트워크 iCOOP생협 경험연구 – 윤리적 소비와 지역생협 이사회 분석』	2012
(제26회 후속교육 자료집) 『ICA 총회 및 해외 협동조합 연수 보고회』	2012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2
『제8기 생협이카데미 자료집』	2012
(제24회 후속교육 자료집) 『2012 해외 협동조합 탐방의 열매를 나누다』	2012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포럼 자료집) 「한국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2012
(제27회 포럼 자료집) 『한국 사회의 물 공공성과 식수 안전성을 생각해 보다』	2012
(제24회 포럼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공동포럼)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2

.....

(한국사회포럼 2011) 『지속기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분이의 역할』	2011
(생협이카데미 제21차 후속교육 자료집) 『2011스웨덴, 덴마크 협동조합 — 북유럽 협동조합, 사회복지 기관 방문연수 보고』	2011
(제19회 포럼) 『아이쿱생협 직원 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2011
(제20회 후속교육 자료집) 『복지국가 스웨덴에 대한 이해』	2011
((재)COOP협동조합연구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한국생협운동의 기원과 전개』	2011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1년 활동 자료집	2011
『제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1
(제23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기본법해설』	2011
(제16회 후속교육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영국 방문 보고』	2011
(제23회 포럼) 『이이쿱생협의 새로운 생협운동 정책에 대한 평가』	2011
(제20회 포럼)『조합원 활동 활성회를 위한 지원 방향 모색』	2011
(제22회 포럼) FCOOP생협 공정무역 5년의 성과와 과제』	2011
(제21회 포럼)『조합원 활동가 교육 현황, 평가』	2011
(제14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시행령 시행규칙 내부지침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0
(제18회 포럼) 『이어 쿱생협 활동을 위한 이론 정리를 위한 토론』	2010
『아시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ICA/ICOOP 생협 워크숍』	2010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0년 활동 자료집.	2010
『제6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0
『2010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0
(제12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 생협법 이해』	2010
(제13회 후속교육 자료집) 『2010년 유럽영국몬드라곤 방문 보고회』	2010
(제13회 포럼) 『통화 운동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2010
(제14회 포럼) 『생협이 지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10
(제15회 포럼)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방향』	2010
(제16회 포럼) 『2009년 iCOOP생협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 결과 보고』	2010
(제17회 포럼) 『유통인증 5년에 대한 평가』	2010
『2009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09
(우리밀 1%의 기적 10%의 희망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자료집) 『생산과 소비의 상생연계를 통한 우리밀 산업화의 과제』	2009
「제5기 생협이카데미 자료집」	2009
(제12회 포럼 자료집) 『생협의 노동과 임금』	2009

(iCOOP생협 ICA가입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가입과 생협의 사회적책임』	2009
(제11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9
(제)회 후속교육 자료집) 「한국의 조세_재정 현황과 바람직한 방안」	2009
(COO)생활협동조합연구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윤리적소비의 방향과 실천적 모색-공정 무역을 통한 제3세계 지원과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통한 식량 지급률 제고를 중심으로』	2008
『제1회 대핵(원)생 윤리적 소비 논문공모 수상집.	2008
『제4기 생협이커데미지료집』	2008
(제8회 포럼 자료집)『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한국 경제와 생협 운동의 전망』	2008
(제)회 포럼 자료집) 『광우병 촛불 정국에서 생활 운동체인 iCOOP생협과 이후 과제』	2008
(제(회 포럼) 『새로운 대안운동으로써의 사회적경제와 생협운동』	2007
(제:화-포럼-자료집) 『우리 밀 생산과 소비 운동의 성과와 이후 과제』	2007
『제3기 생협이카데미 자료집』	2007
(COOP협동조합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일 생협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7
(제4회 포럼 자료집)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의 시례와 향후 과제』	2007
(COOP생협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COOP생협 10년의 시업과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	2007
(제(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2007
(제4회 생협이카데미 후속교육 자료집) 『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	2007
(제7회 포럼 자료집) 『COOP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	2007
(제1회 포럼 자료집)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	2006
『제:기 생협이카데미 후속교육 자료집』	2006
『제:기 생협이카데미 자료집』	2006
「제2기 생협이카데미 자료집」	2006
(출판기념 토론회 자료집) 『생협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2006
『생협에서 공정무역이 갖는 의미와 방향』(제:회 포럼 자료집)	2006
『한국 사회의 식문화 현황과 문제점 – 식육법의 필요에 대하여,(제2회 포럼 자료집)	2002
(제10회 포럼 자료집) 『람사르총회와 논습지 보전의 필요성과 과제 전망』	2002

3. 연구보고서

제 목	발행년도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7) 『핀란드 S그룹 비식품 부문 시업모델과 조합원 제도: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3년이경수 역)	2015
(기획연구과제 2015-03) 『이어쿱생협 통계 2014』(지민진 연구원)	201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6) 『핀란드 S그룹 사업모델: 식품 부문』(이경수 역)	2015
(0)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05) 『핀란드 협동조합 운동과 SOK 역사: 핀란드 소비지협동조합 탐구~1,(이경수 역)	2015
(0)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04) 기후변화와 소비지협동조합: 도전에 앞서 나가기 (이경수 역)	201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13)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이경수 엮음)	2015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2015-(12) 2014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 만족도 조사(손범규)	2015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 2015-01) iCOOP생협 생산자 회원의 특성-iCOOP 생산자회 정회원 조사 2014년도(정은미)	201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지협정과 식품: 소비지협동조합의 시각 (이경수 역)	201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1)사회연대경제의 포스트 2015 개발의제 권고(이경수 역)	201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12)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의 도전: TESSE 입장보고서』 (이경수 역)	201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11) 『협동조합과 지속기능발전: 포스트 2015 논의에 대한 기여』 (이경수 역)	2014
(기획연구과제 2014-(12) 『생협의 사회 가치 2014 이이쿱생협을 대상으로』(이향숙·이문희)	2014
(생활과 동향 2014-03) 『밀레니엄 세대에 동기부여하기 -06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1(손범규)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10) 『미국의 노동자 협동조합: 규모를 향해서2』 (이경수 역)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9) 『미국의 노동자 협동조합: 규모를 향해서1』 (이경수 역)	2014
(생활과 동향 2014—(12) 『일본의 유기농업 인증제도의 시사점—참가형인증시스템의 의의』 (지민진)	2014
(생활과동향 2014-0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하기』 (손범규)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8) 「사회연대경제: 해방과 재생산 사이에서」(이경수 역)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477)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이경수 역)	2014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 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UK 연수보고서』(서진선)	2014

(기획연구과제 2014-02) 『생협의 사회 가치 :2014 이이쿱생협을 대상으로』(이향숙)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12)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기능발전의 도전: TFSSE 입장보고서』 (이경수 역)	2014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획연구과제 2013-0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 만족도 조사』 (손 범규)	2014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지민진·최은주)	2014
(연구원 리포트) 『홋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이향숙)	2014
(이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1) 『협동조합 조합원과 운동』 (이경수 역)	2014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12) 「무지개 깃발과 국제협동조합의 날 기원, (이경수 역)	2014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3) 『위기 동안 이탈리아 협동조합』 (이경수 역)	2014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4) 『대규모 협동조합 사업체의 거버넌스(1)』 (이경수 역)	2014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모음집), 『이론』 『시례』 『거버넌스』 (이경수 엮음)	2014
(기획연구과제 2014-0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엄은희)	2014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장상환)	2013
(기획연구과제 2013-02) 『2012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염찬희·손범규· 지민진)	2013
(생활과 동향 1호)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발표』 (지민진)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 동향 11-2) 『소비자 협동조합 인수 시도에서 얻는 이론적, 실용적 함의』 (이경수 역)	2013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15-1) 『노동자 회생기업 현황과 관련 연구』(이경수 역)	2013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14-1) 『노동자 회생기업 현황과 관련 연구』(이경수 역)	2013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이경수 역)	2013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12-1)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관여: 조합원에서 출발해 지역사회 이익을 향해.(이경수 역)	2013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12-2) 『이론과 실제에서의 협동조합 회사』(이경수 역)	2013
(아이쿱해외협동조합 연구 동향 11-1) 『규모화 vs. 참여: 협동조합 딜레마?』(이경수 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 동향 9-1) 『식품부문의 협동』(이경수 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 동향 11-3)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역설 시각에서』 (이경수 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 동향 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이경수 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 동향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이경수 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7-1) 『사회연대경제 이해하기』(이경수 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9-2) 『자주관리돌봄: 협동조합접근방식,(이경수 역)	2013
(이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9-3) 『지역복지·어른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地域論社·高地域論社 と生協の役割)』(이경수 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8-1) 『몬드라곤 노동자 협동조합 이해』(이경수 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이경수 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3-2)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시례연구』 (이경수 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6-1) 『소비자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발전 접근법』 (이경수 역)	2012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장종익)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3) 『협동조합 녹색경제에 연료를 공급하다-캐나다 재생 에 너지 분야 보고서』 (이경수 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2) 『ICA 세계 협동조합 모니터』(이경수 역)	2012
(이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4-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조언 TipS』 (이경수 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3-3) 『유릭스 베네치아회의 최종보고서』(이경수 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5) 『로치데일의 의미: 로치데일 선구자조합과 협동조합 원칙』 (이경수 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3-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 (이경수 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이경수 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3)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1)』 (이경수 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2) 『2008년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이경수 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1) 『어떻게 사회적 혁신을 이룩할 것인가 정책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하여』(이경수 역)	2012
『일본 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협동조합의 출지금, 지본 회계 문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1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생협-의 동향」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1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장종익·김아영)	2011
『아이쿱생협의 교육 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정해진)	2011
『2009 ECCOP생협 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염찬희)	2010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협운동을 중심으로』(염찬희·엄은희·이선옥)	20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장원봉·하승우·임동현)	2010
『생협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김찬호)	2010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 으로』(이)()(급협동조합연구소)	2007